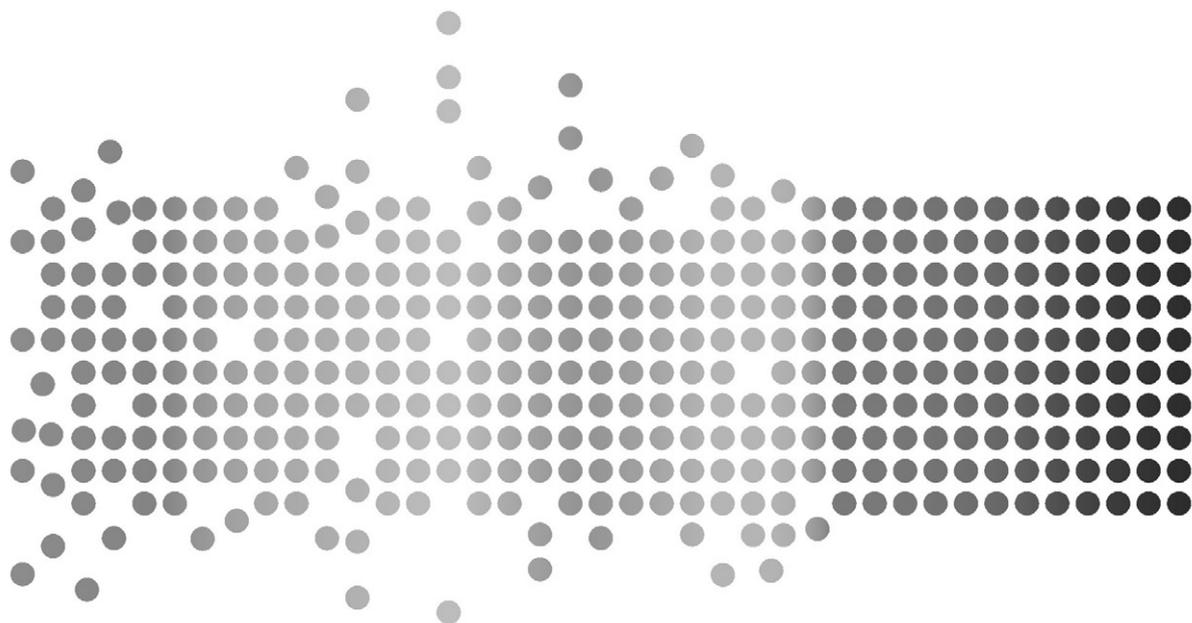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Policy on Lower-income Groups: For a Fair Korea

이태진 · 김진욱 · 박능후 · 이병훈 · 유진영 · 박형준 · 우선희



연구보고서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94-1 93330

머리말

2011년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 올 해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아마도 ‘공정’일 것이다.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지향을 천명하여 정부는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기 바빴고,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부뿐 아니라 학계와 일반국민들도 주목하는 단어가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며, 공정성 측면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더불어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현안이 되는 근로빈곤층 대책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공정성 가치의 등장배경, 관련 친서민정책 현황과 함께 사회철학적 이론과 정의론의 관점에서 공정사회 구현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3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4장은 공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근로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장은 사회역동성차원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마지막 6장에서 공정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국민들의 계층간·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태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외에서는 건국대학교 김진욱 교수와 경기대학교 박능후 교수,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가 참여하였고, 원

내에서는 유진영 전문연구원과 박형준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박사,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원내 강신욱 연구위원, 여유진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국민의식조사에 진행에 도움을 준 우선회 전문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친서민정책과 사회정의론	19
제1절 정부의 친서민정책	19
제2절 복지국가의 정의론	23
제3장 사회공정성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3
제1절 조사 개요	33
제2절 사회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6
제3절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45
제4장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69
제1절 분석 개요	69
제2절 근로계층의 빈곤 실태 및 추이	76
제3절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96
제5장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105
제1절 분석 개요	105
제2절 근로계층의 노동이행 실태	109

제3절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1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9
제2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124
참고문헌	129
부록	135

표 목차

〈표 3-1〉 모집단 대비 분석표본의 주요 특성별 분포	34
〈표 3-2〉 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	37
〈표 3-3〉 지난 10년간 사회 공정성의 개선에 대한 평가	38
〈표 3-4〉 정부의 공정대우에 대한 평가	39
〈표 3-5〉 공정성의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41
〈표 3-6〉 빈곤층의 가난 원인에 대한 평가	42
〈표 3-7〉 공정성의 평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44
〈표 3-8〉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	46
〈표 3-9〉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만족도	48
〈표 3-10〉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 (1순위)	50
〈표 3-11〉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 (2순위)	52
〈표 3-12〉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1순위)	55
〈표 3-13〉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2순위)	57
〈표 3-14〉 근로빈곤층 대상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60
〈표 3-15〉 근로빈곤층 대상의 정부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	61
〈표 3-16〉 빈곤층 지원을 위한 세금 증대에 대한 수용 의사	62
〈표 3-17〉 정부의 서민정책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64
〈표 4-1〉 연도별 최저생계비	73
〈표 4-2〉 소득지위 변화	87
〈표 4-3〉 가구원수별 빈곤 동태분석	89
〈표 4-4〉 가구주 성별 빈곤 동태분석	90
〈표 4-5〉 가구주 연령별 빈곤 동태분석	91
〈표 4-6〉 가구주 학력별 빈곤 동태분석	92

<표 4-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93
<표 4-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총위 1)	94
<표 4-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총위 2)	95
<표 4-10>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총위 3)	95
<표 4-11> 가구원수별 빈곤 상태	97
<표 4-12> 가구주 성별 빈곤상태	98
<표 4-13> 가구주 연령별 빈곤상태	98
<표 4-14> 가구주 학력별 빈곤상태	99
<표 4-15>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100
<표 4-16>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총위 1)	101
<표 4-1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총위 2)	102
<표 4-1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총위 3)	102
<표 5-1> 2008 ~ 2009년간 노동이행 유형별 발생 빈도	109
<표 5-2> 노동이행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112
<표 5-3> 노동이행 유형별 공적연금 수급 비율 (%)	113
<표 5-4> 노동이행 유형별 퇴직금·퇴직연금 수급 비율 (%)	114
<표 5-5> 노동이행 유형별 고용보험 급여 수급 비율 (%)	114

그림 목차

[그림 3-1]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우선순위49

[그림 3-2] 현재 추진중인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평가53

[그림 3-3]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와 예산지출 의견 ...59

[그림 4-1] 근로빈곤층 개념 구성도 (정태적 관점)71

[그림 4-2] 근로빈곤층 개념 구성도 (동태적 관점)72

[그림 4-3] 절대빈곤율77

[그림 4-4] 경제활동인구 절대빈곤율78

[그림 4-5] 비경제활동인구 절대빈곤율79

[그림 4-6] 취업근로자 절대빈곤율80

[그림 4-7] 미취업자 절대빈곤율80

[그림 4-8] 임금근로자 절대빈곤율81

[그림 4-9] 비임금근로자 절대빈곤율81

[그림 4-10] 상대빈곤율83

[그림 4-11] 경제활동인구 상대빈곤율84

[그림 4-12] 비경제활동인구 상대빈곤율84

[그림 4-13] 취업근로자 상대빈곤율85

[그림 4-14] 상대빈곤율85

[그림 4-15] 임금근로자 상대빈곤율86

[그림 4-16] 비임금근로자 상대빈곤율86

[그림 5-1]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보는 노동이동 유형107





Policy on Lower-income Groups: For a Fair Korea

This study begins by questioning what constitutes a fair society and how the center pragmatist policies on lower-income groups have been received among the people. The authors examine the conditions that should be met for a fair Korea, the problem of in-work poverty, which hinders fairness, and explore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authors look into how Koreans think about the problem of working poverty, analyze the state and dynamics of the working population, and discuss the effect of labor and welfare policies on people's transition from unemployment to the workforce. Based on the findings about the perception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income levels have of "fairness", this study attempts, from a broad perspective combining labor and welfare policies, to chart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s for Korea.



요약

- 현 정부는 위기 대응으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음.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패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언급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 사회”
- 한편 최근 대외적인 정치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불평등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소위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자주 접하게 됨. 또한 이러한 격차들이 다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공동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더욱이 변화된 사회여건과 다양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정규 비예측적 노동기회와 저임금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일컫고 있음.
- 공정성은 현 사회의 주요 이슈로서 계층·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추진의 전제조건이 됨. 공정한 사회 실현의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불평등의 완화와 빈곤의 감소이며, 그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근로계층의 증가가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빈곤문제 또한 우리사회 공정성의 위협요소이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여러 사회철학적 관점의 정의론과 복지정책의 관계성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현안인 근로빈곤층 대책에 주목하기로 함.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근로빈곤 문제와 대응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근로계층의 실태 및 변화 추이, 그리고 취업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복지정책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친서민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먼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국민들의 의식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 또한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문제와 관련하여 실증분석과약을 위해 본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와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자료를 횡단적·종단적으로 분석하였음.

○ 국민조사를 통해서도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근로계층의 빈곤의 특성과 추이, 경제활동 참여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들의 사회공정성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층과 비교하여 노동이행과정에서의 지원서비스의 효과분석을 통해 사회공정성을 평가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파악했음.

○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임.

– 전체 평균 값이 3점의 중간 값 이하인 2.72점에 그쳐 사회 공정성에 대해 대체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고·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응답으로는 ‘경제약자의 배려’(28.8%)와 ‘법치주의 정립’(2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그리고 ‘차이 인정과 관용’(4.3%)의 순으로 나타남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음.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지원정책에서 최저임금제,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으며,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지출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빈곤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증가구에 대한 절대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을 도출한 결과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빈곤율이 낮았으며, 취업근로자가 비취업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무자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가구원수·가구주 성별·연령·학력·종사상 지위를 선택하여 분석함.
 - 첫째, 연령별로 보았을 때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20대 가구주 가구와 60대 초반 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0년에 빈곤율이 더 악화됨.
 - 둘째, 학력별로 대부분 계층의 빈곤율이 개선되었으나,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일정하여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남.
 - 셋째,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임시직, 기타근로자(방문 판매 등), 실업자의 빈곤율이 악화됨.
 -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정책

은 일자리 창출이며, 일자리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공적 지원정책의 효과는 전체적인 빈곤을 완화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빈곤상태가 악화된 계층 즉, 20대 가구주 가구와 60대 초반 가구주 가구,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 중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 가구 등으로 특히 청년 가구주와 고학력 가구주에 대한 노동시장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임시직, 기타근로자(방문 판매 등), 실업자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과 복지의 결합으로써 고용지원과 소득지원을 양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이행노동시장이론 관점에서 서민층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함. 이를 위해 서민계층이 노동이행 시 실제 경험하고 있는 각종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노동이행이 일어난 3,623명이 이 기간 중 취업지원 서비스(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를 이용한 여부를 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몇몇 이동유형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10% 이하인 경우가 있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노동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노동이행을 전후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 고용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미가입자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적음.

-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가입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설계시 유의할 사항은 접근성에 대한 고려임.
- 각 노동이행을 전후하여 소득상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원활한 노동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교육훈련, 특히 취업 후 받는 기술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함.
- 또한 노동이행시 고용지원과 소득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보완을 통해 교육훈련과 취업 간을 오가는 노동이행과정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충방안으로는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고용서비스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함의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국민의식조사 결과 사회공정성과 계층별, 연령별,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특히 의식에서의 양극화 양상을 볼 수 있었음.
 -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에 정책기조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재확인되었고, 따라서 향후 서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정치적 이념성을 피하는 정책 추진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
- “맞춤형 친서민대책”과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제안필요
 -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생활여건 차이에 따라 상이한 평가와 선호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취약계층을 구성하는 서민집단을 세부적으로 분해·파악하여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처방을 마련하려는 이른

바 “맞춤형 친서민대책”을 입안·집행하려는 노력이 요망됨.

- 빈곤층 지원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지지의사(평균 3.21점)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복지논쟁과 관련해 조세저항에 대한 지적이 있던 것과는 상반된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음.

- 향후 납세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전제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존의 조건이며, 이는 공동체의 세대간·계층간 공정성 및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먼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의 제도화 및 상호신뢰에 기반한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임.

-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전 생애주기 위협에 대응가능한 유연안정성이 요구됨.

- 교육 및 훈련 투자를 격차없이 수행하고, 근로계층에 대해 교육, 훈련, 소득지원을 통해 직업전환의 안정적 보장 등 유연성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제도의 발전이 필요함.

- 계층별 위협에 대응가능한 기본생활 보장의 국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소득양극화, 빈곤율 증가, 불평등 지수 악화, 실업률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국가부문의 개입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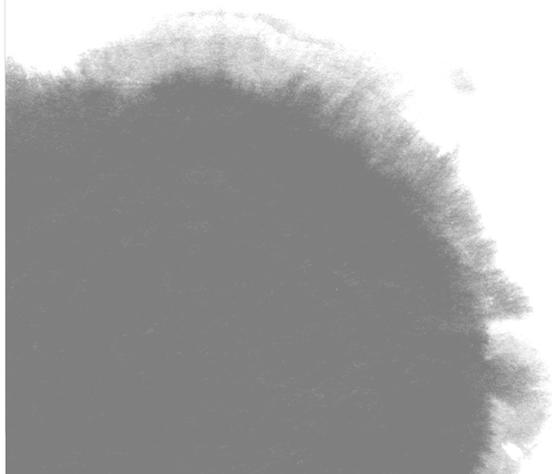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 노동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이 시급한 과제임.

-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공공의 개입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의 네트워크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의 생애기간 동안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의 비전과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심화 및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 문제가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친서민 중도실용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당시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친서민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하고 복지권리 의식은 높은 반면에 사회적 연대 책임의식은 낮게 나타났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포퓰리즘 논쟁으로 정책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는 친서민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친서민 중도실용의 화두와 달리,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있음직하다. 우리에게 공정성(fairness)이라는 단어는 익숙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하였다.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될 것이며, 사회정

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관적이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패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설명하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 공정한 사회 실현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정책이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대외적인 정치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불평등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소위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격차들이 다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이것이 합쳐진 공동체 속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더욱이 변화된 사회여건과 다양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정규 비예측적 노동기회와 저임금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일컫는다.

따라서 공정성이 현 사회의 주요 이슈로서 계층·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추진의 전제조건이 되며, 주요 핵심정책은 근로빈곤층 대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공정한 사회 실현의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불평등의 완화와 빈곤의 감소이며, 그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계층의 증가가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빈곤문제 또한 우리사회 공정성의 위협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며, 공정성 측면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현 사회의 주요 이슈인 공정성과 이러한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현안이 되는 근로빈곤층 대책에 주목한다. 구

체적으로는 국민들이 근로빈곤 문제와 대응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근로계층의 실태 및 변화추이, 그리고 취업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복지정책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친서민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알 수 있는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주요 방법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 한국 사회의 공정성 필요조건,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욕구 등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말에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근로빈곤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계층의 정태적·동태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계층별, 세대별, 연령별 빈곤 실태 및 변화추이, 그리고 노동이행과정에서의 노동복지서비스 정책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Logit 분석, 패널자료를 이용한 계층 변화 가계의 특성을 통한 순위 로짓분석(Ordered logit) 등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공정성 개념에 대한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친서민정책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문헌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근로계층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공정사회론의 등장배경과 함께 현정부가 주도한 관련 친서민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아울러 여러 사회철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론을 검토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향후 우리사회가 지향할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공정사회의 국정기조와 친서민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고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별,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4장은 공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구성과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근로상태에 따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태파악을 보다 심층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분석접근과 함께 빈곤의 반복적·지속적 특성 파악을 위해 종단적 접근으로도 분석하였다.

5장은 최근 노동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사회 역동성차원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였다. 서민층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민층이 노동이행 시에 실제 경험하고 있는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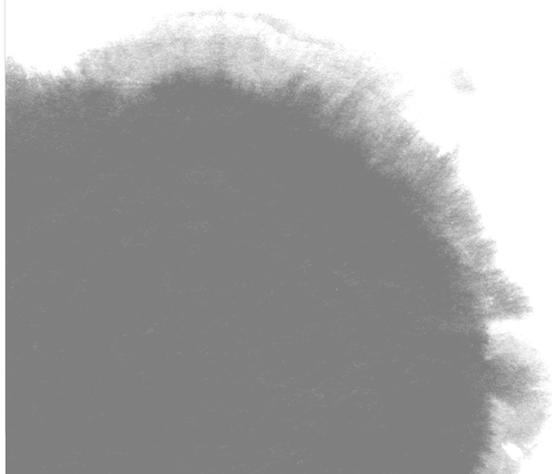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국민들의 계층간·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회공정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영역의 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

과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지를 점검하고 노동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02

친·민정색과 사회정의론





제2장 친서민정책과 사회정의론

글로벌위기와 함께 한국사회는 복지국가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핵심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렇게도 복지국가 담론들에서 각각의 분명한 사회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의주의적 고려에 의해 제기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본 장에서는 우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현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공정성과 관련하여 그 개념적 의미와 복지국가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복지국가는 어떠한 정의론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사회공정성에 대한 심층적 실태분석과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절 정부의 친서민정책

1. 국정운영의 가치 ‘공정한 사회’의 등장배경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대한민국정부, 2008)에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정책 측면에서 시장원리의 확립과 성장 과실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로 경제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사후적인 형평성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여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교육의 다양성 확대, 복지의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속되고 있던 중산층 몰락이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2009년 하반기 이후에 다소 회복국면에 들어섰지만 위기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 등이 빈곤층으로 하락하였으며 사회적 이동성도 크게 낮아져 서민의 생활여건에 대한 체감도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민심 회복을 위해 ‘친서민, 소통 강화’를 기조로 친서민중도실용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국정운영에서 소통과 통합을 전제로 한 친서민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의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공정한 사회’를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치로 제시하였다 (8.15 경축사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

‘친서민 정책’이란 공정한 사회를 향한 공동체적 패러다임에서 중산층 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주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자유’의 개념, 결과에 대한 평등보다는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는 ‘공정’의 개념,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책임’의 개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친서민 정책 추진전략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탈빈곤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빈곤탈락 방지, 개개인의 경제능력 회복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가계 및 영세자영자의 부채 경감을 위한 금융접근성 개선,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 등이다.

2. 정부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들

정부는 2011년 2월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¹⁾. 이는 각계 전문가들과 언론 등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결과이다²⁾. 사회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보수진보의 정책 갈등을 넘어서 선거민주주의에서 복지민주주의로 발전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주성, 2011).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취업 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학자금 대출지원은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정책목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택지결정 등의 과제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박승록 외, 2010). 현 정부의 정책과제들이 공급중심적 근로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서민에게 직접 복지를 제공하는 수요중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 과제인 근로빈곤 및 고용불안정 문제대응과 관련하여 정부는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하였는데 추진 대책의 내용은 크게 7가지 부문이다. ①사회안전망 및

1) 5대 추진방향은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이며, 8개 중점과제는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

2)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공동주최(2011. 3. 17),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공동주최(2011. 3. 9),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2011. 8. 3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행정안전부 통일부 접수(2010.12.1~ 2011. 2. 28), 『공감코리아-공생발전으로 하나되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 사이트 운영,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 및 TF구성

복지 확충(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근로자 우대 등), ②차별시정 강화(근로감독관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 심판대리인 제도 명문화),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③근로조건 보호(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감액 수습기간 제외, 도급업체 제재근거 신설,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 상용형 파견 유도, 표준계약서 제정, 비정규직 지도·점검), ④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공공기간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공시, 내일배움카드제 비정규직 포함 금액인상, 고숙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우대지원, 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훈련 기회 확대), ⑤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사내하도급 전환시 협의 의무,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 등), ⑥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⑦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노사의 자율적 노력 유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우수 사례 발굴 확산) 등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이러한 고용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아직 시행 전이거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비정규직 지원대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이 매우 협소하고, 그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이 낮으며 새롭게 추진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은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도입의 의의는 있지만 보다 높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의지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악화를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일자리 나누기 등’ 비상 고용확대 조치로 대처하거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공공부문의 취업자수 증가가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을 선도해야 하나 그 회복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의 공정성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의식(강신욱, 2011)을 조사하였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묻는 5점 척도 문항에 대하

여 계층갈등(3.92), 노사갈등(3.91), 환경갈등(3.47), 지역갈등(3.47)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계층별 그리고 노동시장참여과정의 사회갈등요인에 중점을 두고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친서민 정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향후 정부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화두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어 공정사회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회철학적 가치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친서민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복지수혜의 사회계층간 그리고 총체적인 복지규모의 세대간의 공정한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과제들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다음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철학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정의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철학적 논리들과 복지국가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복지국가와 정의론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정’은 ‘공평’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뜻하며, 공정성을 기증하는 기준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용어들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넓은 의미부터 정의, 공정, 공평 등의 순이며(윤평중, 2011), 정의의 내용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공정, 평등, 형평, 합리성 등³⁾이 있다.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교수의 저서인

3) 피터 코닝(Peter Corning)은 공정성을 평등(Equality), 공평성(Equity: 형평성), 상호주의(Reciprocity: 황금률)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함. 평등은 동등한 분배를 통해, 공평성은 ‘마땅한 보상’이나 ‘적절한 응보’로서 ‘공로’를 배려할 때 실현되며, 상호주의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윤리 원칙)으로 황금률과 같으며, 공정성은 만능의 공식이 아니므로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세 가지 범주를 통해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Corning, 2011).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사회정의”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정한 복지국가론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대부분이 특정한 ‘정의론’(Theory of justice)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 문제에 관한 각 사회철학적 이론들과 정의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공리주의(功利主義)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오랜기간 영미 사회철학의 지배적 조류로 자리잡아왔으며 자유주의와 더불어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을 지탱하는 양대 사회철학 조류의 역할을 해왔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 원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학자 센(Amartya Sen)은 공리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를 세 가지 즉, 복지주의(welfarism),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합계 순위 매기기(sum ranking)로 정리하였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것’ 또는 ‘옳은 것’(the right)은 사회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것(the good)’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복지국가에 친화적일수도 있고 대립적일수도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 대부분에 성립된다고 보며,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가능한 균등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길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급진적 평등주의와 강력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소수 빈곤층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다수 사회구성원의 복지총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서 소수 빈곤층이 감수하게 되는 복지감소분보다 여타 구성원들이 누리는 복지 증가분이 크다면 공리주의는 반(反)복지국가적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상황마다 복지총량을 계산하여 서로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복지국가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지지할 수 있는 사회철학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

2. 사회계약론: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정의론 논의를 주도해온 학자는 롤스이며, 그는 사회계약론⁴⁾의 전통에 따라 절차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다. 롤스의 정의란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이다. 그의 정의에 대한 원칙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절대적인 평등 분배를 의미한다. 이 원리에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가장 큰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녀야 하며”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다. 제2원칙은 배분과 사회경제정의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이 원리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다음의 두 조건에 한에서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의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된다는 조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제1원칙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사회적 이득의 불평등 배분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비슷한 능력과 의욕 및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직책과 직위와 관련하여 동등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 사이에는 우선성(priority)순위가 있는데, 제1원칙이 우선 충족된 다음 제2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롤스의 사회정의는 자유평등의 원칙, 기회평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로서 열화 되어 있으며, 차등의 원칙보다 평등의 원칙이 우선시 된다(김기덕, 2005).

4) 사회계약론이란 서구 계몽주의 사조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주로 국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조류이다. 즉,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 수립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신정완, 2002).

그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관철되고 난 후에 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정의로운 불평등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원칙이 구현되려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재(primary goods)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자유,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주와 직업선택의 자유, 공직의 권력과 특전, 책임있는 지위들, 소득과 재산, 자기존중의 사회적 기초 등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복지국가의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현대적 복지국가의 3대 구성원리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의 원리를 일관된 논리로 통합해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심연수, 1998). 그 이유는 그의 사회계약론적 접근법 자체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있으며, 복지국가와 친화성이 있는 차등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의 구성요소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적 복지국가를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사회철학적 기초를 제공해준다.

3. 권리자격론: 자유지상주의 관점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관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권리자격론(entitlement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확보된 소유권은 예컨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위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자발적 거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자는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정의(正義)는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주체들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최소국가)하고 시장경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교환(분배)정의를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은 가장 효율적 공간이며, 시장을 통한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출발조건과 교환과정이 공정할 경우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행위를 통해 모든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에서 시장의 기능을 규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수정(소유소득복지 등)을 거부한다.

노직의 논리는 반(反)복지국가적 함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지배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합법적 거래였던 것이 이후에는 불법적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서의 정의가 절대적인 정의 원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공동체주의

대표학자로는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월쩌(Michler Walzer), 샌델(Michael J. Sandel) 등이 있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정의(justice), 선(good), 덕(virtue) 등 현실의 윤리관념은 추상적 도덕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정통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윤리 관념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성이 중요하다고 본다(신정완, 2002).

공동체주의의 정의(正義)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정의를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에서 접근한다(Sandel, 2010). 또한 정의와 공동체는 양립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이라서 사회정의 없이는 공동체도 없고, 공동선도 없음을 주장한다.

분배정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배분의 대상과 방법을 지배하는 단일의 지배적인 배분 논리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치들의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사회적 이해’에 달렸으며, ‘가치의 사회적 속성’이 배분의 기준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부(富)는 자유교환에 의해, 의료·복지는 필요에 의해, 정치권력은 민주주의의 설득력과 시민의 지지에 의해, 처벌과 명예는 공과에 의한 자발적 인정에 의해, 교육은

기초적 교육이 제공된 후 재능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사회적인 재화와 가치를 동일하게 나누려는 단순평등의 전체주의적 함축성과 근시안성을 경계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군복무, 출산, 범죄자 처벌, 이민정책 등)까지 파고드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Sandel, 2010).

공동체 주의는 개인과 국가, 개인과 시장사이에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 등 중간수준의 제도와 영역이 존재하며 윤리관념의 형성과 실현에서 이러한 중간 수준의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것보다는 국가와 가족과 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귀속감을 갖는 소규모 공동체와 조직들이 사회복지의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복지수요자의 요구에 더 잘 부합되도록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개인들이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의 식 뿐 아니라 책임의식도 갖기 쉽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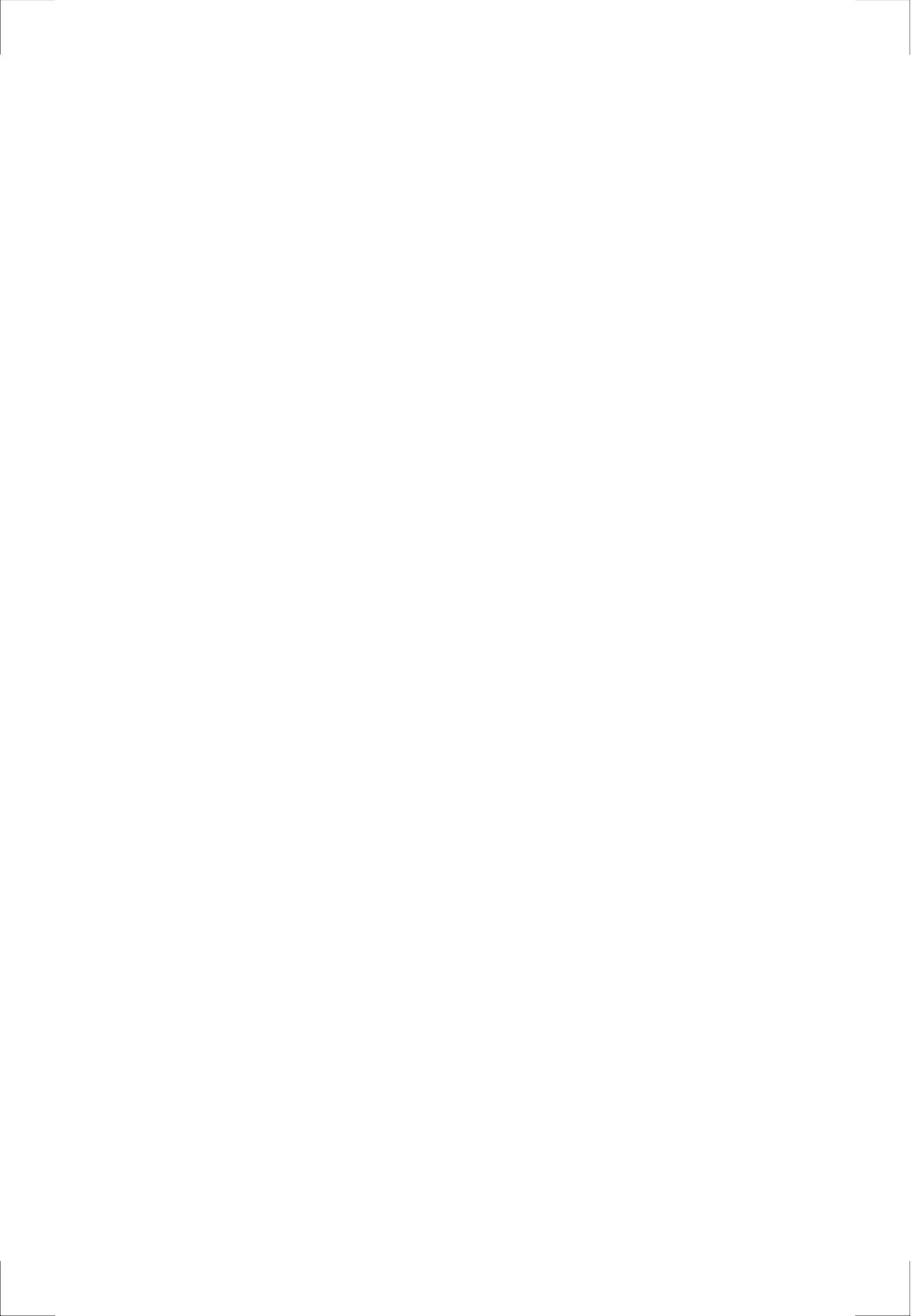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이렇듯, 공동체 주의는 복지국가의 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준다.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 등 중간수준의 공동체와 제도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 간에 연대(solidarity)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맥킨타이어의 ‘설화적 자아론⁵⁾’은 복지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한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사에서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협소한 공동체 내부의 차별과 불평등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논리로 작용하기 쉬워 복지국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사회철학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적어도 복지국가의 구성 원리는 국가라는 정치공동

5) 설화적 자아(the narrative self)이란 개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설화(이야기)로 구성하고 특정 행위의 도덕성 여부도 전체 이야기 속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체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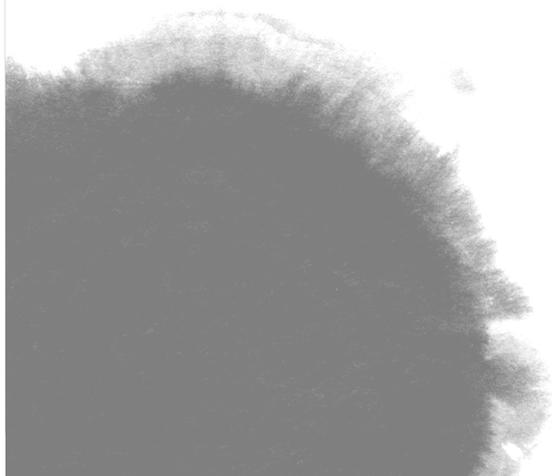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앞에서 각 사회철학 논리들의 정의론과 복지국가론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각각이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초를 정립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정의론적 기초로 롤스의 정의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롤스의 정의론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수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 평등, 정의, 복지, 민주주의, 연대 등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정의를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핵심가치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롤스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지지해주는 핵심적인 사회철학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정의(justice)이며, 이때 정의는 다양한 가치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롤스의 절차주의적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의 원리를 일관된 논리로 통합해주는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자유평등의 원칙, 기회평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 등의 서열화를 전제로 사회불평등 문제와 밀접한 근로빈곤문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친서민 정책은 빈부격차 및 사회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후적 비용을 예방적, 투자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정책목표를 갖는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사후적인 소득분배 개선보다는 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실태파악을 하기로 한다. 이에 친서민정책의 개선방안은 공정성의 전제조건인 기회의 평등 가치 구현을 위해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색이 필요하다.



03

사회공정성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제3장 사회공정성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본 장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공정사회의 국정기조와 친서민 정책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제고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조사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 인식과 현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특히 계층·세대간 공정성 인식의 요구에 대한 차이는 향후 공정한 사회의 실현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조사 개요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7월 15일 ~ 7월 30일의 기간에 실시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자료를 활용·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설문 문항은 선행의 유사 설문조사표(6)들을 참조하여 설계되었으며, 크게 사회 공정성과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2011년 「2011년 인구추계」에 의거하여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따라 층화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2,000명

6) 이번 설문조사의 설계과정에서 참조한 설문조사표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친서민정책 인식 및 욕구조사」(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전국조사」(2000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의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삼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7)

<표 3-1>은 분석표본의 주요 인적 특성 분포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201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해 확인되는 전국의 모집단과 비교하여 주요 인적 특성에서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표본과 전국 모집단은 학력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다소 표본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한이다. 구체적으로, 학력에서 분석표본은 모집단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상태의 경우에는 자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대표집되어 있는 한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매우 과소표집되어 있다. 분석표본의 추가적인 인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거주지가 대도시 45.2%, 중소도시 41.5%, 농어촌지역 13.4%로 분포하고 있으며, 월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11.2%, 100~200만원 13.4%, 200~300만원 18.3%, 300~400만원 23.0%, 400~500만원 11.8%, 500~600만원 8.6%, 600만원 이상 10.3%으로 구성된다. 또한, 분석표본의 정치성향은 보수 30.9%, 진보 29.0%, 중도 40.2%로 구분된다.

<표 3-1> 모집단 대비 분석표본의 주요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표본	모집단
성별	남성	992 (49.6)	48.9
	여성	1,008 (50.4)	51.1
연령	20대	344 (17.2)	17.9
	30대	420 (21.0)	21.2
	40대	448 (22.4)	22.3
	50대	376 (18.8)	17.9
	60대 이상	412 (20.6)	20.7
학력	중졸이하	348 (17.4)	25.1
	고졸	730 (36.5)	40.2
	전문대졸	154 (7.7)	11.2
	대학졸 이상	767 (38.4)	23.5
결혼 상태	미혼	476 (23.8)	24.2
	기혼 유배우	1,397(69.9)	63.1

7) 본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19를 나타내고 있다.

	기혼 무배우	127 (6.4)	12.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51 (27.6)	27.0
	임시/일용직	137 (6.9)	18.4
	고용주	21 (1.1)	3.9
	자영자/무급가족종사 자	465 (23.3)	14.3
	실업자	63 (3.2)	2.4
	비경제활동	763 (38.2)	34.2
거주 지	서울	421 (21.1)	20.8
	부산	143 (7.2)	7.3
	대구	97 (4.9)	5.1
	인천	110 (5.5)	5.4
	광주	58 (2.9)	2.9
	대전	59 (3.0)	3.0
	울산	40 (2.0)	2.2
	경기	472 (23.6)	22.7
	강원	60 (3.0)	3.1
	충북	59 (3.0)	3.1
	충남	80 (4.0)	4.2
	전북	68 (3.4)	3.7
	전남	72 (3.6)	3.6
	경북	113 (5.7)	5.5
	경남	127 (6.4)	6.4
	제주	21 (1.1)	1.1
	계	2,000 (100)	100.0

주: 모집단은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사회 공정성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의식을 분석함에 있어 조사표본의 인적 특성범주별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검정을 적용하여 분석하며,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이는 특성범주 중심으로 정리·제시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평가의식에 대해 미치는 인적 특성들의 영향 효과를 엄밀히 통제·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인의 속성을 감안하여 서열회귀분석(ordinal regression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어느 특성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사회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표 3-2>에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전체 평균값이 중간 값인 3점 이하인 2.72점에 그쳐 사회 공정성에 대해 대체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인적 특성범주로는 성별·연령층·경제활동지위·정치성향을 꼽을 수 있다. 남성이 여성 보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한편, 연령층에서는 장년노동 인구집단인 40-50대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지위에서는 흥미롭게도 사회공정성에 대해 고용주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2.19점)를 보이는 데 이어 자영자(2.56점)가 그 다음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고용주 및 자영자의 부정적인 평가태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높은 기대수준에서 비롯되는 박탈감, 또는 본인의 사업활동을 통해 겪는 불공정거래관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사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8) 하지만, 특임장관실이 2010년 9월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72.6%에 달하여 이번 조사의 34.6%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표 3-2> 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매우 그렇지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1 (10.6)	480 (24.0)	998 (49.9)	287 (14.4)	24(1.2)	2.72 (.88)
성 별 *	남성	136 (13.7)	226 (22.8)	475 (47.9)	142 (14.3)	13 (1.3)	2.67 (.93)
	여성	75 (7.4)	254 (25.2)	523 (51.9)	145 (14.4)	11 (1.1)	2.76 (.83)
연 령 *	20대	19 (5.5)	76 (22.1)	200 (58.1)	48 (14.0)	1 (0.3)	2.81 (.75)
	30대	38 (9.0)	89 (21.2)	233 (55.5)	57 (13.6)	3 (0.7)	2.76 (.83)
	40대	56 (12.5)	116 (25.9)	216 (48.2)	54 (12.1)	6 (1.3)	2.64 (.90)
	50대	46 (12.2)	97 (25.8)	179 (47.6)	52 (13.8)	2 (0.5)	2.65 (.89)
	60대 이상	52 (12.6)	102 (24.8)	170 (41.3)	76 (18.4)	12 (2.9)	2.74(1.00)
경 제 활 동 지 위 ***	상용직	50 (9.1)	117 (21.2)	306 (55.5)	72 (13.1)	6 (1.1)	2.76 (.83)
	임시 일용직	9 (6.6)	39 (28.5)	68 (49.6)	20 (14.6)	1 (0.7)	2.74 (.81)
	고용주	7 (33.3)	4 (19.0)	9 (42.9)	1 (4.8)	0 (0.0)	2.19 (.98)
	자영자	71 (15.3)	134 (28.8)	195 (41.9)	60 (12.9)	5 (1.1)	2.56 (.94)
	실업자	6 (9.5)	14 (22.2)	28 (44.4)	11 (17.5)	4 (6.3)	2.89(1.02)
	비경활	68 (8.9)	172 (22.5)	392 (51.4)	123 (16.1)	8 (1.0)	2.78 (.86)
정 치 성 향 ***	진보	85 (14.7)	170 (29.4)	250 (43.2)	68 (11.7)	6 (1.0)	2.55 (.92)
	중도	69 (8.6)	183 (22.8)	432 (53.7)	112 (13.9)	8 (1.0)	2.76 (.83)
	보수	57 (9.2)	127 (20.6)	316 (51.2)	107 (17.3)	10 (1.6)	2.82 (.88)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 .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하지만, <표 3-3>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평균 3.13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39.6%)이 악화되었다는 의견(23.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표본의 인적 속성에서는 결혼상태·경제활동지위·정치성향이 유의한 범주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기혼무배우>기혼유배우의 순으로 공정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경제활동지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사회 공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기할 만하다. 한편,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중도>진보의 순으로 공정성의 개선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난 10년간 사회 공정성의 개선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매우 악화됐다	약간 악화됐다	그저 그렇다	약간 개선됐다	매우 개선됐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3 (8.2)	302 (15.1)	744 (37.2)	699 (35.0)	92 (4.6)	3.13 (1.00)
결혼 상태 *	미혼	13 (2.7)	64 (13.4)	218 (45.8)	162 (34.0)	19 (4.0)	3.23 (.83)
	기혼 유배우	136 (9.7)	219 (15.7)	483 (34.6)	499 (35.7)	60 (4.3)	3.09 (1.03)
	기혼 무배우	14 (11.0)	19 (15.0)	435 (33.9)	38 (29.9)	13 (10.2)	3.13 (1.14)
경제 활동 지위 *	상용직	32 (5.8)	76 (13.8)	208 (37.7)	216 (39.2)	19 (3.4)	3.21 (.93)
	임시일용직	7 (6.6)	26 (19.0)	51 (37.2)	46 (33.6)	7 (5.1)	3.15 (.96)
	고용주	4 (19.0)	3 (14.3)	3 (14.3)	10 (47.6)	1 (4.8)	3.05 (1.28)
	자영자	60 (12.9)	79 (17.0)	147 (31.6)	159 (34.2)	20 (4.3)	3.00 (1.10)
	실업자	6 (9.5)	7 (11.1)	24 (38.1)	20 (31.7)	6 (9.5)	3.21 (1.08)
	비경활	54 (7.1)	111 (14.5)	311 (40.8)	248 (32.5)	39 (5.1)	3.14 (.97)
정치성 향 ***	진보	62 (10.7)	104 (18.0)	209 (36.1)	181 (31.3)	23 (4.0)	3.00 (1.04)
	중도	55 (6.8)	117 (14.6)	309 (38.4)	296 (36.8)	27 (3.4)	3.15 (.95)
	보수	46 (7.5)	81 (13.1)	226 (36.6)	222 (36.0)	42 (6.8)	3.22 (1.01)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4〉에서는 국민으로서 이행하는 책임과 권리에 비해 정부로부터 대우받는 것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2.99점의 응답을 보여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정 대우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 의견(25.2%)이 부정적 의견(23.1%)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조사표본의 인적 속성 중에서는 연령과 경제활동지위가 해당 범주들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층에서는 20대(3.08점)가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50대(2.88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활동지위에서는 고용주 및 자영자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 정부의 공정대우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매우 그렇지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6 (5.8)	345 (17.3)	1,035 (51.8)	456 (22.8)	48 (2.4)	2.99 (.85)
연령 *	20대	7 (2.0)	51 (14.8)	201 (58.4)	79 (23.0)	6 (1.7)	3.08 (.72)
	30대	20 (4.8)	68 (16.2)	233 (55.5)	90 (21.4)	9 (2.1)	3.00 (.81)
	40대	24 (5.4)	79 (17.6)	233 (52.0)	102 (22.8)	10 (2.2)	2.99 (.84)
	50대	39 (10.4)	62 (16.5)	187 (49.7)	82 (21.8)	6 (1.6)	2.88 (.92)
	60대 이상	26 (6.3)	85 (20.6)	181 (43.9)	103 (25.0)	17 (4.1)	3.00 (.94)
경제 활동 지위 ***	상용직	19 (3.4)	74 (13.4)	306 (55.5)	139 (25.2)	13 (2.4)	3.10 (.78)
	임시일용직	8 (5.8)	29 (21.2)	63 (46.0)	34 (24.8)	3 (2.2)	2.96 (.89)
	고용주	3 (14.3)	5 (23.8)	8 (38.1)	5 (23.8)	0 (0.0)	2.71 (1.01)
	자영자	49 (10.5)	86 (18.5)	229 (49.2)	94 (20.2)	7 (1.5)	2.84 (.92)
	실업자	4 (6.3)	8 (12.7)	34 (54.0)	13 (20.6)	4 (6.3)	3.08 (.92)
	비경활	33 (4.3)	143 (18.7)	395 (51.8)	171 (22.4)	21 (2.8)	3.01 (.83)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5>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고·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설문에 대해 ‘경제약자의 배려’(28.8%, 575명)와 ‘법치주의 정립’(28.4%, 567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회균등’(19.9%, 397명), ‘시민의식 제고’(18.0%, 359명), 그리고 ‘차이 인정과 관용’(4.3%, 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법치주의 정립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경제약자의 배려를 가장 많이 공정성의 전제조건을 꼽고 있다. 연령층에서는 20~30대는 경제약자의 배려를 공정성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집단은 법치주의 정립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에서 경제약자의 배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집단에서는 법치주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태의 하위범주별로는 기혼 무배우자와 미혼자가 경제약자 배려를 우선시하는 한편, 기혼 유배우자는 법치주의 정립을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경제활동지위의 경우 비경제활동과 임시일용직이 사회공정성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약자 배려를 가장 높게 선택하는 가운데, 여타의 집단 모두는 법치주의 정립을 중요시하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하위소득자일수록 경제약자 배려를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법치주의 정립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정치성향의 경우에는 보수층이 법치주의 정립을 공정성의 전제조건으로 우선시하는 한편, 중도층과 진보층은 경제약자 배려를 더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공정성의 전제조건으로 추가로 제기된 기타 의견에는 정치혁신 및 지도층의 정부패 근절(7명), 공무원 비리척결(3명), 도덕성 회복(3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5〉 공정성의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단위: 명, %)

		경제약자 배려	법치주의 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 제고	차이인정 관용
성 별	남성	239 (24.1)	339 (34.2)	184 (18.5)	180 (18.1)	38 (3.8)
	여성	336 (33.3)	228 (22.6)	214 (21.2)	179 (17.8)	48 (4.8)
연 령	20대	122 (35.5)	61 (17.7)	84 (24.4)	63 (18.3)	14 (4.1)
	30대	128 (30.5)	107 (25.5)	98 (23.3)	71 (16.9)	13 (3.1)
	40대	109 (24.3)	134 (29.9)	112 (25.0)	71 (15.8)	18 (4.0)
	50대	106 (28.2)	121 (32.2)	62 (16.5)	70 (18.6)	13 (3.5)
	60대 이상	110 (26.7)	144 (35.0)	42 (10.2)	84 (20.4)	28 (6.8)
학 력	중졸이하	114 (32.8)	103 (29.6)	38 (10.9)	64 (18.4)	25 (7.2)
	고졸	218 (29.9)	187 (25.6)	146 (20.0)	139 (19.0)	36 (4.9)
	전문대졸	44 (28.6)	43 (27.9)	32 (20.8)	31 (20.1)	3 (1.9)
	대학졸 이상	199 (25.9)	234 (30.5)	181 (23.6)	125 (16.3)	22 (2.9)
결 혼 상 태	미혼	158 (32.8)	105 (22.1)	109 (22.9)	92 (19.3)	14 (2.9)
	기혼 유배우	372 (26.6)	429 (30.7)	275 (19.7)	243 (17.4)	64 (4.6)
	기혼 무배우	47 (37.0)	33 (26.0)	14 (11.0)	24 (18.9)	8 (6.3)
경 제 활 동 지 위	상용직	148 (26.9)	161 (29.2)	120 (21.8)	107 (19.4)	14 (2.5)
	임시/일용직	43 (31.4)	31 (22.6)	29 (21.2)	23 (16.8)	11 (8.0)
	고용주	3 (14.3)	8 (38.1)	3 (14.3)	6 (28.6)	0 (0.0)
	자영자	123 (28.5)	150 (32.3)	89 (19.1)	78 (16.8)	15 (3.2)
	실업자	16 (25.4)	22 (34.9)	12 (19.0)	11 (17.5)	2 (3.2)
	비경제활동	242 (31.7)	195 (25.6)	145 (19.0)	134 (17.6)	44 (5.8)
거 주 지 역	대도시	256 (28.3)	263 (29.1)	179 (19.8)	167 (18.5)	32 (3.5)
	중소도시	247 (29.8)	232 (28.0)	159 (19.2)	141 (17.0)	43 (5.2)
	농어촌	72 (27.0)	72 (27.0)	60 (22.5)	51 (19.1)	11 (4.1)
가 구 소 득	200만원미만	157 (32.0)	134 (27.3)	59 (12.0)	108 (22.0)	27 (5.5)
	200~400만원	246 (29.8)	215 (26.1)	192 (23.3)	135 (16.4)	34 (4.1)
	400~600만원	105 (25.8)	130 (31.9)	91 (22.4)	68 (16.7)	10 (2.5)
	600만원 이상	47 (22.8)	68 (33.0)	39 (18.9)	39 (18.9)	10 (4.9)
정 치 성 향	진보	163 (28.2)	149 (25.7)	150 (25.9)	93 (16.1)	23 (4.0)
	중도	259 (32.2)	209 (26.0)	148 (18.4)	150 (18.7)	29 (3.6)
	보수	153 (24.8)	209 (33.9)	100 (16.2)	116 (18.8)	34 (5.5)
계		575 (28.8)	567 (28.4)	397 (19.9)	359 (18.0)	86 (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6>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난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응답을 정리·예시하고 있다. 응답자의 58.2%가 사회구조에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한편, 남은 41.8%가 태만·재능부족·불운 등과 같이 개인의 탓에서 비롯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응답자의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에서 저연령층과 고학력자 및 미혼자일수록 가난을 사회구조의 탓인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고연령층과 저학력자 그리고 기혼 무배우자일수록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흥미로운 대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지위에서는 고용주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빈곤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구조를 문제 삼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의 범주에서는 흥미롭게도 200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가난을 개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편, 200~600만원의 중위소득층은 사회구조의 탓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치성향의 경우에는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당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빈곤의 대물림(7명), 일자리기회 부족 및 복지 미비(5명)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3-6〉 빈곤층의 가난 원인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노력부족/태만	재능부족	불운	사회구조 탓
성별	남성	326 (32.9)	36 (3.6)	33 (3.3)	586 (59.1)
	여성	336 (33.3)	43 (4.3)	41 (4.1)	578 (57.3)
연령	20대	91 (26.5)	16 (4.7)	10 (2.9)	223 (64.8)
	30대	96 (22.9)	17 (4.0)	10 (2.4)	295 (70.2)
	40대	117 (26.1)	8 (1.8)	16 (3.6)	301 (67.2)
	50대	158 (42.0)	17 (4.5)	16 (4.3)	183 (48.7)
	60대 이상	200 (48.5)	21 (5.1)	22 (5.3)	162 (39.3)
	중졸이하	176 (50.6)	19 (5.5)	18 (5.2)	130 (37.4)
학력	고졸	255 (34.9)	29 (4.0)	29 (4.0)	412 (56.4)
	전문대졸	38 (24.7)	6 (3.9)	5 (3.2)	102 (66.2)
	대학졸 이상	193 (25.2)	25 (3.3)	22 (2.9)	519 (67.7)

결혼 상태	미혼	128 (26.9)	19 (4.0)	14 (2.9)	313 (65.8)
	기혼 유배우	464 (33.2)	54 (3.9)	50 (3.6)	810 (58.0)
	기혼 무배우	70 (55.1)	6 (26.0)	10 (7.9)	41 (32.3)
경제 활동 지위	상용직	146 (26.5)	12 (2.2)	14 (2.5)	376 (68.2)
	임시/일용직	40 (29.2)	3 (2.2)	7 (5.1)	87 (63.5)
	고용주	9 (42.9)	2 (9.5)	0 (0.0)	10 (47.6)
	자영자	170 (36.6)	15 (3.2)	16 (3.4)	260 (55.9)
	실업자	21 (33.3)	2 (3.2)	1 (1.6)	37 (58.7)
	비경제활동	276 (36.2)	45 (5.9)	36 (4.7)	394 (51.6)
거주 지역	대도시	302 (33.4)	39 (4.3)	30 (3.3)	523 (57.9)
	중소도시	267 (32.2)	27 (3.3)	31 (3.7)	495 (59.7)
	농어촌	93 (34.8)	13 (4.9)	13 (4.9)	146 (54.7)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08 (42.4)	23 (4.7)	29 (5.9)	226 (46.1)
	200~400만원	232 (28.1)	30 (3.6)	23 (2.8)	529 (64.1)
	400~600만원	125 (30.7)	14 (3.4)	13 (3.2)	251 (61.7)
	600만원 이상	75 (36.4)	11 (5.3)	8 (3.9)	112 (54.4)
정치 성향	진보	157 (27.1)	15 (2.6)	16 (2.8)	386 (66.7)
	중도	260 (32.3)	31 (3.9)	29 (3.6)	474 (59.0)
	보수	245 (39.7)	33 (5.3)	29 (4.7)	304 (49.3)
	계	662 (33.1)	79 (4.0)	74 (3.7)	1,164 (5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7>은 사회 공정성에 대해 개인속성들이 상호 통제된 가운데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열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모형1-1)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적 속성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연령, 고용주, 자영자, 정치성향, 빈곤 인식태도 및 가구원수로 나타났다. 연령은 비선형의 U자 형태로 사회 공정성에 대해 작용하며, 고용주와 자영자 및 가구원수는 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 뚜렷하게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반면, 가난을 사회구조 탓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 공정성의 변화에 대한 (모형 1-2)에서는 정치성향과 빈곤인식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보수·중도층이 진보층에 비해 현

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 탓으로 문제삼는 사람일수록 공정성이 날로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모형 1-3)에서는 남성과 보수층 및 중도층이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영자 및 고용주, 가구원수 그리고 빈곤원인 인식태도(사회구조 탓)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7〉 공정성의 평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사회공정성 평가 (모형 1-1)	공정성 변화 평가 (모형 1-2)	정부의 공정성 평가 (모형 1-3)
성별 (남성=1)		-.068(.482)	.020(.095)	.232(.0998)*
만나이	연령	-.064(.024)**	-.006(.024)	-.017(.024)
	연령제곱	.000(.000)*	-.000(.000)	.000(.000)
학력 (기준 =대졸이상)	중졸 이하	-.171(.165)	-.200(.161)	-.131(.166)
	고졸	-.132(.110)	-.137(.107)	-.034(.110)
	전문대졸	-.084(.170)	-.119(.166)	-.090(.171)
결혼상태 (기준 =기혼무배우)	미혼	-.151(.263)	-.170(.255)	-.232(.264)
	기혼유배우	.119(.209)	-.120(.203)	-.062(.210)
거주지 (기준 =농어촌)	대도시	-.223(.137)	-.120(.133)	-.161(.137)
	중소도시	-.162(.136)	-.121(.132)	-.078(.136)
종사상지위 (기준 =비경활)	상용직	.065(.132)	.117(.128)	.174(.132)
	임시일용직	.016(.182)	.000(.176)	-.058(.182)
	고용주	-1.121(.422)**	-.050(.419)	-.746(.429)†
	자영자	-.315(.136)*	-.190(.132)	-.387(.137)**
월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 이상)	실업자	.394(.266)	.227(.258)	.175(.266)
	100만원 미만	-.036(.239)	-.169(.232)	-.320(.240)
	100~200만원	-.032(.193)	-.177(.188)	-.114(.194)
	200~300만원	.009(.171)	-.234(.167)	-.073(.172)
	300~400만원	-.191(.162)	-.241(.158)	-.074(.163)
	400~500만원	-.150(.181)	-.026(.177)	-.143(.182)
500~600만원	-.176(.196)	-.128(.191)	-.107(.197)	
가구원수		-.080(.044)†	-.051(.042)	-.130(.044)**
정치성향 (기준=진보)	보수	.633(.116)***	.456(.113)***	.259(.116)*
	중도	.478(.106)***	.317(.103)**	.184(.107)†

빈곤원인 인식 (사회구조 탓=1)		-4.72(.092)***	-3.61(.090)***	-4.52(.093)***
임계치	매우 그렇지않다	-4.071(.669)***	-3.089(.648)***	-3.844(.672)***
	조금 그렇지않다	-2.521(.664)***	-1.841(.645)**	-2.222(.666)***
	그저그렇다	-.105(.662)	-.204(.843)	.116(.663)
	조금 그렇다	2.701(.692)***	2.416(.650)***	2.746(.677)***
-2배		4698.574***	5179.636***	4670.686***
Nagelkerke R ²		0.061	0.031	0.039
N		1,918	1,918	1,918

주: B추정값과 표준오차 명기: † p<.1,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제3절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표 3-8>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 분포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2.76점의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의하게 범주간 차이를 보여주는 응답자 속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연령층과 가구소득에서는 U자형의 평가태도를 보여주어 40대와 400~500만원 소득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과 정치성향에서는 고학력과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결혼상태와 경제활동지위에서는 기혼 유배우자와 고용주 및 자영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매우 적절치않다	어느 정도 적절치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9(12.5)	452(22.6)	873(43.7)	383(19.2)	43(2.2)	2.76(.97)
성 별 **	남성	152(15.3)	229(23.1)	402(40.5)	186(18.8)	23(2.3)	2.70(1.02)
	여성	97(9.6)	223(22.1)	471(46.7)	197(19.5)	20(2.0)	2.82(.92)
연 령 ***	20대	34(9.9)	64(18.6)	164(47.7)	72(20.9)	10(2.9)	2.88(.95)
	30대	58(13.8)	97(23.1)	194(46.2)	66(15.7)	5(1.2)	2.67(.94)
	40대	74(16.5)	120(26.8)	194(43.3)	56(12.5)	4(0.9)	2.54(.94)
	50대	46(12.2)	89(23.7)	151(40.2)	83(22.1)	7(1.9)	2.78(.99)
	60대 이상	37(9.0)	82(19.9)	170(41.3)	106(25.7)	17(4.1)	2.96(.99)
학 력 ***	중졸 이하	18(5.2)	83(23.9)	156(44.8)	81 (23.3)	10(2.9)	2.95(.89)
	고졸	74(10.1)	157(21.5)	336(46.0)	143(19.6)	20(2.7)	2.83(.95)
	전문대졸	20(13.0)	37(24.0)	68(44.2)	26 (16.9)	3(1.9)	2.71(.96)
	대졸 이상	137(17.9)	175(22.8)	313(40.8)	132(17.2)	10(1.3)	2.61(1.01)
결 혼 상 태 ***	미혼	51(10.7)	95(20.0)	226(47.5)	91(19.1)	13(2.7)	2.83(.95)
	기혼 유배우	193(13.8)	328(23.5)	592(42.4)	257(18.4)	27(1.9)	2.71(.98)
	기혼 무배우	5(3.9)	29(22.8)	55(43.3)	35(27.6)	3(2.4)	3.02(.87)
경 제 활 동 지 위 ***	상용직	79(14.3)	130(23.6)	248(45.0)	81(14.7)	13(2.4)	2.67(.97)
	임시일용직	14(10.2)	33(24.1)	52(38.0)	37(27.0)	1(0.7)	2.84(.96)
	고용주	5(23.8)	6(28.6)	8(38.1)	2(9.5)	0(0.0)	2.33(.97)
	자영자	69(14.8)	122(26.2)	191(41.1)	74(15.9)	9(1.9)	2.64(.98)
	실업자	10(15.9)	9(14.3)	28(44.4)	14(22.2)	2(3.2)	2.83(1.06)
가 구 소 득 ***	비경활	72(9.4)	152(19.9)	346(45.3)	175(22.9)	18(2.4)	2.89(.94)
	100만원 미만	16(7.2)	46(20.6)	97 (43.5)	58(26.0)	6(2.7)	2.96(.93)
	100~200만원	29(10.9)	53(19.9)	114(42.7)	60(22.5)	11(4.1)	2.89(1.01)
	200~300만원	36(9.8)	82(22.4)	171(46.7)	68(18.6)	9(2.5)	2.81(.93)
	300~400만원	68(14.8)	112(24.4)	192(41.8)	83(18.1)	4(0.9)	2.66(.97)
	400~500만원	34(14.4)	59(25.0)	106(44.9)	36(15.3)	1(0.4)	2.62(.93)
	500~600만원	30(17.5)	34(19.9)	73 (42.7)	27(15.8)	7(4.1)	2.69(1.06)
정 치 성 향 ***	600만원 이상	27(13.1)	54(26.2)	83 (40.3)	38(18.4)	4(1.9)	2.70(.98)
	진보	128(22.1)	152(26.3)	201(34.7)	85(14.7)	13(2.2)	2.97(.89)
	중도	84(10.4)	174(21.6)	384(47.8)	149(18.5)	13(1.6)	2.79(.92)
보수	37(6.0)	126(20.4)	288(46.7)	149(24.1)	17(2.8)	2.49(1.06)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9>에서 보여주듯이, 현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부정적 평가(평균 2.64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중(41.5%)이 만족한다는 비중(18.0%)보다 훨씬 많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속성으로는 성별·연령·학력·경제활동지위·가구소득·정치성향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남성이 여성 보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높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연령층과 학력에서는 40대와 고학력자(대졸 이상)가 가장 불만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지위에서는 일관되게 고용주와 자영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편, 흥미롭게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을 비롯하여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집단이 고소득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불만 수준을 보이는 한편, 400~500만원의 소득집단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불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이 그 적절성이나 집행 만족도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9〉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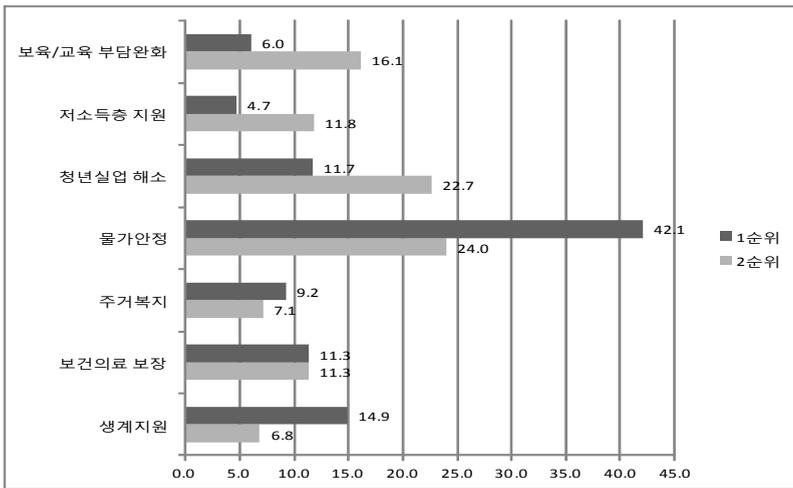
		매우 불만스럽다	어느 정도 불만스럽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7(13.4)	561(28.1)	813(40.7)	334(16.7)	25(1.3)	2.64(.95)
성 별 **	남성	154(15.5)	288(29.0)	371(37.4)	167(16.8)	12(1.2)	2.59(9.8)
	여성	113(11.2)	273(27.1)	442(43.8)	167(16.6)	13(1.3)	2.70(.92)
연 령 ***	20대	32(9.3)	97(28.2)	153(44.5)	59(17.2)	3(9)	2.72(.89)
	30대	67(16.0)	119(28.3)	178(42.4)	54(12.9)	2(5)	2.54(.93)
	40대	78(17.4)	145(32.4)	165(36.8)	58(12.9)	2(4)	2.47(.94)
	50대	50(13.3)	103(27.4)	138(36.7)	80(21.3)	5(1.3)	2.70(.99)
	60대이상	40(9.7)	97(23.5)	179(43.4)	83(20.1)	13(3.2)	2.83(.96)
학 력 ***	중졸 이하	24(6.9)	89(25.6)	160(46.0)	69(19.8)	6(1.7)	2.84(.88)
	고졸	79(10.8)	208(28.5)	295(40.4)	137(18.8)	11(1.5)	2.72(.94)
	전문대졸	22(14.3)	37(24.0)	73(47.4)	21(13.6)	1(0.6)	2.62(.92)
	대졸이상	142(18.5)	227(29.6)	285(37.2)	106(13.8)	7(0.9)	2.49(.98)
경 제 활 동 지 위 ***	상용직	88(16.0)	152(27.6)	218(39.6)	88(16.0)	5(0.9)	2.58(.97)
	임시일용직	13(9.5)	43(31.4)	56(40.9)	23(16.8)	2(1.5)	2.69(.91)
	고용주	4(19.0)	7(33.3)	8(38.1)	1(4.8)	1(4.8)	2.43(1.03)
	자영자	83(17.8)	139(29.9)	168(36.1)	73(15.7)	2(0.4)	2.51(.97)
	실업자	9(14.3)	15(23.8)	27(42.9)	9(14.3)	3(4.8)	2.71(1.04)
	비경활	70(9.2)	205(26.9)	336(44.0)	140(18.3)	12(1.6)	2.76(.91)
가 구 소 득 ***	100만원 미만	13(5.8)	61(27.4)	108(48.4)	37(16.6)	4(1.8)	2.81(.84)
	100~200만원	35(13.1)	65(24.3)	106(39.7)	51(19.1)	10(3.7)	2.76(1.03)
	200~300만원	41(11.2)	108(29.5)	147(40.2)	65(39.9)	5(1.4)	2.69(.94)
	300~400만원	67(14.6)	141(30.7)	182(39.7)	67(14.8)	2(0.4)	2.56(.93)
	400~500만원	38(16.1)	71(30.1)	96(40.7)	30(12.7)	1(0.4)	2.51(.93)
	500~600만원	26(15.2)	45(26.3)	69(40.4)	31(18.1)	0(0.0)	2.61(.95)
	600만원이상	35(17.0)	61(29.6)	69(33.5)	39(18.9)	2(1.0)	2.57(1.01)
정 치 성 향 ***	진보	138(23.8)	172(29.7)	192(33.2)	75(13.0)	2(0.3)	2.36(1.00)
	중도	87(10.8)	217(27.0)	363(45.1)	130(16.2)	7(0.9)	2.69(.90)
	보수	42(6.8)	172(27.9)	258(41.8)	129(20.9)	16(2.6)	2.85(.92)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시행해야할 정책에 대한 1-2순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림 3-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1순위와 2순위의 서민정책으로는

단연 물가안정을 꼽고 있어 최근 서민가계에 부담되고 있는 물가인상에 대한 걱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생계지원·청년실업해소·보건의료보장이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서민들에게 생계·일자리·의료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케 된다. 서민정책에 관련된 추가 의견으로는 소득분배정책의 강화, 세금공평성 확립, 빈곤층의 수급자상태의 정확한 파악과 지원행정 효율화, 공과금 부담 완화, 등록금 인하, 장년층 일자리대책, 저소득 자영업 지원, 대기업 독식 억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3-1]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0>과 <표 3-11>은 친서민정책 시행의 1-2순위에 대한 응답자의 속성별분포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친서민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1순위 정책 영역(<표 3-10> 참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응답자의 특성 조건에 관련되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생계지원정책에 대해 중졸이하 저학력자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그리고 기혼 무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한편, 보건의료 보장정책에 대

해서는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이 이채롭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결혼기의 30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와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400~600만원의 소득집단 역시 우선 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물가안정정책에 관해서는 여성, 50대 이상의 고령자,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 고용주가 다른 범주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20대 청년, 고졸이하, 미혼자, 실업자, 그리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60대 이상 및 50대의 고령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실업자, 그리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육비 부담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30~40대 연령층과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 그리고 고용주가 높은 관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친서민정책의 2순위 분야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표 3-1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10>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 (1순위)

(단위: 명, %)

		생계지원	보건의료 보장	주거복지	물가안정	청년실업 해소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육 부담완화
전체		298(14.9)	226(11.3)	183(9.2)	842(42.1)	233(11.7)	93(4.7)	120(6.0)
성 별	남성	149(15.0)	123(12.4)	109(11.0)	379(38.2)	117(11.8)	56(5.6)	56(5.6)
	여성	149(14.8)	103(10.2)	74(7.3)	463(45.9)	116(11.5)	37(3.7)	64(6.3)
연 령	20대	56(16.3)	40(11.6)	26(7.6)	140(40.7)	56(16.3)	10(2.9)	16(4.7)
	30대	67(16.0)	50(11.9)	59(14.0)	165(39.3)	20(4.8)	17(4.0)	42(10.0)
	40대	65(14.5)	45(10.0)	44(9.8)	192(42.9)	48(10.7)	18(4.0)	33(7.4)
	50대	41(10.9)	40(10.6)	30(8.0)	168(44.7)	61(16.2)	22(5.9)	14(3.7)
	60대이상	69(16.7)	51(12.4)	24(5.8)	177(43.0)	48(11.7)	26(6.3)	15(3.6)

학 력	중졸이하	69(19.8)	35(10.1)	20(5.7)	166(47.7)	31(8.9)	11(3.2)	15(4.3)
	고졸	103(14.1)	75(10.3)	68(9.3)	293(40.1)	106(14.5)	39(5.3)	45(6.2)
	전문대졸	20(13.0)	17(11.0)	15(9.7)	68(44.2)	17(11.0)	8(5.2)	7(4.5)
	대학졸이상	106(13.8)	98(12.8)	80(10.4)	315(41.1)	79(10.3)	35(4.6)	53(8.9)
결 혼 상 태	미혼	83(17.4)	54(11.3)	43(9.0)	191(40.1)	73(15.3)	17(3.6)	15(3.2)
	기혼 유배우	183(13.1)	157(11.2)	133(9.5)	599(42.9)	151(10.8)	72(5.2)	98(7.0)
	기혼 무배우	32(25.2)	15(11.8)	7(5.5)	52(40.9)	9(7.1)	4(3.1)	7(5.5)
경 제 활 동 지 위	상용직	78(14.2)	53(9.6)	63(11.4)	243(44.1)	52(9.4)	17(3.1)	43(7.8)
	임시/일용 직	24(17.5)	12(8.8)	13(9.5)	50(36.5)	17(12.4)	11(8.0)	10(7.3)
	고용주	1(4.8)	2(9.5)	3(14.3)	10(47.6)	2(9.5)	1(4.8)	2(9.5)
	자영자	61(13.1)	66(14.2)	48(10.3)	190(40.9)	48(10.3)	27(5.8)	24(5.2)
	실업자	11(17.5)	13(20.6)	4(6.3)	18(28.6)	9(14.3)	4(6.3)	4(6.3)
	비경제활동	123(16.1)	80(10.5)	52(6.8)	331(43.4)	105(13.8)	33(4.3)	37(4.8)
거 주 지 역	대도시	131(14.5)	103(11.4)	89(9.8)	392(43.4)	95(10.5)	44(4.9)	48(5.3)
	중소도시	132(15.9)	90(10.9)	80(9.7)	330(39.8)	107(12.9)	37(4.5)	50(6.0)
	농어촌	35(13.1)	33(12.4)	14(5.2)	120(44.9)	31(11.6)	12(4.5)	22(8.2)
가 구 소 득	200만원 미만	99(20.2)	57(11.6)	32(6.5)	200(40.8)	50(10.2)	27(5.5)	23(4.7)
	200~400만원	123(14.9)	88(10.7)	83(10.1)	341(41.3)	104(12.6)	26(3.2)	58(7.0)
	400~600만원	45(11.1)	50(12.3)	45(11.1)	178(43.7)	44(10.8)	22(5.4)	22(5.4)
	600만원 이상	21(10.2)	21(10.2)	18(8.7)	88(42.7)	29(14.1)	17(8.3)	12(5.8)
정 치 성 향	진보	77(13.3)	59(10.2)	53(9.2)	249(43.0)	67(11.6)	32(5.5)	39(6.7)
	중도	135(16.8)	99(12.3)	81(10.1)	321(39.9)	79(9.8)	36(4.5)	52(6.5)
	보수	86(13.9)	68(11.0)	49(7.9)	272(44.1)	87(14.1)	25(4.1)	2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1〉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 (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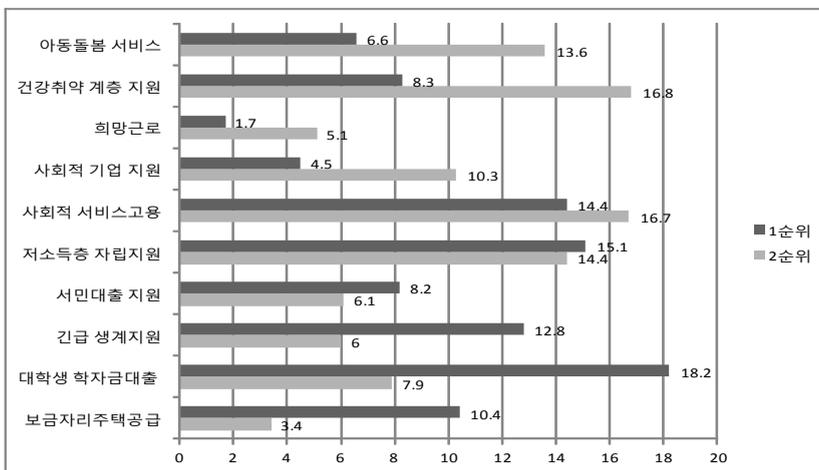
	생계지원	보건의료 보장	주거복지	물가안정	청년실업 해소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육 부담완화
전체	136(6.8)	225(11.3)	141(7.1)	479(24.0)	454(22.7)	235(11.8)	321(16.1)
성 별	남성	58(5.8)	95(9.6)	89(9.0)	245(24.7)	224(22.6)	133(13.4)
	여성	78(7.7)	130(12.9)	52(5.2)	234(23.2)	230(22.8)	102(10.1)
연 령 단 위	20대	23(6.7)	28(8.1)	20(5.8)	79(23.0)	105(30.5)	42(12.2)
	30대	29(6.9)	40(9.5)	33(7.9)	107(25.5)	70(16.7)	50(11.9)
	40대	30(6.7)	40(8.9)	47(10.5)	98(21.9)	98(21.9)	49(10.9)
	50대	19(5.1)	41(10.9)	21(5.6)	90(24.0)	109(21.9)	48(12.8)
	60대이상	35(8.5)	76(18.4)	20(4.9)	105(25.5)	72(17.5)	46(11.2)
	중졸이하	29(8.3)	50(14.4)	14(4.0)	89(25.6)	69(19.8)	41(11.8)
학 력	고졸	43(5.9)	92(12.6)	41(5.6)	181(24.8)	186(25.5)	77(10.6)
	전문대졸	10(6.5)	13(8.4)	15(9.7)	35(22.7)	28(18.2)	23(14.9)
	대학졸 이상	54(7.0)	70(9.1)	71(9.3)	174(22.7)	171(22.3)	93(12.1)
	미혼	28(5.9)	41(8.6)	38(8.0)	116(24.4)	131(27.5)	59(12.4)
결 혼 상 태	기혼 유배우	93(6.7)	159(11.4)	96(6.9)	328(23.5)	307(22.0)	161(11.5)
	기혼 무배우	15(11.8)	25(19.7)	7(5.5)	35(27.6)	16(12.6)	15(11.8)
	상용직	39(7.1)	53(9.6)	52(9.4)	127(23.0)	120(21.8)	63(11.4)
경 제 활 동 단 위	임시/ 일용직	14(10.2)	15(10.9)	9(6.6)	45(32.8)	24(17.5)	13(9.5)
	고용주	1(4.8)	2(9.5)	1(4.8)	5(23.8)	7(33.3)	2(9.5)
	자영자	29(6.2)	45(9.7)	41(8.8)	99(21.3)	94(20.2)	72(15.5)
	실업자	7(11.1)	7(11.1)	7(11.1)	18(28.6)	12(19.0)	1(1.6)
	비경제 활동	46(6.0)	103(13.5)	31(4.1)	185(24.3)	197(25.9)	84(11.0)
	대도시	54(6.0)	112(12.4)	70(7.7)	216(23.9)	211(23.3)	99(11.0)
	거 주 지 역	중소도시	60(7.2)	81(9.8)	52(6.3)	211(25.5)	194(23.4)
농어촌		22(8.2)	32(12.0)	19(7.1)	52(19.5)	49(18.4)	39(14.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3(8.8)	78(15.9)	26(5.3)	122(24.9)	77(15.7)	65(13.3)	77(15.7)
	200~400만원	54(6.6)	82(10.0)	52(6.3)	210(25.5)	200(24.3)	86(10.4)	137(16.6)
	400~600만원	23(5.7)	34(8.4)	33(8.1)	88(21.6)	98(24.1)	48(11.8)	80(19.7)
	600만원 이상	14(6.8)	26(12.6)	20(9.7)	43(20.9)	55(26.7)	28(13.6)	20(9.7)
	정치성향	진보	74(7.6)	58(10.0)	39(6.7)	129(22.3)	133(23.0)	80(13.8)
	중도	53(6.6)	94(11.7)	61(7.6)	197(24.5)	175(21.8)	86(10.7)	136(16.9)
	보수	39(6.3)	73(11.8)	41(6.6)	153(24.8)	146(23.7)	69(11.2)	91(1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그림 3-2]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1순위-2순위 분포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1순위의 친서민정책으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긴급생계지원, 보금자리주택공급의 순서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2순위 정책으로는 건강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아동돌봄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지원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현재 추진중인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평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2>과 <표 3-13>에서는 친서민정책의 1-2순위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의 속성별 분포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친서민정책의 1순위로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영역(<표 3-12> 참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응답자 속성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 ① 보금자리주택 공급: 30대, 전문대 졸
- ② 대학생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등): 20대, 고졸, 미혼, 고용주과 비경제활동, 200~400만원 가구소득
- ③ 긴급생계지원: 60대 이상의 연령층, 기혼 무배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
- ④ 서민대출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등): 기혼 무배우, 자영자, 400~600만원 가구소득
- ⑤ 저소득층 자립지원(EITC 근로장려세제, 희망키움통장): 50대, 실업자,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 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간병돌보미 등): 50대, 실업자, 4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 ⑦ 사회적 기업 활성화: 고용주,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 ⑧ 희망근로 프로젝트(공공일자리 창출): 60대 이상의 고령자, 임시일용직 및 실업자
- ⑨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졸 이하,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
- ⑩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 실시: 30대, 상용직

2순위로 중요시하는 친서민정책에 대한 응답자 속성별 분포는 <표 3-13>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12〉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1순위)

(단위: 명, %)

		보급자 리주택 공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긴급 생계지 원	서민대 출 지원	저소득 층 자립지 원	사회적 서비스 고용	사회적 기업 지원	희망근 로 프로젝 트	건강취 약 계층 지원	아동돌 봄 서비스
전체		208 (10.4)	364 (18.2)	255 (12.8)	163 (8.2)	302 (15.1)	288 (14.4)	89 (4.5)	34 (1.7)	166 (8.3)	131 (6.6)
성 별	남성	113 (11.4)	169 (17.0)	120 (12.1)	91 (9.2)	164 (16.5)	142 (14.3)	51 (5.1)	15 (1.5)	77 (7.8)	50 (5.0)
	여성	95 (9.4)	195 (19.3)	135(1 3.4)	72 (7.1)	138 (13.7)	146 (14.5)	38 (3.8)	19 (1.9)	89 (8.8)	81 (8.0)
연 령	20대	31 (9.0)	110 (32.0)	39 (11.3)	17 (4.9)	47 (13.7)	46 (13.4)	9 (2.6)	5 (1.5)	19 (5.5)	21 (6.1)
	30대	59 (14.0)	66 (15.7)	52 (12.4)	36 (8.6)	62 (14.8)	49 (11.7)	18 (4.3)	5 (1.2)	27 (6.4)	46 (11.0)
	40대	47 (10.5)	92 (20.5)	49 (10.9)	44 (9.8)	52 (11.6)	68 (15.2)	25 (5.6)	7 (1.6)	41 (9.2)	23 (5.1)
	50대	35 (9.3)	53 (14.1)	37 (9.8)	30 (8.0)	72 (19.1)	74 (19.7)	24 (6.4)	4 (1.1)	28 (7.4)	19 (5.1)
	60대 이상	36 (8.7)	43 (10.4)	78 (18.9)	36 (8.7)	69 (16.7)	51 (12.4)	13 (3.2)	13 (3.2)	51 (12.4)	22 (5.3)
	중졸 이하	30 (8.6)	41 (11.8)	66 (19.0)	28 (8.0)	56 (16.1)	45 (12.9)	10 (2.9)	4 (1.1)	45 (12.9)	23 (6.6)
학 력	고졸	75 (10.3)	171 (23.4)	79 (10.8)	54 (7.4)	110 (15.1)	108 (14.8)	31 (4.2)	17 (2.3)	52 (7.1)	33 (4.5)
	전문 대졸	26 (16.9)	19 (12.3)	22 (14.3)	14 (9.1)	17 (11.0)	21 (13.6)	7 (4.5)	3 (1.9)	14 (9.1)	11 (7.1)
	대학 졸이 상	77 (10.0)	133 (17.3)	88 (11.5)	67 (8.7)	119 (15.5)	114 (14.9)	41 (5.3)	10 (1.3)	54 (7.0)	64 (8.3)
	미혼	50 (10.5)	123 (25.8)	58 (12.2)	29 (6.1)	65 (13.7)	67 (14.1)	17 (3.6)	7 (1.5)	35 (7.4)	25 (5.3)
결 혼 상 태	기혼 유배 우	147 (10.5)	227 (16.2)	166 (11.9)	120 (8.6)	218 (15.6)	204 (14.6)	69 (4.9)	24 (1.7)	120 (8.6)	102 (7.3)
	기혼 무배 우	11 (8.7)	14 (11.0)	31 (24.4)	14 (11.0)	19 (15.0)	17 (13.4)	3 (2.4)	3 (2.4)	11 (8.7)	4 (3.1)

경제활동 동지위	상용 직	67 (12.2)	93 (16.9)	64 (11.6)	45 (8.2)	78 (14.2)	74 (13.4)	29 (5.3)	4 (0.7)	44 (8.0)	53 (9.6)
	임시/ 일용 직	16 (11.7)	22 (16.1)	16 (11.7)	7 (5.1)	22 (16.1)	23 (16.8)	7 (5.1)	7 (5.1)	9 (6.6)	8 (5.8)
	고용 주	1 (4.8)	8 (38.1)	1 (4.8)	0 (0.0)	3 (14.3)	3 (14.3)	3 (14.3)	0 (0.0)	1 (4.8)	1 (4.8)
	자영 자	49 (10.5)	69 (14.8)	61 (13.1)	50 (10.8)	72 (15.5)	72 (15.5)	22 (4.7)	7 (1.5)	42 (9.0)	21 (4.5)
	실업 자	7 (11.1)	4 (6.3)	8 (12.7)	5 (7.9)	13 (20.6)	13 (20.6)	3 (4.8)	2 (3.2)	6 (9.5)	2 (3.2)
	비경 제활 동	68 (8.9)	168 (22.0)	105 (13.8)	56 (7.3)	114 (14.9)	103 (13.5)	25 (3.3)	14 (1.8)	64 (8.4)	46 (6.0)
거주지 역	대도 시	101 (11.2)	160 (17.7)	113 (12.5)	64 (7.1)	133 (14.7)	150 (16.6)	44 (4.9)	12 (1.3)	78 (8.6)	49 (5.4)
	중소 도시	77 (9.3)	151 (18.2)	107 (12.9)	75 (9.0)	127 (15.3)	107 (12.9)	34 (4.1)	17 (2.1)	71 (8.6)	63 (7.6)
	농어 촌	30 (11.2)	53 (19.9)	35 (13.1)	24 (9.0)	42 (15.7)	31 (11.6)	11 (4.1)	5 (1.9)	17 (6.4)	19 (7.1)
	200 만원 미만	54 (11.0)	61 (12.4)	87 (17.8)	40 (8.2)	83 (16.9)	56 (11.4)	17 (3.5)	11 (2.2)	59 (12.0)	22 (4.5)
가구 소득	200 -400 만원	93 (11.3)	182 (22.1)	104 (12.6)	67 (8.1)	115 (13.9)	105 (12.7)	35 (4.2)	16 (1.9)	56 (6.8)	52 (6.3)
	400 -600 만원	41 (10.1)	73 (17.9)	34 (8.4)	39 (9.6)	60 (14.7)	74 (18.2)	17 (4.2)	3 (0.7)	30 (7.4)	36 (8.8)
	600 만원 이상	15 (7.3)	32 (15.5)	21 (10.2)	14 (6.8)	35 (17.0)	35 (17.0)	18 (8.7)	2 (1.0)	17 (8.3)	17 (8.3)
	정 치 성 향	진보	53 (9.2)	117 (20.2)	65 (11.2)	50 (8.6)	96 (16.6)	76 (13.1)	31 (5.4)	9 (1.6)	38 (6.6)
중도	102 (12.7)	157 (19.5)	99 (12.3)	56 (7.0)	109 (13.6)	115 (14.3)	29 (3.6)	13 (1.6)	71 (8.8)	53 (6.6)	
보수	53 (8.6)	90 (14.6)	91 (14.7)	57 (9.2)	97 (15.7)	97 (15.7)	29 (4.7)	12 (1.9)	57 (9.2)	34 (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3〉 친서민정책의 중요도 (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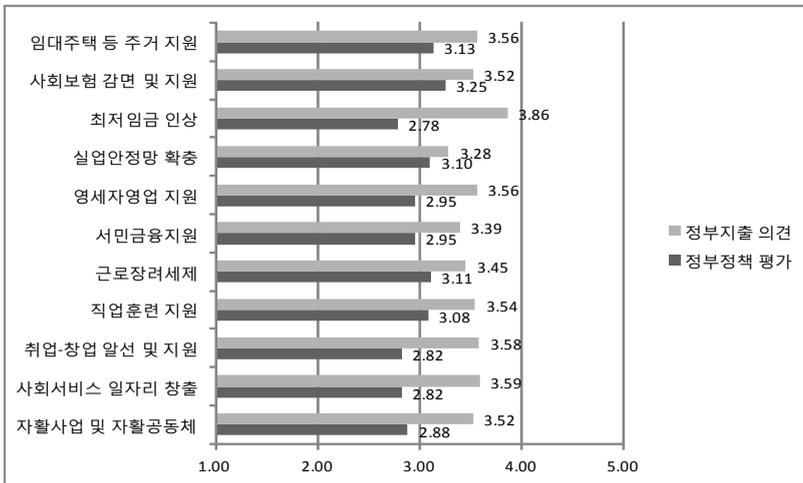
		보금 자리 주택공 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긴급 생계지 원	서민 대출 지원	저소득 층 자립 지원	사회적 서비스 고용	사회적 기업 지원	희망 근로 프로젝 트	건강 취약 계층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전체		68 (3.4)	157 (7.9)	120 (6.0)	122 (6.1)	288 (14.4)	333 (16.7)	205 (10.3)	101 (5.1)	335 (16.8)	271 (13.6)
성 별	남성	31 (3.1)	79 (8.0)	59 (5.9)	65 (6.6)	158 (15.9)	169 (17.0)	113 (11.4)	43 (4.3)	149 (15.0)	126 (12.6)
	여성	37 (3.7)	78 (7.7)	61 (6.1)	57 (5.7)	130 (12.9)	164 (16.3)	92 (9.1)	58 (5.8)	186 (18.5)	145 (14.4)
연 령	20대	7 (2.0)	31 (9.0)	24 (7.0)	19 (5.5)	63 (18.3)	52 (15.1)	50 (14.5)	18 (5.2)	43 (12.5)	37 (10.8)
	30대	23 (5.5)	38 (9.0)	24 (5.7)	28 (6.7)	51 (12.1)	68 (16.2)	34 (8.1)	10 (2.4)	46 (11.0)	98 (23.3)
	40대	13 (2.9)	36 (8.0)	21 (4.7)	31 (6.9)	76 (17.0)	76 (17.0)	52 (11.6)	24 (5.4)	68 (15.2)	51 (11.4)
	50대	10 (2.7)	31 (8.2)	25 (6.6)	26 (6.9)	39 (10.4)	77 (20.5)	42 (11.2)	20 (5.3)	73 (19.4)	33 (8.8)
	60대	15 (3.6)	21 (5.1)	26 (6.3)	18 (4.4)	59 (14.3)	60 (14.6)	27 (6.6)	29 (7.0)	105 (25.5)	52 (12.6)
	이상	14 (4.0)	22 (6.3)	30 (8.6)	19 (5.5)	47 (13.5)	49 (14.1)	23 (6.6)	24 (6.9)	87 (25.0)	33 (9.5)
학 력	중졸 이하	24 (3.3)	60 (8.2)	35 (4.8)	44 (6.0)	103 (14.1)	121 (16.6)	83 (11.4)	41 (5.6)	126 (17.3)	93 (12.7)
	고졸	4 (2.6)	12 (7.8)	9 (5.8)	8 (5.2)	24 (15.6)	33 (21.4)	18 (11.7)	3 (1.9)	18 (11.7)	25 (16.2)
	전문 대졸	26 (3.4)	62 (8.1)	46 (6.0)	51 (6.6)	114 (14.9)	130 (16.9)	81 (10.8)	33 (4.3)	104 (13.6)	120 (15.6)
	대학 졸 이상	15 (3.2)	50 (10.5)	31 (6.5)	26 (5.5)	85 (17.9)	73 (15.3)	64 (13.4)	19 (4.0)	59 (12.4)	54 (11.3)
결 혼 상 태	미혼	50 (3.6)	98 (7.0)	78 (5.6)	88 (6.3)	187 (13.4)	242 (17.3)	134 (9.6)	74 (5.3)	237 (17.0)	209 (15.0)
	기혼 유배 우	3 (2.4)	9 (7.1)	11 (8.7)	8 (6.3)	16 (12.6)	18 (14.2)	7 (5.5)	8 (6.3)	39 (30.7)	8 (6.3)
	기혼 무배 우										

경제활동 동지위	상용 직	24 (4.4)	55 (10.0)	33 (6.0)	34 (6.2)	83 (15.1)	100 (18.1)	50 (9.1)	22 (4.0)	67 (12.2)	83 (15.1)
	임시/ 일용 직	5 (3.6)	15 (10.9)	8 (5.8)	9 (6.6)	18 (13.1)	22 (16.1)	14 (10.2)	7 (5.1)	26 (19.0)	13 (9.5)
	고용 주	1 (4.8)	0 (0.0)	2 (9.5)	2 (9.5)	2 (9.5)	3 (14.3)	3 (14.3)	2 (9.5)	4 (19.0)	2 (9.5)
	자영 자	15 (3.2)	18 (3.9)	23 (4.9)	29 (6.2)	70 (15.1)	84 (18.1)	58 (12.5)	19 (4.1)	86 (18.5)	63 (13.5)
	실업 자	2 (3.2)	9 (14.3)	4 (6.3)	4 (6.3)	7 (11.1)	10 (15.9)	7 (11.1)	2 (3.2)	10 (15.9)	8 (12.7)
	비경 제활 동	21 (2.8)	60 (7.9)	50 (6.6)	44 (5.8)	108 (14.2)	114 (14.9)	73 (9.6)	49 (6.4)	142 (18.6)	102 (13.4)
거주지 역	대도 시	40 (4.4)	84 (9.3)	45 (5.0)	58 (6.4)	121 (13.4)	158 (17.5)	93 (10.3)	44 (4.9)	140 (15.5)	121 (13.4)
	중소 도시	24 (2.9)	64 (7.7)	62 (7.5)	49 (5.9)	127 (15.3)	127 (15.3)	80 (9.7)	39 (4.7)	144 (17.4)	113 (13.6)
	농어 촌	4 (1.5)	9 (3.4)	13 (4.9)	15 (5.6)	40 (15.0)	48 (18.0)	32 (12.0)	18 (6.7)	51 (19.1)	37 (13.9)
	200 만원 미만	18 (3.7)	36 (7.3)	31 (6.3)	35 (7.1)	65 (13.3)	66 (13.5)	41 (8.4)	34 (6.9)	108 (22.0)	56 (11.4)
가구 소득	200 -400 만원	25 (3.0)	60 (7.3)	53 (6.4)	46 (5.6)	124 (15.0)	152 (18.4)	85 (10.3)	39 (4.7)	124 (15.0)	117 (14.2)
	400 -600 만원	16 (3.9)	34 (8.4)	19 (4.7)	26 (6.4)	53 (13.0)	68 (16.7)	53 (13.0)	18 (4.4)	56 (13.8)	64 (15.7)
	600 만원 이상	9 (4.4)	20 (9.7)	11 (5.3)	12 (5.8)	37 (18.0)	39 (18.9)	20 (9.7)	5 (2.4)	32 (15.5)	21 (10.2)
	정 치 성 향	진보	22 (3.8)	52 (9.0)	28 (4.8)	33 (5.7)	85 (14.7)	100 (17.3)	57 (9.8)	37 (6.4)	96 (16.6)
중도	22 (2.7)	63 (7.8)	56 (7.0)	49 (6.1)	128 (15.9)	114 (14.2)	84 (10.4)	34 (4.2)	133 (16.5)	121 (15.0)	
보수	24 (3.9)	42 (6.8)	36 (5.8)	40 (6.5)	75 (12.2)	119 (19.3)	64 (10.4)	30 (4.9)	106 (17.2)	81 (1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그림 3-3]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예산지출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빈곤층 대상의 정책에서 사회보험 감면 및 지원(3.25점), 임대주택 주거지원(3.13점), 근로장려세제(3.12점), 실업안전망 확충(3.10점), 그리고 직업훈련지원(3.08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반면, 최저임금인상(2.78점),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2.82점),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지원(2.88점), 서민금융지원과 영세자영업지원(2.95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대체로 근로빈곤층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서 최저임금과 일자리대책을 중심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향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점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3.86점)이 단연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3.59점),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3.58점), 영세자영업 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3.56점), 직업훈련 지원(3.54점) 등의 순으로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와 예산지출 의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근로빈곤층 대상의 주요 정책영역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영역에서 향후 예산지출과 관련해 바라는 의견에 대해 상세한 응답분포를 <표 3-14>과 <표 3-15>에서 정리·예시하고 있다.

<표 3-14> 근로빈곤층 대상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매우 잘못함	잘못함	그저 그렇다	잘함	매우 잘함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87 (4.4)	421 (21.1)	1,154 (57.7)	316 (15.8)	22 (1.1)	2.88 (.7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10 (5.5)	565 (28.3)	920 (46.0)	380 (19.0)	25 (1.3)	2.82 (.84)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	98 (4.9)	565 (28.3)	960 (48.0)	356 (17.8)	21 (1.1)	2.82 (.84)
직업훈련 지원	53 (2.7)	379 (19.0)	961 (48.1)	565 (28.3)	42 (2.1)	3.08 (.81)
근로장려세제	47 (2.4)	339 (17.0)	998 (49.9)	576 (28.8)	40 (2.0)	3.11 (.79)
서민금융지원	79 (4.0)	507 (25.4)	865 (43.3)	524 (26.2)	25 (1.3)	2.95 (.85)
영세자영업 지원	80 (4.0)	465 (23.3)	955 (47.8)	475 (23.8)	25 (1.3)	2.95 (.82)
실업안정망 확충	74 (3.7)	391 (19.6)	852 (42.6)	633 (31.7)	50 (2.5)	3.10 (.87)
최저임금 인상	209 (10.5)	641 (32.1)	574 (28.7)	536 (26.8)	40 (2.0)	2.78 (1.02)
사회보험 감면 및 지원	38 (1.9)	266 (13.3)	928 (46.4)	704 (35.2)	64 (3.2)	3.25 (.79)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71 (3.6)	417 (20.9)	762 (38.1)	687 (34.4)	63 (3.2)	3.13 (.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5> 근로빈곤층 대상의 정부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많이 감축	조금 감축	현재수준 유지	조금 증대	많이 증대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31 (1.6)	417 (20.9)	762 (38.1)	687 (34.4)	63 (3.2)	3.52 (.8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7 (0.9)	133 (6.7)	681 (34.1)	987 (49.4)	182 (9.1)	3.59 (.78)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	16 (0.8)	114 (5.7)	737 (36.9)	962 (48.1)	171 (8.6)	3.58 (.76)
직업훈련 지원	20 (1.0)	102 (5.1)	804 (40.2)	916 (45.8)	158 (7.9)	3.54 (.75)
근로장려세제	20 (1.0)	114 (5.7)	952 (47.6)	782 (39.1)	132 (6.6)	3.45 (.74)
서민금융지원	35 (1.8)	161 (8.1)	927 (46.4)	740 (37.0)	137 (6.9)	3.39 (.80)
영세자영업 지원	14 (0.7)	100 (5.0)	817 (40.9)	899 (45.0)	170 (8.5)	3.56 (.75)
실업안정망 확충	43 (2.2)	177 (8.9)	1,065 (53.3)	614 (30.7)	101 (5.1)	3.28 (.78)
최저임금 인상	7 (0.4)	51 (2.6)	504 (25.2)	1,086 (54.3)	352 (17.6)	3.86 (.74)
사회보험 감면 및 지원	8 (0.4)	87 (4.4)	907 (45.4)	845 (42.3)	153 (7.7)	3.52 (.72)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13 (0.7)	112 (5.6)	827 (41.4)	843 (42.2)	205 (10.3)	3.56 (.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 응답 분포를 <표 3-16>에서 정리·예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증세에 대해 평균 3.21점의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복지논쟁과 관련해 조세저항에 대한 지적과는 상반된 조사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 속성별로 빈곤층 지원의 증세의 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범주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저연령층·고학력자·미혼상태·진보적 정치성향일수록 증세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지위에서는 흥미롭게도 실업자(3.59점)이 증세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3.39점)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와 임시일용직은 긍정적이

지만 다소 낮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가구소득의 수준을 살펴보면, 300~500만원의 중위소득자(3.33~3.34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사를 보이는 한편,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2.83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중졸이하의 저학력이라면 서 기혼 무배우의 상태로서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생활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자연히 세금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응답자들이 빈곤층 지원의 증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표 3-16〉 빈곤층 지원을 위한 세금 증대에 대한 수용 의사

(단위: 명, %)

		매우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9 (6.5)	400 (20.0)	539 (27.0)	791 (39.6)	141 (7.1)	3.21 (1.05)
성별 ***	남성	64 (6.5)	146 (14.7)	227 (22.9)	449 (45.3)	106 (10.7)	3.39 (1.09)
	여성	65 (6.4)	254 (25.2)	312 (31.0)	342 (33.9)	35 (3.5)	3.03 (.99)
연령 ***	20대	15 (4.4)	50 (14.5)	115 (33.4)	130 (37.8)	34 (9.9)	3.34 (.99)
	30대	22 (5.2)	65 (15.5)	126 (30.0)	182 (43.3)	25 (6.0)	3.29 (.98)
	40대	23 (5.1)	80 (17.9)	106 (23.7)	200 (44.6)	39 (8.7)	3.34 (1.03)
	50대	29 (7.7)	86 (22.9)	94 (25.0)	143 (38.0)	24 (6.4)	3.12 (1.08)
	60대 이상	40 (9.7)	119 (28.9)	98 (23.8)	136 (33.0)	19 (4.6)	2.94 (1.09)

학력 ***	중졸 이하	43 (12.4)	98 (28.2)	92 (26.4)	100 (28.7)	15 (4.3)	2.84 (1.10)
	고졸	42 (5.8)	150 (20.5)	212 (29.0)	277 (37.9)	49 (6.7)	3.19 (1.02)
	전문대졸	11 (7.1)	28 (18.2)	51 (33.1)	52 (33.8)	12 (7.8)	3.17 (1.05)
	대졸 이상	33 (4.3)	123 (16.0)	184 (24.0)	362 (47.2)	65 (8.5)	3.40 (.99)
결혼상태 ***	미혼	23 (4.8)	67 (14.1)	145 (30.5)	192 (40.3)	49 (10.3)	3.37 (1.01)
	기혼 유배우	92 (6.6)	296 (21.2)	363 (26.0)	559 (40.0)	67 (6.2)	3.18 (1.05)
	기혼 무배우	14 (11.0)	37 (29.1)	31 (24.4)	40 (31.5)	5 (3.9)	2.88 (1.10)
경제활동지위 ***	상용직	21 (3.8)	88 (16.0)	143 (26.0)	254 (46.1)	45 (8.2)	3.39 (.98)
	임시일용직	13 (9.5)	27 (19.7)	37 (27.0)	54 (39.4)	6 (4.4)	3.09 (1.07)
	고용주	2 (9.5)	5 (23.8)	4 (19.0)	7 (33.3)	3 (14.3)	3.19 (1.25)
	자영자	37 (8.0)	87 (18.7)	117 (25.2)	191 (41.1)	33 (7.1)	3.21 (1.08)
	실업자	2 (3.2)	7 (11.1)	15 (23.8)	30 (47.6)	9 (14.3)	3.59 (.98)
	비경활	54 (7.1)	186 (24.4)	223 (29.2)	255 (33.4)	45 (5.9)	3.07 (1.05)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23 (10.3)	77 (34.5)	47 (21.1)	67 (30.0)	9 (4.0)	2.83 (1.09)
	100~200만원	20 (7.5)	59 (22.1)	73 (27.3)	96 (36.0)	19 (7.1)	3.13 (1.07)
	200~300만원	19 (5.2)	74 (20.2)	103 (28.1)	146 (39.9)	24 (6.6)	3.22 (1.01)
	300~400만원	14 (3.1)	76 (16.6)	138 (30.1)	201 (43.8)	30 (6.5)	3.34 (.93)
	400~500만원	15 (6.4)	39 (16.5)	52 (22.0)	114 (48.3)	16 (6.8)	3.33 (1.04)
	500~600만원	13 (7.6)	31 (18.1)	47 (27.5)	68 (39.8)	12 (7.0)	3.20 (1.06)
	600만원 이상	18 (8.7)	32 (15.5)	53 (25.7)	82 (39.8)	21 (10.2)	3.27 (1.12)

정치성향 ***	진보	32 (5.5)	97 (16.8)	127 (21.9)	260 (44.9)	63 (10.9)	3.39 (1.06)
	중도	52 (6.5)	153 (19.0)	255 (31.7)	303 (37.7)	41 (5.1)	3.16 (1.00)
	보수	45 (7.3)	150 (24.3)	157 (25.4)	228 (37.0)	37 (6.0)	3.10 (1.07)

주: 집단범주간 평균차이의 유의도: * p<.05, ** p<.01, *** p<.001: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표 3-17>에서는 정부의 친서민정책 평가와 빈곤층지원의 증세의사에 대해 응답자 속성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서열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수·중도층 및 100~200만원 가구소득이 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반면, 빈곤원인을 사회구조의 탓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거주자, 고용주·자영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서민정책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수·중도의 정치성향과 중졸이하와 고졸의 학력을 꼽을 수 있는 한편, 부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으로는 빈곤원인인식(사회구조 탓) 및 자영자로 나타났다. 또한, 친서민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은 비선형의 U자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층 지원의 증세의사에 대해서는 남성과 빈곤원인인식(사회구조 탓) 및 실업자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의 학력과 보수·중도의 정치성향 그리고 자영자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17> 정부의 서민정책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서민정책 적절성 (모형 2-1)	서민정책 만족도 (모형 2-2)	증세 의사 (모형 2-3)
성별 (남성=1)		-.115(.096)	-.091(.096)	.673(.097)***
만나이	연령	-.0314(.024)	-.058(.024)*	.025(.024)
	연령제곱	.000(.000)	.001(.000)*	.000(.000)
학력 (기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175(.162)	.350(.162)*	-.437(.161)**
	고졸	.152(.108)	.280(.107)**	-.241(.108)*
	전문대졸	.123(.1670)	.220(.166)	-.378(.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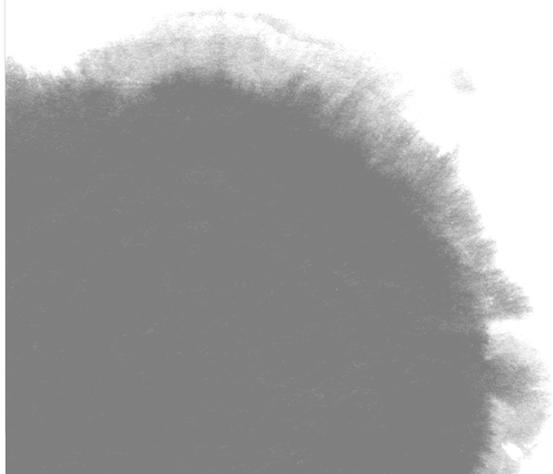
결혼상태 (기준=기혼 무배우)	미혼	.100(.257)	.059(.256)	-.164(.256)
	기혼유배우	-.040(.209)	.268(.204)	-.253(.202)
거주지 (기준=농어 촌)	대도시	-.225(.134)†	-.173(.134)	-.174(.134)
	중소도시	-.265(.133)*	-.181(.133)	-.035(.133)
종사상지위 (기준=비경 활)	상용직	-.037(.129)	.110(.129)	-.028(.129)
	임시일용직	.092(.178)	.066(.177)	-.197(.176)
	고용주	-.691(.419)†	-.290(.419)	-.443(.420)
	지역자	-.222(.133)†	-.220(.133)†	-.225(.133)†
	실업자	.142(.259)	.206(.258)	.506(.265)†
월 가구소득 (기준=600 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6(.234)	-.165(.233)	-.486(.232)*
	100~200 만원	.318(.189)†	.205(.188)	-.271(.189)
	200~300 만원	.242(.167)	.159(.167)	-.220(.168)
	300~400 만원	-.059(.159)	-.044(.158)	-.011(.160)
	400~500 만원	-.072(.177)	-.058(.176)	-.033(.178)
	500~600 만원	.033(.191)	.150(.191)	-.154(.192)
가구원수		-.016(.043)	-.064(.043)	-.067(.043)
정치성향 (기준=진보)	보수	.857(.114)***	.782(.1143)***	-.284(.113)*
	중도	.538(.104)***	.591(.1043)***	-.327(.104)**
빈곤원인 인식 (사회구조 탓=1)		-.652(.091)***	-.657(.0910)***	.505(.093)***
임계치	매우 그렇지않다	-2.325(.649)***	-2.631(.648)***	-3.433(.653)***
	조금 그렇지않다	-.891(.647)	-.984(.645)	-1.700(.647)**
	그저 그렇다	1.141(.648)†	.971(.645)	-.460(.646)
	조금 그렇다	3.693(.663)***	3.863(.674)***	2.182(.650)***
-2		5008.080***	4964.408***	5159.091***
Nagelkerke R ²		0.097	0.093	0.101
N		1,918	1,918	1,918

주: 정값과 표준오차 명기: † p<.1,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원자료.



04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제4장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및 기준선

본 분석은 공정성측면에서 근로계층의 실태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계층의 빈곤 실태와 추이를 살펴본다. 우선 근로계층의 빈곤특성 파악을 위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추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빈곤층이란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집단 중 빈곤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Active Poor)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 개념은 ‘일하고 있다’(Working)는 것을 정태적으로 볼 것인가 동태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정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취업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경제활동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로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연 중 일정기간 이상’ 일한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정태적 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 실업자를 포함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실망실업자와 근로곤란자인

18세 미만인구, 학생, 장애인, 질환자, 노인,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빈곤층을 근로능력빈곤층이라고 칭하는데 근로빈곤층 가운데 가장 큰 광의의 개념이다. 근로능력빈곤층은 경제활동빈곤층과 비경제활동빈곤층으로 나누어지며, 경제활동빈곤층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빈곤층을 나타내고, 비경제활동빈곤층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빈곤층을 칭한다.

경제활동빈곤층은 취업빈곤층과 실업빈곤층으로 구분되는데 취업빈곤층은 취업자 가운데 일정소득 이하의 빈곤층을 나타내며, 실업빈곤층은 실업자 가운데 빈곤층을 의미한다. 실업빈곤층과 비경제활동빈곤층을 합한 빈곤층을 미취업빈곤층이라고 정의한다. 취업빈곤층은 임금빈곤층과 비임금빈곤층으로 구분되고, 임금빈곤층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빈곤층을 나타내고, 비임금근로자빈곤층은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빈곤층으로써 비임금빈곤층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등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나타낸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빈곤층을 개념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근로빈곤층 개념 구성도 (정태적 관점)



주: 비경제활동인구는 근로포란자인 18세 미만인구, 학생, 장애인, 질환자, 노인, 임신부 등을 제외한 인구를 나타낸다.
 자료: 노태명 외(2009)

이러한 정태적 관점과 달리 동태적 관점에 의거하여 정의하는 근로빈곤층은 연중 근무 월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완전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인 완전취업빈곤층, 그리고 한해의 절반 이상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인 불완전취업빈곤층(7개월 ~ 11개월 취업), 한해의 절반 이하를 취업하고 있으면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업애로 빈곤층(1개월 ~ 6개월 취업), 그리고 실업상태의 빈곤층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간 7개월 이상 취업한 집단 가운데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4-2] 근로빈곤층 개념 구성도 (동태적 관점)



자료: 노대명 외(2009)

다음으로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빈곤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빈곤선은 당해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 4-1>과 같다.

한편 상대적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40 ~ 60%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각 가구의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균등화한 후 중위소득의 40% 상대적 빈곤선, 50% 상대적 빈곤선, 60%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여 상대

적 빈곤층을 도출한다.

〈표 4-1〉 연도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가구 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94,705	1,911,610
2006	418,309 (4.2%)	700,849 (4.8%)	939,849 (3.5%)	1,170,422 (3.0%)	1,353,242 (3.9%)	1,542,382 (4.4%)	1,768,766 (4.4%)	1,995,150 (4.4%)
2007	435,921 (4.2%)	734,412 (4.8%)	972,866 (3.5%)	1,205,535 (3.0%)	1,405,412 (3.9%)	1,609,630 (4.4%)	1,845,885 (4.4%)	2,082,140 (4.4%)
2008	463,047 (6.2%)	784,319 (6.8%)	1,026,603 (5.5%)	1,265,848 (5.0%)	1,487,878 (5.9%)	1,712,186 (6.4%)	1,936,494 (4.9%)	2,160,802 (3.8%)
2009	490,845 (6.0%)	835,763 (6.6%)	1,081,186 (5.3%)	1,326,609 (4.8%)	1,572,031 (5.7%)	1,817,454 (6.1%)	2,062,877 (6.5%)	2,308,300 (6.8%)
2010	504,344 (2.8%)	858,747 (2.8%)	1,110,919 (2.8%)	1,363,091 (2.8%)	1,615,263 (2.8%)	1,867,435 (2.8%)	2,119,607 (2.8%)	2,371,779 (2.8%)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도 상승률임.

이때, 소득은 가구당 소득을 나타내고, 가구소득은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경상소득(current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지출소득(사적이전지출 소득과 공적이전지출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시장소득(market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지출 소득의 합으로 국제 비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비소비지출(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합)을 제하여 준 소득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 의거한 빈곤상태의 비교는 정부의 공공 부조(public assistance)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가계 조사자료와 본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이다. 복지패널조사자료는 패널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2008년도 조사기준의 자료까지만 공개되어 최근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가계조사자료는 2009년부터 종사상 지위를 발표하고 있다. 두 자료를 동일한 자료로 취급하기 어려움이 있어, 심층분석에 따라 두자료를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근로계층의 빈곤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는 2절에서는 본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분류상 문제는 없으나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어서 이 가구를 임금근로자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본 장의 분석대상은 2008년도 조사대상 중 패널로 유지된 동일한 가구만 선택함으로써 5,932가구⁹⁾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근로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3절에서는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독립적 표본에 기초한 횡단면 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¹⁰⁾이자 월간 데이터의 단순취합 데이터(aggreated data)라는 점에서 빈곤율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¹⁾ 특히 본 자료에서는 2009년부터 종사상 지위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여러 종류의 근로빈곤층을 계산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9) 연도에 따라 결측치가 존재하여 일부 자료는 5,931가구이다.

10) 전국가계조사자료는 매년 완전히 독립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아니다. 해마다 일정비율의 표본이 교체됨으로써 약 3년 주기로 표본이 완전히 대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표본이라 할 수 없다.

11) 전국가계조사는 가계부 기장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 파악의 신뢰도는 높지만, 월별 데이터를 독립된 unit으로 간주함에 따라 자영업자 등 농업종사자 등 연중 특정기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빈곤층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등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기타(방문판매 등)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취업근로자, 미취업근로자 등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어렵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기 위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를 선택하고, 가구주가 학생인 가구를 선택하여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만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나머지 가구를 실업자 가구로 구분하였다. 이런 경우에 실업자로 취급한 가구가 장애인, 질환자 등이 포함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원래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과소 추정되고, 실업자는 원래의 실업자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는 가계부 조사 방식이므로 12개월을 전부 조사한 가구가 있는 반면에 일부 개월만 조사한 가구도 있으므로 동일한 가구의 ID를 찾아 평균치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한 가구도 수개월 조사한 경우에는 각 개월마다 상이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가구가 몇 개월간 취업 상태에 있다가 조사 중간에 실업자가 된다든지, 역으로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는 경우 이 가구를 과연 취업자로 파악해야할지 아니면 실업자로 파악해야할지 불명확하고, 거주주 연령을 비롯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중간에 변해서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처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라도 조사한 횟수에 따라 다른 가구로 취급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말미암아 소득분배 상태가 왜곡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응답횟수를 고려하여 가구별 연간 가중치를 산출하고, 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특성(가구원수, 산업, 직업 등)은 빈도가 가장 큰 월 또는 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 월을 대표월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에는 실업가구에서 취업가구(혹은 역으로)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두 방법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장의 3절 분석에서는 각 ID 별로 수개월 조사된 가구는 동일한 가구일지라도 상이한 가구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자료의 관찰치 수는 약 85,000개를 상회한다.

제2절 근로계층의 빈곤 실태 및 추이

1. 근로계층의 절대빈곤 실태

절대적 빈곤에 의한 빈곤층 규모는 소득에 따라 약간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빈곤층 대신에 전체 가구 가운데 빈곤가구 비율인 총빈곤가구율과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인구 비율인 총빈곤인구율을 분석한다. 총빈곤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지난 4년간 약 10% 가량 줄어들었다.¹²⁾ 개념층위 3에 해당하는 계층은 경제활동빈곤층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비경제활동빈곤층으로 명시)으로 구분되는데, 경제활동 빈곤층은 대체로 10%대를 보이고 있으나 비경제활동빈곤율은 30%대에서 70%대까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념층위 2에서 제시한 취업빈곤층과 비취업빈곤층을 구분하여 계측하는데 비취업빈곤층은 비경제 활동인구가 과도측정된 관계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취업빈곤율은 2005년 경상소득 기준으로 23.3%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 미만의 낮은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미취업빈곤율은 60%~70%대(시장소득), 30%~50%대(가처분소득, 경상소득)를 보이고 있어서 취업빈곤율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취업빈곤율을 임금근로자빈곤율과 비임금근로자빈곤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 빈곤율은 시장소득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서는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나 비임금근로자 빈곤율은 40%대(2005년 시장소득)부터 10%대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빈곤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5년 총빈곤가구율이 36.8%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 28%에 도달하였다. 빈곤인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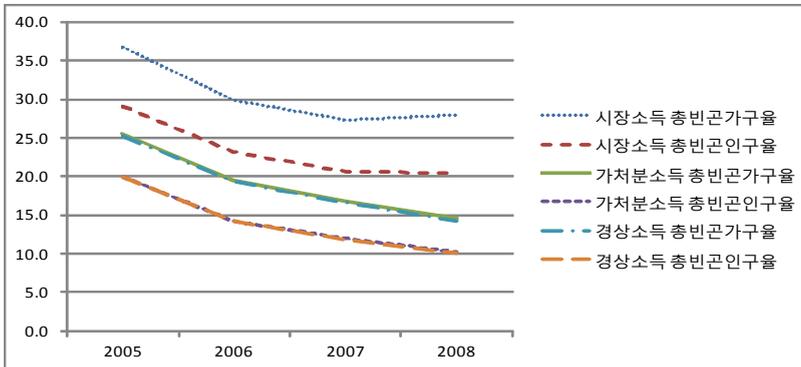
12) 개념층위별, 소득별 빈곤율은 부록 중 <부표 1> ~ <부표 12> 참조.

은 빈곤가구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서¹³⁾ 2005년 29.1%에서 2008년 20.5%로 줄어들었다.

한편 가처분소득은 2005년 총 빈곤가율이 25.5%에서 2008년 14.5%로 11% 개선되었으며, 시장소득과 비교하여 2008년까지 10%p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보다 빈곤율이 적은 것은 정부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어 그 효과가 발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8년에는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거의 절반 가량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 등 지출충면을 제한 것이므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으며, 빈곤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2005년 경상소득 총 빈곤가율이 25.3%에서 2008년 14.2%까지 줄어들어 따라 가처분소득과 비교하여 0.1%p ~ 0.3%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절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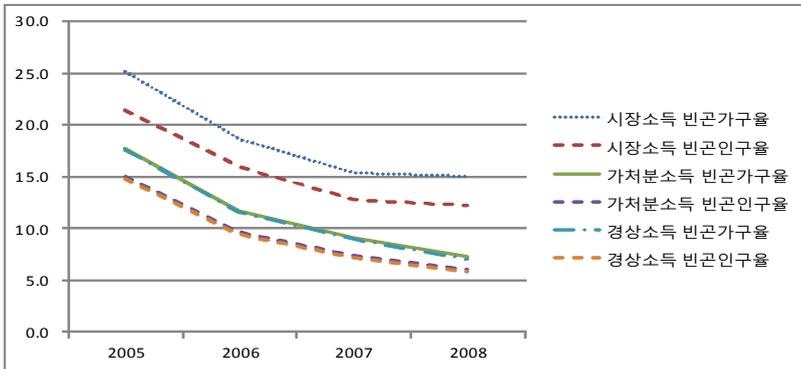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동빈곤율도 다른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시장소득의 빈곤율(빈곤가구율:

13) 빈곤가구율보다 빈곤인구율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빈곤가구의 가구원수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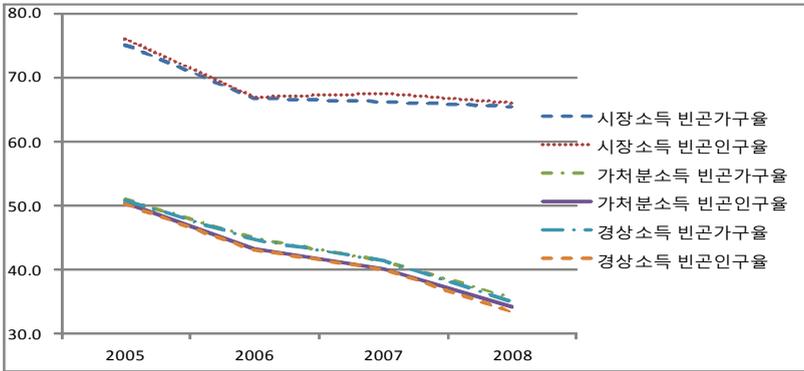
25.2%~13.8%, 빈곤인구율: 21.4%~11.0%)이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가처분소득에 의한 빈곤율(빈곤가구율: 17.7%~7.3%, 빈곤인구율: 15.0%~6.0%)과 경상소득 빈곤율(빈곤가구율: 17.6%~7.0% 빈곤인구율: 14.8%~5.8%)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5%에 이를 정도로 높다가 개선되기는 하지만 6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0%대에서 30%대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에 의한 빈곤율 격차가 20% 이상으로 크게 도출되어 비경제활동인구의 공적 기능에 의한 빈곤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4] 경제활동인구 절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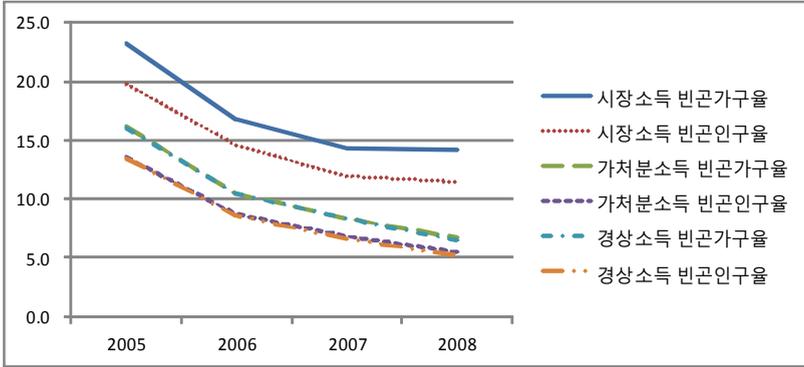
[그림 4-5] 비경제활동인구 절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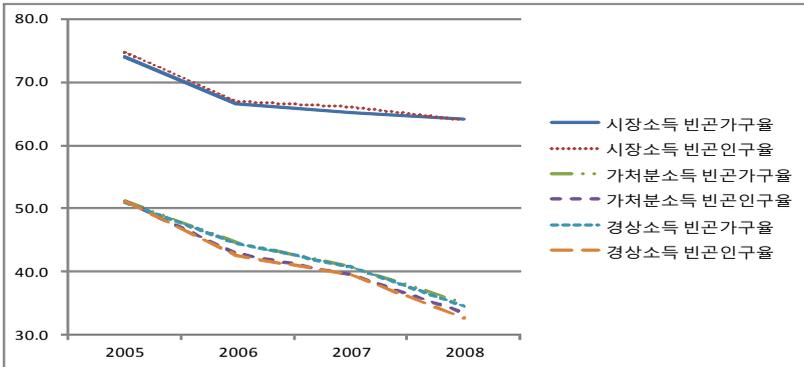
아울러 취업여부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취업근로자 빈곤율을 살펴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05년 빈곤가구율 및 빈곤인구율이 각각 23.3%, 19.8%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08년에는 14.2%, 11.4%에 이르렀다.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수치가 더욱 낮아져서 2008년 빈곤인구율이 5%대에 도달하였다. 미취업자 빈곤율은 취업빈곤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소득에 의하면 빈곤율이 60%대 중반 이상이었으며, 2005년 빈곤인구율이나 빈곤가구율이 75%를 상회할 정도에 이르렀다. 가처분소득에 의한 빈곤율도 30%이상이며, 심지어 2005년의 경우에는 반 이상이 빈곤가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율도 가처분소득과 1%내외의 차이를 보여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미취업빈곤율이 가장 큰 사회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취업근로자 절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7] 미취업자 절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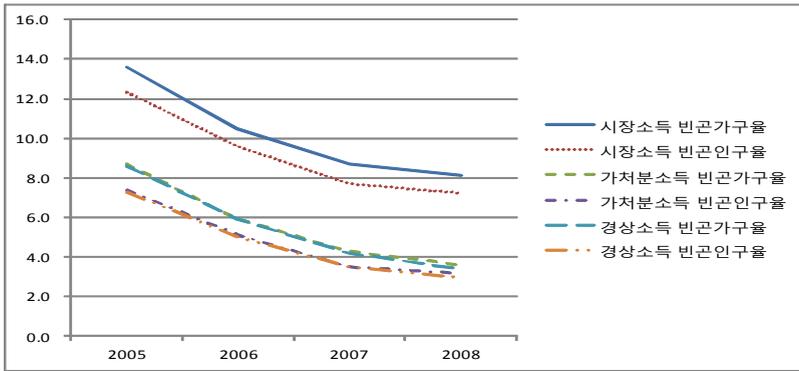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근로빈곤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2005년, 2006년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10%미만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2008년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빈곤율은 3%대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근로빈곤율이 낮게 도출된 것은 상용직의 빈곤율이 낮는데 기인한 것이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자리 형태가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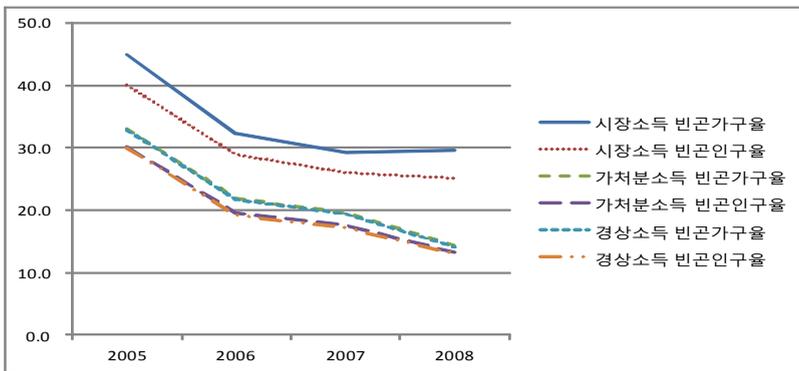
빈곤율은 예상한바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 빈곤율보다 3~4배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특히 2005년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가구율이나 빈곤인구율은 4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도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큰 폭으로 개선되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 의한 빈곤율은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10%p 이상 줄어들어 2007년에 10%대로 진입하고 2008년에는 14% 내외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8] 임금근로자 절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9] 비임금근로자 절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근로계층의 상대빈곤 실태

상대적 빈곤층을 도출하기 위한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40%, 50%, 60% 세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50%에 대한 결과¹⁴⁾만 수록하여 비교분석한다.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인 근로빈곤층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계속되었고,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율은 낮은 것으로 도출되어 절대 근로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적이전지출과 직접세(사회보장분담금 포함)에 의한 빈곤층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50% 이상으로 빈곤율이 높은 계층의 개선효과는 10% 이상 높게 나타났고, 30~50%의 빈곤율을 나타낸 계층의 경우에는 5% 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10% 미만의 경우에는 1~2%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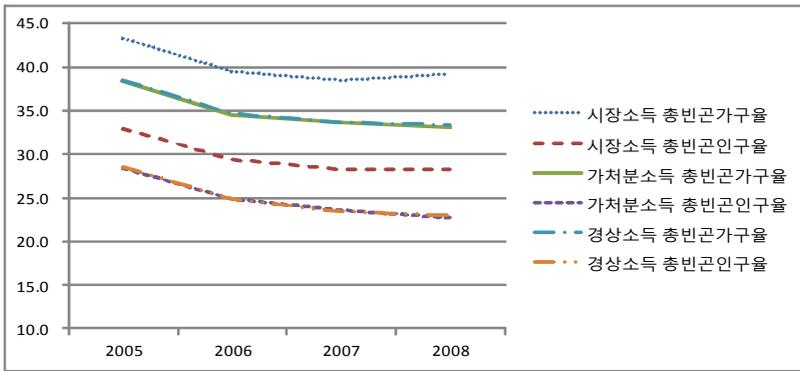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5년 43.3%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07년 38.5%에 이른 후 2008년 소폭 상승하나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¹⁵⁾를 보이고 있다. 빈곤인구율은 빈곤가구율보다 10%p가 낮은

14) 중위소득의 40%나 60%에 대한 결과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므로 중위소득의 50%에 대한 결과만 수록하였다. 중위소득 50% 계층 결과에 대해서는 부록 중 <부표 13> ~ <부표 24> 참조

15) 이병희(2011) 연구에 의하면 시장소득 빈곤율이 2005년 0.204에서 2008년 0.196으로, 경상소득빈곤율은 0.170(2005년)에서 0.156(2008)으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0.163에서 0.152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병희의 연구에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첫째, 이병희, 반정호(2009)에서 근로가능연령을 15~64로 구분한 반면 노대명 외(2009)에서는 18~64세로 분석하고 있어 연령구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경활인구에 대한 빈곤율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비경활인구에서 이 연령층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층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물론 근로무능력 계층에 속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동태적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D가 동일한 가구만 선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과 타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자체가 상이할 수 있다. 정태적 분석 자료는 해당 연도 자료를 전부 이용하여 분석하고, 동태적 분석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에는 정태적 분석결과와 동태적 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분석결과와 비교를 위해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원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중치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으나 표본의 감축으로 말미

32.9%(2005년)에서 28.2%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소득에 의한 빈곤가구율이나 빈곤인구율은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율보다 공통적으로 약 5%p의 낮아서 38.3%(2005년)~33.1%(2008년)였으며, 총 빈곤인구율도 거의 유사하게 28.4%~22.8%로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4-10] 상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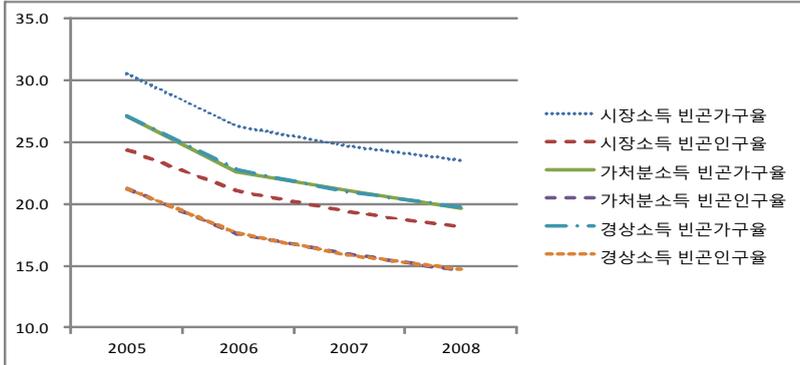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빈곤가구율은 2005년 30.5%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 23.5%에 달하였고, 빈곤인구율 역시 동일한 기간동안 24.4%에서 18.1%로 하락하였다.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율은 대부분 3~4%p 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에 의하면 8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특히 다른 상대적 빈곤율과는 달리 2008년에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에 의한 상대빈곤율 개선도

않아 나타나는 가중치의 변화가능성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빈곤율 추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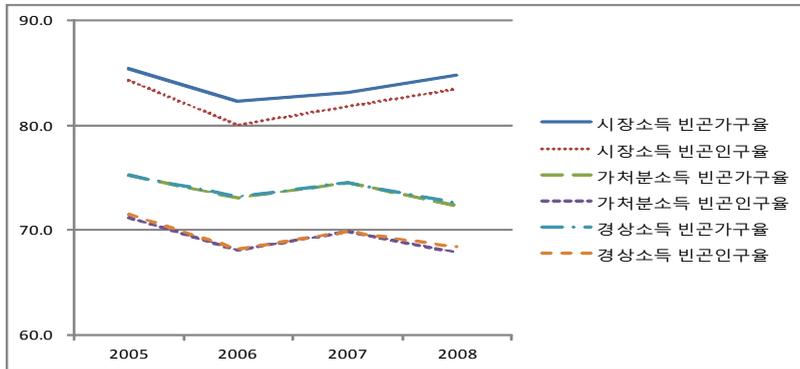
가 10%P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60% 이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4-11] 경제활동인구 상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12] 비경제활동인구 상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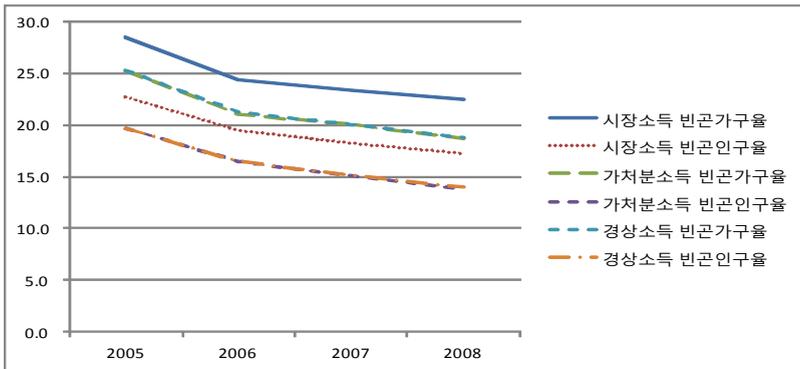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와 함께 취업근로자에 대한 시장소득 빈곤가구율은 20%대에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빈곤인구율은 빈곤가구율보다 5% 가량 적은 비율로 2008년에는 17.3%에 이를 정도다.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율은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율보다 3% 가량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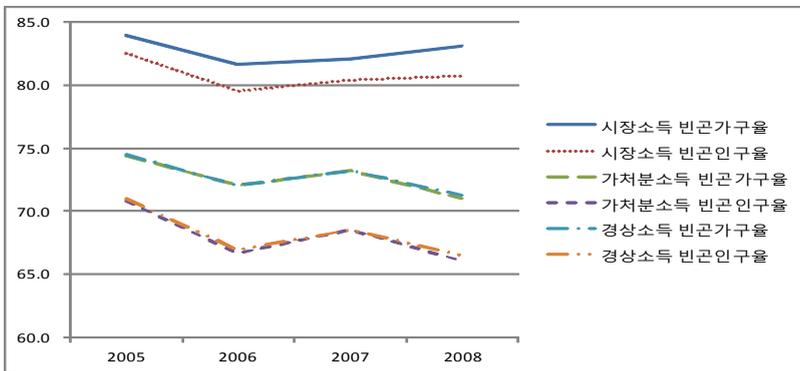
을 보였다. 미취업자 빈곤율은 비경제활동인구와 거의 유사하게 시장소득에 의하면 80% 이상, 가처분소득 및 경상소득에 의하면 60%~7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가장 빈곤층이 많고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림 4-13] 취업근로자 상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14] 상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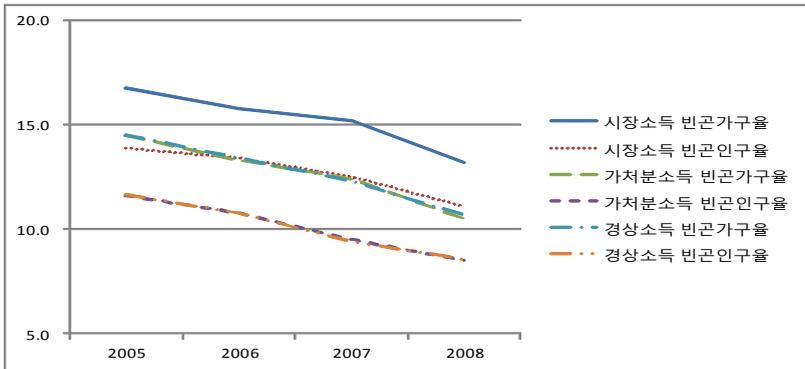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에 의거한 임금근로자 상대적 빈곤율은 20% 이하 수준이었으며, 빈곤가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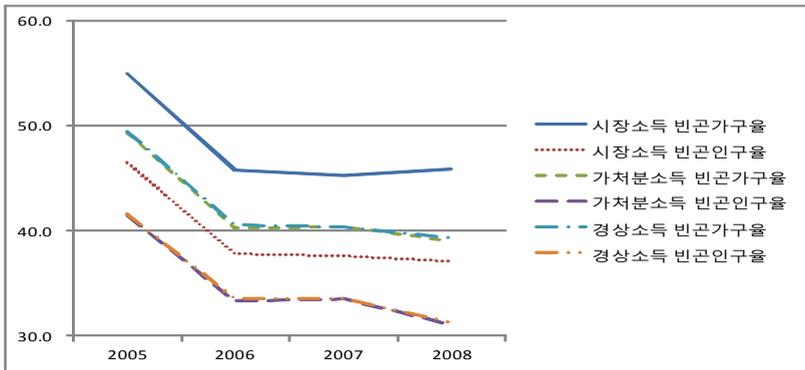
은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 13.2%에 이르렀고, 빈곤인구율은 11.1%에 도달할 정도였다.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율은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더 낮아서 2008년에 빈곤가구율이 10.5%였고, 빈곤인구율은 8.5%로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시장소득 빈곤가구율이 2005년 55.0%에서 이듬해에 줄어들어 45%를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인구율은 동일한 기간동안 46.5%에서 37%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에 의한 빈곤가구율과 빈곤인구율은 각기 49.4%, 41.5%에서 39.1%, 31.1%로 30%대로 줄어들었다.

[그림 4-15] 임금근로자 상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16] 비임금근로자 상대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3. 근로계층의 동태적 빈곤 실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932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태적인 빈곤 변화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표는 상대빈곤선을 중심으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의 40%, 50%, 60%로 선정하였다.

<표 4-2> 소득지위 변화

2005	2006	2007	2008	빈곤 회수	빈곤가구수			빈곤율(%)			
					40%	50%	60%	40%	50%	60%	
비빈곤	비빈곤	비빈곤	비빈곤	0	3,361	2,882	2,458	56.7	48.6	41.4	
			빈곤	1	168	172	186	2.8	2.9	3.1	
		빈곤	비빈곤	1	158	121	104	2.7	2.0	1.8	
			빈곤	2	97	86	91	1.6	1.4	1.5	
	빈곤	비빈곤	비빈곤	1	150	120	129	2.5	2.0	2.2	
			빈곤	2	57	51	47	1.0	0.9	0.8	
		빈곤	비빈곤	2	80	71	62	1.3	1.2	1.0	
			빈곤	3	154	155	160	2.6	2.6	2.7	
	빈곤	비빈곤	비빈곤	비빈곤	1	369	337	333	6.2	5.7	5.6
				빈곤	2	78	77	64	1.3	1.3	1.1
빈곤			비빈곤	2	84	79	73	1.4	1.3	1.2	
			빈곤	3	106	131	124	1.8	2.2	2.1	
빈곤		비빈곤	비빈곤	2	150	162	151	2.5	2.7	2.5	
			빈곤	3	128	130	119	2.2	2.2	2.0	
		빈곤	비빈곤	3	169	197	195	2.8	3.3	3.3	
			빈곤	4	623	1,161	1,636	10.5	19.6	27.6	
총 가구수					5,932	5,932	5,932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 표에 의하면 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전체 5,932가구 가운데 3,050가구가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계측되어 전 가구 가운데 51.4%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빈곤층이었던 빈곤 지속가구는 1,161가구로 전체

의 19.6%에 달했으며, 빈곤을 한번 경험한 가구는 12.6%였다. 4년간 빈곤을 2회 경험한 가구(526가구, 8.9%)는 2회 연속 경험한 가구와 빈곤층에서 빈곤을 탈피하였다가 다시 빈곤에 진입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2회 연속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19가구로 전체의 5.4%에 달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86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을 탈피하였다가 다시 빈곤으로 추락한 가구는 207가구로 이들의 빈곤층 재진입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회 빈곤에 처한 가구는 613가구(10.3%)인데 그 가운데 2006년 이후 빈곤 상태인 가구가 156가구로 이들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08년에 빈곤을 탈피한 가구는 197가구이며, 빈곤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가구는 261가구(4.4%)로 이들 가구가 빈곤에 재진입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상태에 진입한 회수에 따라 각 가구를 구분하여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에 진입하는 가구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연령 및 학력,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가구(가구원수)나 가구주의 특성(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등)은 최종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¹⁶⁾ 먼저, 가구원수별 빈곤회수를 나타낸 <표 4-3>에 의하면 1인가구는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 상태인 지속빈곤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인가구는 4년간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뒤를 이어서 4회 빈곤이 24.3%로 4가구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인 이상 가구부터 빈곤하지 않은 계층이 6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빈곤 비중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16) 가구주 연령,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 등은 2005년과 2008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있다. 4인 가구의 빈곤계층이 79.5%로 가장 높지만,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인 이상 가구는 자료 수가 적으므로 빈곤을 변화를 단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지속빈곤이나 빈곤회수가 많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4-3〉 가구원수별 빈곤 동태분석

빈곤회수 가구원수	0	1	2	3	4	합계
1	262 (19.0)	116 (8.4)	117 (8.5)	258 (18.7)	628 (45.5)	1,381 (100.0)
2	650 (36.7)	244 (13.8)	215 (12.1)	232 (13.1)	431 (24.3)	1,772 (100.0)
3	683 (62.3)	186 (17.0)	95 (8.7)	67 (6.1)	66 (6.0)	1,097 (100.0)
4	960 (79.5)	130 (10.8)	65 (5.4)	34 (2.8)	19 (1.6)	1,208 (100.0)
5	269 (71.4)	55 (14.6)	26 (6.9)	16 (4.2)	11 (2.9)	377 (100.0)
6	52 (61.9)	14 (16.7)	7 (8.3)	5 (6.0)	6 (7.1)	84 (100.0)
7	5 (45.5)	4 (36.4)	1 (9.1)	1 (9.1)	0 (0.0)	11 (100.0)
8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원수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73.2%(4,340가구)였으며, 여성가구주는 26.8%였다. 남성가구주 가운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2,545가구로 남성 가구주 가운데 58.6%에 달하였고, 한번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13.2%로 조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빈곤상태(4회)인 가구 12.4%보다 약간 비중이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

은 가구가 21.2%였으며, 2005년부터 4년간 전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기간 동안 3회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도 17.7%에 달함으로써 조사기간 동안 3회 이상 빈곤에 처한 가구가 절반을 상회하였다. 여성가구주 빈곤 회수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상태가 남성가구주보다 열악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가구주 성별 빈곤 동태분석

성별 \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남성	2,545 (58.6)	574 (13.2)	352 (8.1)	332 (7.6)	537 (12.4)	4,340 (100.0)
여성	337 (21.2)	176 (11.1)	174 (10.9)	281 (17.7)	624 (39.2)	1,592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성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어서 가구주 연령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20대 미만인 가구는 빈곤율이 낮은 편으로 70% 이상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기간 4년 동안 1회 빈곤상태를 경험한 가구가 15.9%이고, 빈곤을 2회 이상 경험한 가구가 11.1%였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1회 빈곤 경험가구가 12.4%에 불과하고, 2회 이상은 7.3%로 나타났다. 40대는 20~30대 보다 빈곤율이 약간 높아 약 1/3이 빈곤을 1회 이상 경험하였으며, 4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층인 가구가 5.1%에 달했다. 50대는 조금 더 빈곤율이 상승하고 4년 연속 빈곤층이 7.9%로 상승하였다. 60대 초반 가구주 가구는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50%를 넘어가서 빈곤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조사기간 동안 계

속해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15.9%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는 거의 대부분이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로 조사기간 동안 지속빈곤 상태의 가구가 43.3%에 이르렀다. 가구주 연령에 의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3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50대 이후 부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이들 가구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가구주 연령별 빈곤 동태분석

연령	빈곤회수					합계
	0	1	2	3	4	
29세 미만	151 (72.6)	33 (15.9)	13 (6.3)	7 (3.4)	4 (1.9)	208 (100.0)
30세 ~ 39세	777 (80.3)	120 (12.4)	40 (4.1)	16 (1.7)	15 (1.5)	968 (100.0)
40세 ~ 49세	766 (68.0)	166 (14.7)	81 (7.2)	57 (5.1)	57 (5.1)	1,127 (100.0)
50세 ~ 59세	566 (61.4)	133 (14.4)	75 (8.1)	75 (8.1)	73 (7.9)	922 (100.0)
60세 ~ 64세	265 (45.2)	87 (14.8)	77 (13.1)	64 (10.9)	93 (15.9)	586 (100.0)
65세 이상	357 (16.8)	211 (9.9)	240 (11.3)	394 (18.6)	919 (43.3)	2,121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연령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은 가구주 학력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력별 차이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명확하게 들어난다. 즉, 학력이 높아 질수록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줄어든다. 학력별 빈곤회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구가 빈곤에 봉착하지 않을 확률

은 16.3%에 불과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되면 64.9%로 절반 이상으로 상승하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1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전문대학 이하 학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빈곤에 2회 이상 진입할 확률은 학력과 정확하게 반비례해서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한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1.9%에서 대학교 학력 이상은 3.4%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 이상은 6.2%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표 4-6〉 가구주 학력별 빈곤 동태분석

학력 \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초등학교	336 (16.3)	219 (10.6)	258 (12.5)	387 (18.7)	867 (41.9)	2,067 (100.0)
중학교	342 (45.4)	125 (16.6)	74 (9.8)	78 (10.3)	135 (17.9)	754 (100.0)
고등학교	1,128 (64.9)	261 (15.0)	134 (7.7)	106 (6.1)	108 (6.2)	1,737 (100.0)
전문대학	270 (74.4)	49 (13.5)	15 (4.1)	12 (3.3)	17 (4.7)	363 (100.0)
대학교 이상	806 (79.7)	96 (9.5)	45 (4.5)	30 (3.0)	34 (3.4)	1,011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학력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편,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도 일부 영역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공공근로에서는 상용직일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으며, 임시직·일용직·공공근로로 갈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회수가 0(지속적인 비빈곤가구)과 4(지속적인 빈곤가구)일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거의 상용직과 임시직의 중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낮았으나, 자영업자는

실업자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빈곤에 처하지 않을 확률은 20%대 이고, 지속적인 빈곤에 처할 확률은 실업자보다도 자영업자가 높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장 나약한 계층으로 절반가량이 조사 기간 동안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위주로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종사상지위 \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상용직	1,612 (86.0)	167 (8.9)	64 (3.4)	22 (1.2)	10 (0.5)	1,875 (100.0)
임시직	446 (62.9)	140 (19.7)	62 (8.7)	31 (4.4)	30 (4.2)	709 (100.0)
일용직	151 (33.6)	93 (20.7)	66 (14.7)	72 (16.0)	67 (14.9)	449 (100.0)
공공근로	3 (7.3)	8 (19.5)	7 (17.1)	9 (22.0)	14 (34.1)	41 (100.0)
고용주	113 (77.9)	20 (13.8)	7 (4.8)	4 (2.8)	1 (0.7)	145 (100.0)
자영업자	321 (29.8)	176 (16.4)	153 (14.2)	165 (15.3)	261 (24.3)	1,076 (100.0)
무급가족종사자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실업자	31 (27.2)	29 (25.4)	17 (14.9)	19 (16.7)	18 (15.8)	114 (7.5)
비경제활동인구	205 (13.5)	117 (7.7)	150 (9.9)	290 (19.1)	760 (49.9)	1,522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을 구분한 방법과 유사하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의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하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취업근로자로 분류하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미취업근로자로 분류하는 등 개념층위로 분류하

여 빈곤층의 동태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개념층위 1분류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일수록 빈곤에 접할 기회가 적으며(조사기간 중 비빈곤층: 72.0%), 비임금근로자(비빈곤층: 35.5%), 실업자(비빈곤층: 27.2%), 비경제활동인구(비빈곤층: 13.5%)가 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4회 연속 빈곤)은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표 4-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층위 1)

종사상지위 \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임금근로자	2,212 (72.0)	408 (13.3)	199 (6.5)	134 (4.4)	121 (3.9)	3,074 (100.0)
비임금근로자	434 (35.5)	196 (16.0)	160 (13.1)	170 (13.9)	262 (21.4)	1,222 (100.0)
실업자	31 (27.2)	29 (25.4)	17 (14.9)	19 (16.7)	18 (15.8)	114 (7.5)
비경제활동인구	205 (13.5)	117 (7.7)	150 (9.9)	290 (19.1)	760 (49.9)	1,522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1개념층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개념층위 2의 분류에 의하면 취업근로자가 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1회 이상 빈곤층 비율: 38.4%)이 적으며, 미취업 상태가 될수록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근로자는 2번 이상 빈곤상태에 접할 가능성은 빈곤 회수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확률(2회: 8.4%, 3회: 7.1%, 4회: 8.9%)이지만, 미취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빈곤에 접할 회수가 많아질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미취업근로자의 빈곤은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표 4-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층위 2)

종사상지위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취업근로자	2,646 (61.6)	604 (14.1)	359 (8.4)	304 (7.1)	383 (8.9)	4,296 (100.0)
미취업근로자	236 (14.4)	146 (8.9)	167 (10.2)	309 (18.9)	778 (47.6)	1,636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개념층위 3의 분류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는 60% 이상이 빈곤회될 가능성이 없으며, 1회 빈곤층으로 될 가능성은 14.4%에 불과하고, 2회 이상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총 25%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절반가량이 지속빈곤에 처해 있으며, 19.1%가 3회 빈곤상태에 있었다. 이어서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빈곤층에 전락하지 않은 경우로서 13.5%에 달하며, 1회, 2회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은 각기 7.7%, 8.9%였다. 결론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86.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4-10〉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 동태분석 (개념층위 3)

종사상지위	빈곤회수					
	0	1	2	3	4	합계
경제활동인구	2,677 (60.7)	633 (14.4)	376 (8.5)	323 (7.3)	401 (9.1)	4,410 (100.0)
비경제활동인구	205 (13.5)	117 (7.7)	150 (9.9)	290 (19.1)	760 (49.9)	1,522 (100.0)
합계	2,882 (48.6)	750 (12.6)	526 (8.9)	613 (10.3)	1,161 (19.6)	5,932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제3절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본 절에서는 최근 근로계층의 빈곤 특성을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절의 분석자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계청의 전국가계실태조사자료의 중사상의 지위 변수가 포함된 2009년과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근로계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빈곤여부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최근 근로빈곤층 특성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앞 절의 동태분석과 마찬가지로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빈곤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선은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원수별 빈곤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상태이고, 이후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5인 가구 이후 빈곤 상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5인 가구 이상의 빈곤상태 악화¹⁷⁾는 큰 수치의 변화가 아니고, 8인 가구 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만 자료 수가 적으므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전 계층에서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09년에 5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2010년에는 7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17) 2009년의 경우 5인 가구의 비빈곤율은 91.9%, 6인 가구 91.2%, 7인 가구 86.7%로 큰 차이가 없고, 2010년에는 이 격차가 더 줄어들어서 5인 가구 92.2%, 6인 가구 92.2%, 7인 가구 93.5% 등이다.

〈표 4-11〉 가구원수별 빈곤 상태

가구원수	빈곤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1	6,219 (53.0)	5,515 (47.0)	11,734 (100.0)	6,012 (54.5)	5,028 (45.5)	11,040 (100.0)		
2	15,513 (71.0)	6,322 (29.0)	21,835 (100.0)	16,245 (71.3)	6,542 (28.7)	22,787 (100.0)		
3	18,348 (87.0)	2,743 (13.0)	21,091 (100.0)	18,959 (88.1)	2,558 (11.9)	21,517 (100.0)		
4	21,260 (91.8)	1,900 (8.2)	23,160 (100.0)	21,157 (92.6)	1,698 (7.4)	22,855 (100.0)		
5	5,477 (91.9)	482 (8.1)	5,959 (100.0)	5,580 (92.2)	474 (7.8)	6,054 (100.0)		
6	1,000 (91.2)	96 (8.8)	1,096 (100.0)	845 (92.2)	71 (7.8)	916 (100.0)		
7	215 (86.7)	33 (13.3)	248 (100.0)	230 (93.5)	16 (6.5)	246 (100.0)		
8	45 (67.2)	22 (32.8)	67 (100.0)	31 (73.8)	11 (26.2)	42 (100.0)		
9	2 (28.6)	5 (71.4)	7 (100.0)	10 (50.0)	10 (50.0)	20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원수별 빈곤, 비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주의 성별 빈곤 특성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0%대 초반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0%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태분석에서 4회 연속 빈곤 가구의 빈곤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각기 39.2%와 12.4%를 보인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도 여성가구주의 빈곤 상태가 남성가구주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가구주 성별 빈곤상태

성별 \ 빈곤회수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남성	54,337 (85.8)	9,020 (14.2)	63,357 (100.0)	54,937 (86.2)	8,814 (12.8)	63,751 (100.0)
여성	13,742 (62.9)	8,098 (37.1)	21,840 (100.0)	14,132 (65.0)	7,594 (35.0)	21,726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성별 빈곤, 비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20대인 가구는 빈곤율이 15.9%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30대인 가구는 8.5%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다가 40대에는 10%를 넘어서서 10.9%였으며, 50대에는 15.7%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빈곤율이 상승하여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반 이상(55.6%)이 빈곤층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동태분석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독 20대 가구주 가구와 60대 초반(60~64세) 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되었다. 이는 최근들어 20대 청년실업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가구주 연령별 빈곤상태

연령 \ 빈곤회수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29세 미만	3,091 (84.1)	585 (15.9)	3,676 (100.0)	2,532 (82.6)	533 (17.4)	3,056 (100.0)
30세 ~ 39세	17,218 (91.5)	1,601 (8.5)	18,819 (100.0)	17,041 (92.2)	1,440 (7.8)	18,481 (100.0)
40세 ~ 49세	21,764 (89.1)	2,676 (10.9)	24,440 (100.0)	21,911 (89.9)	2,474 (10.1)	24,385 (100.0)
50세 ~ 59세	15,273 (84.3)	2,846 (15.7)	18,119 (100.0)	16,081 (86.4)	2,523 (13.6)	18,604 (100.0)

60세 ~ 64세	4,535 (73.4)	1,645 (26.6)	6,180 (100.0)	5,011 (71.8)	1,965 (28.2)	6,976 (100.0)
65세 이상	6,198 (44.4)	7,765 (55.6)	13,963 (100.0)	6,493 (46.5)	7,473 (53.5)	13,966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연령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한편, 가구주 학력별 빈곤 상태는 동태분석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 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2009년이나 2010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학력부터 전문대학 졸업까지는 모든 계층의 빈곤율이 개선되지만, 대학교 졸업이상의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빈곤율보다 낮게 도출되었다. 학력에 의한 빈곤율 추이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표 4-14〉 가구주 학력별 빈곤상태

학력	빈곤회수			빈곤회수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초등학교	6,623 (48.2)	7,131 (51.8)	13,754 (100.0)	6,328 (48.8)	6,636 (51.2)	12,964 (100.0)
중학교	7,206 (71.8)	2,826 (28.2)	10,032 (100.0)	7,699 (73.4)	2,789 (26.6)	10,488 (100.0)
고등학교	26,845 (85.1)	4,707 (14.9)	31,552 (100.0)	27,082 (85.5)	4,579 (14.5)	31,661 (100.0)
전문대학	7,313 (91.1)	718 (8.9)	8,031 (100.0)	7,659 (92.2)	650 (7.8)	8,309 (100.0)
대학교 이상	20,092 (92.0)	1,736 (8.0)	21,828 (100.0)	20,301 (92.0)	1,754 (8.0)	22,055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학력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에서는 상용직일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으며, 임시직·일용직으로 갈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계층 가운데 고용주는 상용직에 이어 두 번째로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빈곤에 처할 확률이 21.1%였고,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60%대로 상당히 높았다. 2009년과 2010년의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개선되었으나, 임시직과 기타근로자의 빈곤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표 4-15〉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종사상지위	빈곤회수			빈곤율(%)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상용직	36,527 (97.2)	1,069 (2.8)	37,596 (100.0)	37,965 (97.3)	1,068 (2.7)	39,023 (100.0)
임시직	11,878 (81.3)	2,727 (18.7)	14,605 (100.0)	11,625 (80.2)	2,871 (19.8)	14,496 (100.0)
일용직	3,605 (66.8)	1,795 (33.2)	5,400 (100.0)	3,340 (68.3)	1,552 (31.7)	4,892 (100.0)
기타근로자	511 (83.4)	102 (16.6)	613 (100.0)	659 (81.9)	146 (18.1)	805 (100.0)
고용주	3,269 (92.6)	263 (7.4)	3,532 (100.0)	3,131 (94.3)	189 (5.7)	3,320 (100.0)
자영업자	7,218 (78.9)	1,933 (21.1)	9,151 (100.0)	7,302 (81.3)	1,681 (18.7)	8,983 (100.0)
무급가족종사자	2 (33.3)	4 (66.7)	6 (100.0)	11 (68.7)	5 (31.3)	16 (100.0)
실업자	1,988 (38.0)	3,245 (62.0)	5,233 (100.0)	1,903 (37.1)	3,228 (62.9)	5,13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081 (34.0)	5,980 (66.0)	9,061 (100.0)	3,133 (35.6)	5,668 (64.4)	8,801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앞의 근로계층의 동태적 빈곤실태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념층위별로 살펴 보았다. 동태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념층위 1분류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일수록 빈곤율이 낮았으며,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 모두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표 4-16〉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층위 1)

종사상지위 \ 빈곤회수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임금근로자	52,521 (90.2)	5,693 (9.8)	58,214 (100.0)	53,589 (90.5)	5,637 (9.5)	59,226 (100.0)
비임금근로자	10,489 (82.7)	2,200 (17.3)	12,689 (100.0)	10,444 (84.8)	1,875 (15.2)	12,319 (100.0)
실업자	1,988 (38.0)	3,245 (62.0)	5,233 (100.0)	1,903 (37.1)	3,228 (62.9)	5,13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081 (34.0)	5,980 (66.0)	9,061 (100.0)	3,133 (35.6)	5,668 (64.4)	8,801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1개념층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개념층위 2의 분류에 의하면 취업근로자가 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11% 내외였으며, 미취업근로자는 64%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개선되었으나 1%P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표 4-1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층위 2)

종사상지위 \ 빈곤회수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취업근로자	63,010 (88.9)	7,893 (11.1)	70,903 (100.0)	64,033 (89.5)	7,512 (10.5)	71,545 (100.0)
미취업근로자	5,069 (35.5)	9,225 (64.5)	14,294 (100.0)	5,036 (36.1)	8,896 (63.9)	13,932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개념층위 3의 분류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빈곤층으로 될 확률은 14%대를 유지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60% 이상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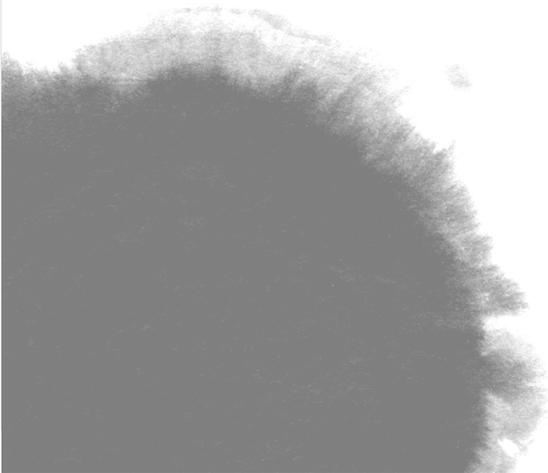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표 4-1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 (개념층위 3)

종사상지위 \ 빈곤회수	2009			2010		
	비빈곤	빈곤	합계	비빈곤	빈곤	합계
경제활동인구	64,998 (85.4)	11,138 (14.6)	76,136 (100.0)	65,936 (86.0)	10,740 (14.0)	76,676 (100.0)
비경제활동인구	3,081 (34.0)	5,980 (66.0)	9,061 (100.0)	3,133 (35.6)	5,668 (64.4)	8,801 (100.0)
합계	68,079 (79.9)	17,118 (20.1)	85,197 (100.0)	69,069 (80.8)	16,408 (19.2)	85,477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05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제5장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후기산업화 시대의 근로자는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의 노동이동을 경험한다. 이때 노동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증가하여 사회전반이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본 장의 목적은 빈곤층의 노동이동 실태를 일반층과 비교분석하고, 노동이동과정에서 공정성 위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1절 분석 개요

1. 노동이동의 개념정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 개념은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공장이나 회사에 있어서의 입직 및 이직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이직은 자발적·비자발적 사직, 퇴직, 전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은 노동자의 노동시장의 진입 및 퇴출을 의미한다(김혜연, 2000). 본 연구에서의 노동이동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일자리 이동과 노동이동(work(Labor) mobility)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동 형태의 구분은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노동이동의 형태는 지역간·산업간 또는 직종간 노동자의 이동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혜연, 2000). 또한 노동이동은 노동력 상태간 이동만이 아

나라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이동을 포함한다(이병희, 2005). 반면에 일자리 이동은 계급이동(class Mobility), 산업이동(industrial mobility),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 경력이동(career mobility), 노동이동(work mobility) 등 다양한 이동을 포함하는 복합적 속성을 지닌다.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이동은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일자리 이동의 형태는 매우 분절된 형태로 이루어진다(신광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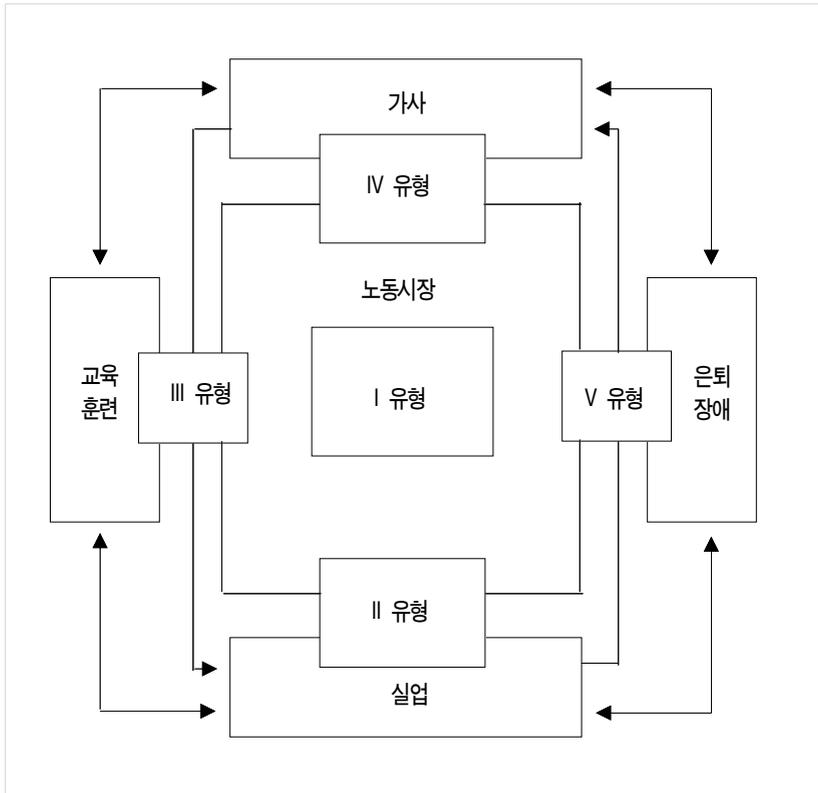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중 하나는 경력직 직장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노동시장에서 크게 약화되면서 피고용자는 특정 직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노동생애 전체에 걸쳐 설계하고 계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력직 이동은 이동전의 경력이 인정되는 직장이동이다. 비생산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이동은 경력직 이동이면서 많은 보상을 가져다주고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경력직 이동이면서 동시에 적은 보상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성훈, 2008).

2. 노동이동 분석틀: 이행노동시장 이론

이행노동시장(Transition Labor Markets: TLM) 이론은 1990년대 중반 독일의 Schmid(Schmid, G.)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취업과 실업으로 이분되는 전통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행노동시장이란, 정규 임금노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회적·개인적 활동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Schmid에 의하면, 노동이동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정원호, 2004; 김동현, 2009; Schmid, 1998). 첫째,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둘째, 단시간 노동과 전일제 고용 간 또는 피

고용 노동과 자영업 간의 이행, 셋째,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넷째, 사적인
 가사활동과 취업 간의 이행 다섯째,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이다. 이를 그림
 으로 표시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보는 노동이동 유형



자료 : 김동현(2011), Schmid(1998)

TLM에서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
 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모든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직된 개념(20~65세
 사이의 연령범위와 주당 36~40시간 근로)이 아닌 ‘유동적인 균형(fluid
 equilibrium)’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용형태는 가족의 욕구, 경제나
 기술적인 변화 또는 개인 선호에 따라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inactivity)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라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므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TLM이론에서의 목표는 빈곤이나 실업 등으로 인한 배제로의 이행(exclusionary transitions)을 예방하고 고용가능성과 취업과 실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making transition pay)’을 달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Klaus Schomann & Liuben Siarov, 2004). 따라서 TLM은 이러한 유연안정성을 생애주기에 걸친 역동적인 이행으로 인식하며, 이를 개인, 가족, 기업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TLM 개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노동이동에 관해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주변 혹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사회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점이다. 셋째, 노동을 어느 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활동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이행 활동으로 보며, 이러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기제가 필요함을 인지시킨다. 넷째, 완전고용을 이해함에 있어 취업과 실업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실업과 비경제활동 또한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 유연안정성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절 근로계층의 노동이행 실태

한국복지패널 제4차와 제5차 자료를 결합하여 2008 ~ 2009년 1년간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된 12,585명 중 8,962명(71.2%)이 일년간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3,623명(28.9%)은 1년 사이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표 5-1〉 2008 ~ 2009년간 노동이행 유형별 발생 빈도

(단위: 명, %)

		2009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전체
		상용 근로	임시 근로	일용 근로	자활 근로	고용 주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실업 자	비경 활	
2008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 여	2590	301	54	0	42	52	3	46	156	3244
		79.8 %	9.3%	1.7%	.0%	1.3%	1.6%	.1%	1.4%	4.8%	100.0%
		80.2 %	19.9	6.5%	.0%	15.1 %	4.1%	.7%	24.2 %	3.2%	25.8 %
	임 시	364	579	96	1	10	82	11	22	194	1359
		26.8 %	42.6 %	7.1%	.1%	.7%	6.0%	.8%	1.6%	14.3 %	100.0%
		11.3 %	38.2 %	11.5 %	1.5%	3.6%	6.5%	2.7%	11.6 %	4.0%	10.8 %
	야 영	48	136	373	0	3	23	6	15	147	751
		6.4%	18.1 5	49.7 %	.0%	.4%	3.1%	.8%	2.0%	19.6 %	100.0%
		1.5%	9.0%	44.8 %	.0%	1.1%	1.8%	1.5%	7.9%	3.1%	6.0%
	자 활	1	5	4	21	0	1	0	0	3	35
		2.9%	14.3 %	11.4 %	60.0 %	.0%	2.9%	.0%	.0%	8.6%	100.0%
		.0%	.3%	.5%	31.3 %	.0%	.1%	.0%	.0%	.1%	.3%
고 용 주	12	15	5	0	171	78	5	2	17	305	
	3.9%	4.9%	1.6%	.0%	56.1 %	25.6 %	1.6%	.7%	5.6%	100.0%	
	.4%	1.0%	.6%	.0%	61.5 %	6.2%	1.2%	1.1%	.4%	2.4%	

자 영업	26	64	27	1	34	880	25	2	122	1181
	2.2%	5.4%	2.3%	.1%	2.9%	74.5%	2.1%	.2%	10.3%	100.0%
	.8%	4.2%	3.2%	1.5%	12.2%	70.1%	6.1%	1.1%	2.5%	9.4%
무 급	5	8	5	1	4	30	307	0	48	408
	1.2%	2.0%	1.2%	.2%	1.0%	7.4%	75.2%	.0%	11.8%	100.0%
	.2%	.5%	.6%	1.5%	1.4%	2.4%	74.5%	.0%	1.0%	3.2%
실 업 자	58	108	34	9	2	16	2	49	127	405
	14.3%	26.7%	8.4%	2.2%	.5%	4.0%	.5%	12.1%	31.4%	100.0%
	1.8%	7.1%	4.1%	13.4%	.7%	1.3%	.5%	25.8%	2.6%	3.2%
비 영 활	125	298	235	34	12	94	53	54	3992	4897
	2.6%	6.1%	4.8%	.7%	.2%	1.9%	1.1%	1.1%	81.5%	100.0%
	3.9%	19.7%	28.2%	50.7%	4.3%	7.5%	12.9%	28.4%	83.1%	38.9%
전 체	3229	1514	833	67	278	1256	412	190	4806	12585
	25.7%	12.0%	6.6%	.5%	2.2%	10.0%	3.3%	1.5%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4차 및 제5차. 원자료.

노동이동 유형별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이행 제1유형(노동시장내 이동)은 총 1,588명이다. 이는 2008~2009년에 걸쳐 노동시장 내에 머물렀던 6,509명 중 24.4%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바꾸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에는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사례(157명)와 역으로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사례(117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를 오가는 경우로서 작금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의 창업과 폐업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들이다.

노동이행 제2유형(고용 ↔ 실업 간 이동) 사례는 총 316명이다. 이는

2008년 실업상태가 있다가 2009년 취업자로 옮겨간 229명과 역으로 2008년 취업자였던 자가 2009년 실업자로 이행한 87 명을 합한 숫자이다. 고용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경우의 수가 실업에서 고용으로 이동한 수보다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에서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장 비경활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이행 제3유형(교육·훈련 ↔ 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282명으로서 2008년에 학업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2009년 취업된 경우(220명)와 역으로 2008년에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학업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경우(62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이행 제4유형(가사활동 ↔ 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529명이다. 이 유형에는 2008년 가사(가사, 양육, 간병)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2009년 취업한 경우(271명)와 2008년 취업자였으나 가사(가사, 양육, 간병)로 인해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경우(258명)가 포함된다.

노동이행 제5유형(은퇴 ↔ 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279명이다. 이 유형에는 2008년 취업자였으나 2009년 은퇴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231명)와 2008년 은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였으나 2009년 취업자로 전환한 경우(48명)가 포함된다. 여기서 은퇴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비경제활동사유로서 근로무능력,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없음을 답한 자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제3절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1. 노동이행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본 분석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 즉,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이행이 일어난 3,623명이 이 기간 중 취업지원 서비스(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를 이용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빈곤가구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경상소득이 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노동이행 유형별로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고용 ↔ 실업 간 이동 > 은퇴 ↔ 고용 간 이동 > 교육훈련 ↔ 고용 간 이동 > 가사활동 ↔ 고용 간 이동 > 노동시장내 이동 순으로 서비스 이용비율을 보인다. 이에 반해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고용 ↔ 실업 간 이동 > 은퇴 ↔ 고용 간 이동 > 가사활동 ↔ 고용 간 이동 > 노동시장내 이동 > 교육훈련 ↔ 고용 간 이동 순으로 서비스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 ↔ 실업 간 이동과 은퇴 ↔ 고용 간 이동시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두 유형의 노동이행이 고용보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2〉 노동이행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일반가구	빈곤가구
노동시장내 이동	5.4	7.0
고용 ↔ 실업 간 이동	14.8	16.5
교육·훈련 ↔ 고용 간 이동	8.2	5.3
가사활동 ↔ 고용 간 이동	7.8	9.2
은퇴 ↔ 고용 간 이동	14.7	11.2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4차 및 제5차. 원자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노동시장내 이동, 고용 ↔ 실업 간 이동, 가사활동 ↔ 고용 간 이동시에 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고, 교육훈련 ↔ 고용 간 이동과 은퇴 ↔ 고용간 이동시에는 일반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다. 이동유형별로 양 집단 간에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이행시 취업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일반가구와 빈곤가구간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몇몇 이동유형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10% 이하인 경우가 있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 ↔ 고용 간 이동시 대분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노동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2. 노동이행에서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수급 실태

노동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노동이행을 전후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소득보장체계 상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연금급여,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등이 가능하다. 각 제도별 실제 수급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노동이행 유형별 공적연금 수급 비율 (%)

	일반계층	빈곤계층
노동시장내 이동	5.7	7.6
고용 → 실업 이동	5.8	5.6
고용 → 교육·훈련 이동	0.0	0.0
고용 → 가사활동 이동	2.9	9.8
고용 → 은퇴 이동	34.1	20.4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4차 및 제5차. 원자료.

고용에서 은퇴로 노동이행이 일어나는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보장비율이 일반계층 34.1%, 빈곤계층 20.4%이다. 외형적으로는 전국민 연금화가 이뤄져 있지만 아직은 은퇴자의 1/4 정도만이 은퇴 시에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고용 → 가사활동의 이동시에도 빈곤계층은 10% 정도의 비율로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주된 목적이 은퇴와 장애 발생시의 소득중단에 대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가사활동과 고용간의 노동이행에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들은 가사활동을 위해 고용에서 물러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은퇴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내 이동에서도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5 ~ 7% 정도 존재하는 것은 연금수령자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연금액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 노동이행 유형별 퇴직금·퇴직연금 수급 비율 (%)

	일반계층	빈곤계층
노동시장내 이동	6.5	4.7
고용 → 실업 이동	36.8	5.6
고용 → 교육·훈련 이동	0.0	0.0
고용 → 가사활동 이동	5.3	0.0
고용 → 은퇴 이동	18.3	5.1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4차 및 제5차. 원자료.

노동이행시 퇴직금 수급비율을 보면 일반계층의 경우 고용 → 은퇴 이동 시 가장 빈번하게 퇴직금을 받고 있고, 다음으로 고용과 실업간 이동시에도 퇴직금 수급율이 높다. 이에 비해 빈곤계층은 고용 → 실업 이동시나 고용 → 은퇴 이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현저히 낮다. 빈곤계층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잦은 직장이동으로 퇴직금 수급에 요구되는 최소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정된다.

〈표 5-5〉 노동이행 유형별 고용보험 급여 수급 비율 (%)

	일반계층	빈곤계층
노동시장내 이동	1.7	3.0
고용 → 실업 이동	42.6	5.3
고용 → 교육·훈련 이동	0.0	0.0
고용 → 가사활동 이동	9.7	3.9
고용 → 은퇴 이동	11.9	1.0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4차 및 제5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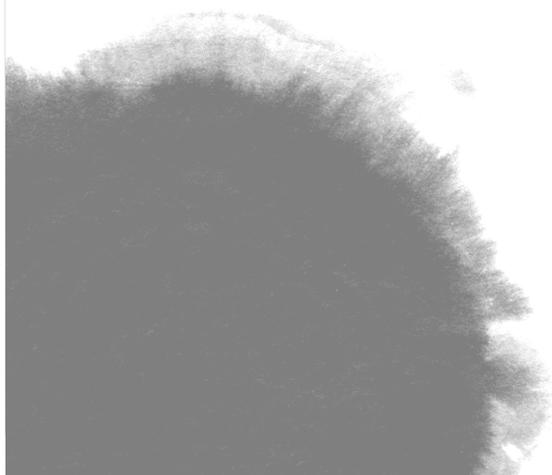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고용보험은 실업시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일반계층의 경우 고용 → 실업간 이동(42.6%), 고용 → 은퇴 간 이동(11.9%), 고용 → 가사활동간 이동(9.7%) 시에 고용보험으로부터

터 급여를 받고 있다. 빈곤계층의 경우에도 각 유형의 노동이행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나 수급기구의 비율이 일반계층보다 낮다. 고용보험이 전체 취업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빈곤계층의 취업자집단에서 더 넓기 때문이다.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대처·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양극화가 더욱 고질적인 양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 정부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친서민정책을 강구·추진하고 공정사회의 구현을 국정목표를 삼았다.

본 연구는 현 사회의 주요 이슈인 공정성과 이러한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과제인 근로빈곤층 증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공정성의 실태와 평가를 하였다. 근로계층에 대한 분석은 공정성 측면에서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특히 빈곤은 공정성의 커다란 위기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회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공정성과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이 다른 조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여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적절성과 만족도

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근로빈곤층의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친기업 경제정책논리에 따라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최저임금제,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 있다. 더욱이 이들 정책들에 대한 예산지출 확대를 기대하는 바도 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회공정성과 계층별, 연령별,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별하게 효과가 낮은 정책들에서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식의 차이가 양극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정치성향이 그러하다. 사회공정성에 대하여 보수·중도층이 진보층에 비해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 탓으로 문제삼는 사람일수록 공정성이 날로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중도, 보수의 순으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불만 의견을 밝히고 있었다. 아울러 빈곤층 지원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과 지지의사는 이전의 조사결과와 달리 긍정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빈곤층 지원의 증세의사에 대해 남성, 빈곤원인을 사회구조로 인식, 실업자 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면 중졸 이하·고졸·전문대졸의 학력과 보수·중도의 정치성향 그리고 자영지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납세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하는 경우에는 복지·증세의 선순환을 도모·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근로계층의 빈곤실태 분석결과, 정태적 접근에서 절대적 빈곤을 살펴보면 동기간 동안의 총가구에 대한 절대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에 의한 총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에 의한 총빈곤율이 10%p 이상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적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을 도출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빈

곤율이 낮았으며, 취업근로자가 비취업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무자 다른 어떤 종사상 지위보다 빈곤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빈곤선을 당해 연도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50%를 선정하고, 빈곤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1회 이상 빈곤을 접한 경우가 51.4%로 절반 이상이였다. 1회만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가 빈곤을 탈피한 경우(2008년에 새롭게 빈곤층에 진입한 경우 포함)는 8.8%인데, 2005년에 빈곤층에 있다가 탈피한 경우가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회 빈곤인 경우에는 2회 연속 빈곤상태에 있는 경우와 빈곤을 탈출했다가 다시 빈곤에 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빈곤 재진입 비율이 3.5%로 2회 연속 빈곤에 접한 5.3%보다 적었으나 빈곤층에 재진입하는 가구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회 이상 빈곤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 2.6%와 빈곤에 재진입한 가구 4.4%, 초기 3년간 빈곤에 있다가 빈곤을 벗어난 가구 3.3%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회 연속 빈곤층에 있는 19.6%는 빈곤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가구원수·가구주 성별·연령·학력·종사상 지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변수에 의하면 4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가구원수별로 빈곤율 변화가 U자 형태를 보였다. 가구주 성별 빈곤율은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빈곤에 접할 기회가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20대 이하를 제외하고서는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한국 사회에서 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를 보았을 때는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상용직이 다른 어떠한 종사상 지위보다 빈곤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2008년과 2009년의 근로빈곤층의 특성분석을 통

해 근로빈곤대책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9년보다 소폭이나마 2010년에 빈곤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계측되었으나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빈곤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상을 분명하게 표적화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위기직후 빈곤상태가 악화된 계층 즉, 20대 가구주 가구와 60대 초반 가구주 가구,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 중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 가구 등으로 특히 청년 가구주와 고학력 가구주에 대한 노동시장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시직, 기타근로자(방문 판매 등), 실업자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층 노동이행과정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까닭에 고용보험미가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다.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가입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빈곤한 취업자의 노동이행이 배제적 이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지원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서비스의 존재를 알더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심리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리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에서도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행노동시장이론에 의하면 노동이동은 생애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그리고 각 노동이행을 전후하여 소득상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원활한 노동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일부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소득지원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보장은 은퇴와 실업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을 위한 노동이행시에는 소득지원이 매우 미약하다. 노동시장내 이동시에도 공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의해 일부 소득지원이 되고 있을 뿐이다.

교육훈련, 특히 취업 후 받는 기술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업, 직종 종사자는 재교육을 통하여 보다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간 중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망된다.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의 실직급여 수급요건을 비자발적 실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교육훈련을 위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인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한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행에 소요되는 마찰적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면서 취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수급자격으로서 요구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 자녀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저소득취업계층의 소득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율도 매우 낮고, 퇴직금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만약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자가 되면 노동이행을 전후하여 불안해지는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제2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1. 사회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의 기본방향

한국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존의 조건이며, 이는 공동체의 세대간·계층간 공정성 및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전 생애주기 위험에 대응가능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요구된다. 개인 단위에서 유연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훈련 투자를 격차 없이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표준화된 노동생애주기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유연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근로계층은 교육, 훈련, 소득지원을 통해 재상품화를 통한 직업전환의 안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성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제도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가 실현되어야 한다. 가처분소득 단계에서 근로연령세대와 노령세대의 필요소득을 고려한 형평적 배분의 원칙이 재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계층별 위험에 대응가능한 기본생활 보장의 국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득양극화, 빈곤율 증가, 불평등 지수 악화, 실업률 증가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하므로 국가부문의 개입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소득보장의 전제하에서 서비스 지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괜찮은 일자리, 직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체계의 합리화와 정치문화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기반으로 이념, 정당,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의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신뢰에 기반 한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공공의 개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근로빈곤, 청년인턴,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네트워크의 확충도 되어야 한다. 동시에 향후 경제사회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고용정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찾아주는 정책에서 근로자의 생애기간 동안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정책(Life Transitions Support Policies)으로 전환하는 비전과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동체 즉,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 등의 상호상생의 의식과 태도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상호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 문화로의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이 진정한 공정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2. 사회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의 실천적 과제

친서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은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기회평등을 목표로 세대간·계층간 공정성 확보 측면의 정책수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세대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재정에 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계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리운영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언제 어떻게 급여액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

는 실정이므로 인상방안의 구체화가 먼저 요구된다(정경희, 2009). 또한 고령사회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를 통하여 노후 빈곤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청장년층의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방향은 옳바르다고 판단되지만, 세밀한 정책 보완 노력이 지속될 필요하다(채창균, 2011).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상담원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되므로, 고용센터내 업무 재조정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인력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OECD(2004), CEDEFOP(2004) 등도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진로지도가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인력 확충이 중요시 된다(나영선 외, 2008). 자활대상자의 2단계 취업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능력이 크게 부족하고 일을 하려는 동기부여도 미흡한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제고나 디딤돌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동기부여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2단계 취업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활대상자의 훈련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의욕 증진 및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상담 단계에서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탁기관의 자체 모집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모집과 취업역량 평가를 통한 위탁대상자 선정을 고용센터가 담당함으로써 creaming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와 훈련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채창균 외, 2010). 산업수요와 관계없이 일부 훈련직종으로의 쓸림현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속발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훈련생들이 선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의 직종별 차등화를

더욱 확대하고, 훈련계좌발급을 인력수급과 연계하여 인력과잉 직종에 대한 계좌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사회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의 취업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취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성공률의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새로일하기사업)-여성가장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취업성공여부는 구직자의 프로파일링과 구인처 발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양하고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취업상담사의 역량강화, 구인발굴시스템의 구축,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 재원을 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중숙, 2011). 이와 함께 여성의 빈곤완화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여성가구주는 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취업에 있어 돌봄관련 문제 등 취업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이 더욱 필요한 계층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 정책, 돌봄정책, 소득지원정책 등 복지-고용-교육 등을 연계하는 원스탑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노동-교육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편 및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4대 축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기관, 학교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취업정보센터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읍면·동사무소는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을 지자체 취업정보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파견하여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전적으로 사회참여 준비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직업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노동부 고용지원 조직과 연계를 맺어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신욱 외(2011).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김기덕(2005).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6, pp.67-90.
- 김동현(2011). TLM이론의 개관. 정병석, 박능후, 김동현(편).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한국고용정보원, pp.3-25.
- 김동현(2009). TLM과 고용서비스 개혁 : 유럽의 경험. **TLM과 고용서비스 포럼**, pp.1-41.
- 김성훈(2008). 경력직 직장이동에 대한 연구: 비생산직 외부노동시장의 확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4(1), pp.53-89.
- 김종숙(2011). 여성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빈곤 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미발간자료.
- 김주성(2011). **공정사회 1년의 회고와 공생발전의 과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 국민토론회 자료집.
- 김혜연(2000). 기혼여성의 노동이동 가능성: 노동이동 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9), pp.143-157.
- 나영선 외(2008).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혁신(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대명 외(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8).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 박승록 외(2010).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한국경제연구원
- 신광영(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38(1), pp.25-50.
- 신정완(2002). 사회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수행·신정완(편).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87-338.
- 심연수(1998). **복지국가와 정의**. 인간사랑.
- 윤평중(2011). 공정한 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이병희(2011). 근로빈곤의 추이와 동태적변화. **보건복지포럼**, 181, pp.33-41.
- 이병희(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노동경제논집**, 28(1), pp.1-28.
- 이병희, 반정호(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통권 75호**
- 정경희(2009).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6, pp.6-14.
- 채창균(2011). 탈수급지원훈련 지원방안.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미발간자료
- 채창균 외(2010).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혁신(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orning, Peter(2011). 박병화 역.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에코리브르
- CEDEFOP(2004). *Guidq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Cedefop Panorama series; 85.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 Sandel, Michael J.(2010).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 Schmid, Günter(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Discussion Papers from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WZB), Research Unit: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No FS I 98-206.
- Schömann, K. and Liuben Siarov(2005). Market Failure as a Source of Underinvestment in Further Training. *Mutual Learning Programme Thematic Review Seminar* “Sharing Costs and Responsibilities for Lifelong Learning” (Brussels, 28.09.2005).

통계청(각 연도), 전국가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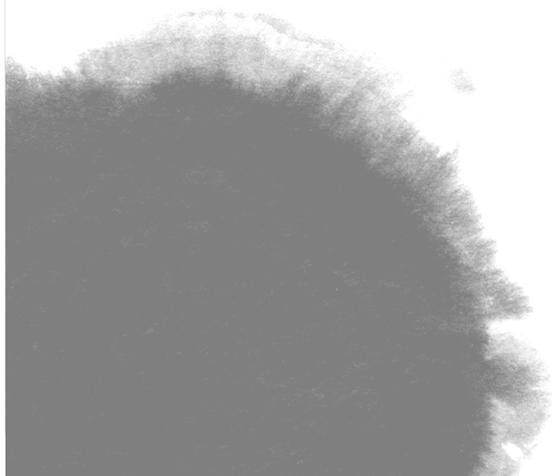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 록







부록

[부록1] 전화조사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지역 ID		조사표 ID				조사원 ID	

조사자	전화조사일시	2011년__월__일	<input type="checkbox"/> ① 오전	<input type="checkbox"/> ② 오후	
			시 분 ~	시 분	
조사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충북
	<input type="checkbox"/> ⑪ 충남	<input type="checkbox"/> ⑫ 전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경북	<input type="checkbox"/> ⑮ 경남
	<input type="checkbox"/> ⑯ 제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년 07월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해졌다 ② 약간 공정해졌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공정해졌다 ⑤ 매우 불공정해졌다.

2. 귀하는 본인이 이행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하다 ② 약간 공정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공정하다 ⑤ 매우 불공정하다

3. 귀하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제고-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약자 배려 ② 법치주의의 정립 ③ 기회균등
 ④ 시민의식 제고 ⑤ 관용(차이의 인정)
 ⑥ 기타(무엇:_____)

4. 현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 추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어느 정도 적절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적절치 않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5. 귀하는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정도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6. 귀하는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생계지원정책(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 ② 보건·의료보장 정책
- ③ 주거복지정책(국민임대주택, 주택자금 융자 등)
- ④ 물가안정정책
- ⑤ 청년실업 해소정책
- ⑥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 ⑦ 보육·교육비 부담완화 정책
- ⑧ 기타(무엇:_____)

7. 귀하는 정부의 현재 친서민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보금자리주택 공급
- ② 대학생 학자금 대출(튼튼학자금 등)
- ③ 긴급생계지원
- ④ 서민대출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등)
- ⑤ 저소득층 자립지원(EITC 근로장려세제, 희망키움통장)
- 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간병돌보미 등)
- ⑦ 사회적 기업 활성화
- ⑧ 희망근로 프로젝트(공공일자리 창출)
- ⑨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
- ⑩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 실시

8. 귀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근로빈곤층은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9. 귀하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음의 정책영역에서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십니까?

(다, 모든 영역에서 지출을 늘리는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사회정책 분야	8. 잘하고 있는가?					9. 정부지출은?				
	① 매우 잘함	② 잘함	③ 보통	④ 잘못함	⑤ 매우 잘못함	① 훨씬 더 많이 지출	② 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 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
(1)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3) 취업-창업 알선 및 지원										
(4) 직업훈련 지원										
(5) 근로장려세제 (EITC)										
(6) 서민금융지원 (마이크로크레디트, 미소금융, 햇살론 등)										
(7) 영세자영업 지원										
(8) 실업안전망 확충 (실업수당의 대상 및 수준 제고)										
(9) 최저임금 인상										
(10) 사회보험 감면 및 지원										
(11) 주거지원 (임대주택 등)										

10. 귀하는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가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 ② 재능이 부족하여
- ③ 개인적으로 불운하여
- ④ 빈부격차를 낳는 사회구조의 탓
- ⑤ 기타(무엇:)

11. 귀하는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3. 연령	만 _____세
14.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유배우 ③ 기혼 무배우(이혼, 사별)
15.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이상
16. 정치성향	① 매우 보수적 ② 보수적 ③ 중도적 ④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17. 고용상태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학생, 연로자, 가정주부, 군복무자 등)
18. 월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19. 가구원 수 (취업 가구원 수)	1) 총 가구원 수 _____명 2) 취업 가구원 수 _____명
20. 거주지역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군, 읍, 면, 리)



〈부표 1〉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5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2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3	총수	빈곤층	빈곤율
성명직	1,587 (5,390)	55 (153)	3.5 (2.8)	임금 빈곤층	3,013 (9,652)	411 (1,184)	13.6 (12.3)	취업 빈곤층	4,355 (13,228)	1,013 (2,615)	23.3 (19.8)	경제 활동 빈곤층	4,549 (13,677)	1,144 (2,923)	25.2 (21.4)
임시직	880 (2,751)	138 (435)	15.7 (15.8)												
일용직	491 (1,373)	172 (481)	35.0 (35.0)												
공공근로	55 (138)	46 (115)	83.6 (83.3)	비임금 빈곤층	1,342 (3,576)	602 (1,431)	44.9 (40.0)	미취업 빈곤층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고용주	80 (274)	6 (15)	7.5 (5.5)												
자영업자	1,257 (3,293)	591 (1,407)	47.0 (42.7)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67 (2,034)	74.1 (74.7)	비경황 빈곤층	1,576 (2,724)	1,167 (2,034)	74.1 (74.7)	1,382 (2,275)	1,036 (1,726)	75.0 (75.9)	
무급 가족종사	5 (9)	5 (9)	100.0 (100.0)												
실업자	194 (449)	131 (308)	67.5 (68.6)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비경황	1,382 (2,275)	1,036 (1,726)	75.0 (75.9)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2〉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6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1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2	총수	빈곤층	빈곤율	층위3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상용직	1,587 (5,390)	55 (153)	3.5 (2.8)	층위1 임금 빈곤층	3,013 (9,652)	411 (1,184)	13.6 (12.3)	취업 빈곤층	4,355 (13,228)	1,013 (2,615)	23.3 (19.8)	경제 활동 빈곤층	4,549 (13,677)	1,144 (2,923)	25.2 (21.4)	
임시직	880 (2,751)	138 (435)	15.7 (15.8)													
일용직	491 (1,373)	172 (481)	35.0 (35.0)													
공공근로	55 (138)	46 (115)	83.6 (83.3)													
고용주	80 (274)	6 (15)	7.5 (5.5)													
자영업자	1,257 (3,293)	591 (1,407)	47.0 (42.7)	비임금 빈곤층	1,342 (3,576)	602 (1,431)	44.9 (40.0)									
무급 가족종사	5 (9)	5 (9)	100.0 (100.0)													
실업자	194 (449)	131 (308)	67.5 (68.6)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67 (2,034)	74.1 (74.7)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67 (2,034)	74.1 (74.7)	비경향 빈곤층	1,382 (2,275)	1,036 (1,726)	75.0 (75.9)	
비경향	1,382 (2,275)	1,036 (1,726)	75.0 (75.9)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합계	5,931 (15,952)	2,180 (4,649)	36.8 (29.1)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4)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1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2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3	총수	빈곤층	빈곤율	
																임금
상용직	1,875 (6,327)	27 (99)	1.4 (1.6)													
임시직	709 (2,144)	64 (192)	9.0 (9.0)	임금 빈곤층	3,074 (9,824)	248 (710)	8.1 (7.2)									
일용직	449 (1,262)	136 (371)	30.3 (29.4)													
공공근로	41 (91)	21 (48)	51.2 (52.7)					취업 빈곤층	4,296 (12,861)	610 (1,471)	14.2 (11.4)	경제 활동 빈곤층	4,410 (13,138)	663 (1,600)	15.0 (12.2)	
고용주	145 (508)	9 (24)	6.2 (4.7)													
지영업자	1,076 (2,527)	353 (737)	32.8 (29.2)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362 (761)	29.6 (25.1)									
무급 가족종사	1 (2)	0 (0)	0.0 (0.0)													
실업자	114 (277)	53 (129)	46.5 (46.6)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049 (1,707)	64.1 (64.0)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049 (1,707)	64.1 (64.0)	비경활 빈곤층	1,522 (2,392)	996 (1,578)	65.4 (66.0)	
비경활	1,522 (2,392)	996 (1,578)	65.4 (66.0)					합계	5,932 (15,530)	1,659 (3,178)	28.0 (20.5)	합계	5,932 (15,530)	1,659 (3,178)	28.0 (20.5)	
합계	5,932 (15,530)	1,659 (3,178)	28.0 (20.5)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6> 경상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6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상용직	2,164 (7,226)	34 (122)	1.6 (1.7)																
임시직	426 (1,300)	30 (88)	7.0 (6.8)	임금 빈곤층	3,110 (9,933)	182 (496)	5.9 (5.0)												
일용직	460 (1,261)	95 (230)	20.7 (18.2)																
공공근로	60 (146)	23 (56)	38.3 (38.4)																
고용주	124 (433)	4 (16)	3.2 (3.7)																
지영업자	1,133 (2,895)	269 (623)	23.7 (21.5)	비임금 빈곤층	1,259 (3,334)	273 (639)	21.7 (19.2)												
무급 가족종사	2 (6)	0 (0)	0.0 (0.0)																
실업자	166 (374)	69 (151)	41.6 (40.4)	미취업 빈곤층	1,562 (2,619)	693 (1,117)	44.4 (42.6)												
비경황	1,396 (2,245)	624 (966)	44.7 (43.0)																
합계	5,931 (15,886)	1,148 (2,252)	19.4 (14.2)	합계	5,931 (15,886)	1,148 (2,252)	19.4 (14.2)	합계	5,931 (15,886)	1,148 (2,252)	19.4 (14.2)	합계	5,931 (15,886)	1,148 (2,252)	19.4 (14.2)	합계	5,931 (15,886)	1,148 (2,252)	19.4 (14.2)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7〉 경상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7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1 (7,209)	12 (43)	0.6 (0.6)																					
임시직	438 (1,313)	23 (62)	5.3 (4.7)				임금 빈곤층		3,202 (10,115)	134 (349)	4.2 (3.5)													
일용직	551 (1,463)	91 (226)	16.5 (15.4)																					
공공근로 응급근로	52 (130)	8 (18)	15.4 (13.8)						4,402 (13,188)	366 (877)	8.3 (6.6)							4,526 (13,459)	409 (975)	9.0 (7.2)				
고용주	148 (529)	3 (10)	2.0 (1.9)																					
자영업자	1,052 (2,544)	229 (518)	21.8 (20.4)				비임금 빈곤층		1,200 (3,073)	232 (528)	19.3 (17.2)													
무급 가족종사	0 (0)	0 (0)	0.0 (0.0)																					
실업자	124 (271)	43 (98)	34.7 (36.2)																					
비경황	1,406 (2,219)	581 (888)	41.3 (40.0)				미취업 빈곤층		1,530 (2,490)	624 (986)	40.8 (39.6)							1,406 (2,219)	581 (888)	41.3 (40.0)				
합계	5,932 (15,678)	990 (1,863)	16.7 (11.9)				합계		5,932 (15,678)	990 (1,863)	16.7 (11.9)							5,932 (15,678)	990 (1,863)	16.7 (11.9)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필호 인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8〉 경상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상용직	1,875 (6,327)	11 (39)	0.6 (0.6)													
임시직	709 (2,144)	22 (70)	3.1 (3.3)	임금 빈곤층	3,074 (9,824)	105 (290)	3.4 (3.0)									
일용직	449 (1,262)	64 (165)	14.3 (13.1)													
공공근로	41 (91)	8 (16)	19.5 (17.6)					취업 빈곤층	4,296 (12,861)	278 (684)	6.5 (5.3)	경제 활동 빈곤층	4,410 (13,138)	309 (758)	7.0 (5.8)	
고용주	145 (508)	8 (23)	5.5 (4.5)													
지영업자	1,076 (2,527)	165 (371)	15.3 (14.7)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173 (394)	14.2 (13.0)									
무급 가족종사	1 (2)	0 (0)	0.0 (0.0)													
실업자	114 (277)	31 (74)	27.2 (26.7)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565 (874)	34.5 (32.7)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565 (874)	34.5 (32.7)	비경황 빈곤층	1,522 (2,392)	534 (800)	35.1 (33.4)	
비경황	1,522 (2,392)	534 (800)	35.1 (33.4)					합계	5,932 (15,530)	843 (1,558)	14.2 (10.0)	합계	5,932 (15,530)	843 (1,558)	14.2 (10.0)	
합계	5,932 (15,530)	843 (1,558)	14.2 (10.0)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1〉 가치분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7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빈곤율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층	빈곤율	총위	빈곤율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1 (7,209)	14 (51)	0.6 (0.7)																	
임시직	438 (1,313)	24 (64)	5.5 (4.9)	임금 빈곤층	3,202 (10,115)	137 (359)	4.3 (3.5)													
일용직	551 (1,463)	91 (226)	16.5 (15.4)																	
공공근로	52 (130)	8 (18)	15.4 (13.8)	취업 빈곤층	4,402 13,188	371 896	8.4 6.8								경제 활동 빈곤층					
고용주	148 (529)	3 (10)	2.0 (1.9)																	
자영업자	1,052 (2,544)	231 (527)	22.0 (20.7)	비임금 빈곤층	1,200 (3,073)	234 (537)	19.5 (17.5)													
무급 가족종사	0 (0)	0 (0)	0.0 (0.0)																	
실업자	124 (271)	43 (98)	34.7 (36.2)	미취업 빈곤층	1,530 (2,490)	625 (987)	40.8 (39.6)													
비경황	1,406 (2,219)	582 (889)	41.4 (40.1)	미취업 빈곤층	1,530 2,490	625 987	40.8 39.6								비경황 빈곤층					
합계	5,932 (15,678)	996 (1,883)	16.8 (12.0)	합계	5,932 (15,678)	996 (1,883)	16.8 (12.0)							합계	5,932 (15,678)	996 (1,883)	16.8 (12.0)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2) 가치분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절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상용직	1,875 (6,327)	11 (39)	0.6 (0.6)														
임시직	709 (2,144)	27 (85)	3.8 (4.0)	임금 빈곤층	3,074 (9,824)	112 (310)	3.6 (3.2)										
일용직	449 (1,262)	66 (170)	14.7 (13.5)														
공공근로	41 (91)	8 (16)	19.5 (17.6)					취업 빈곤층	4,296 (12,861)	288 (711)	6.7 (5.5)						
고용주	145 (508)	8 (23)	5.5 (4.5)														
지영업자	1,076 (2,527)	168 (378)	15.6 (15.0)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176 (401)	14.4 (13.2)										
무급 가족종사	1 (2)	0 (0)	0.0 (0.0)														
실업자	114 (277)	33 (78)	28.9 (28.2)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573 (894)	35.0 (33.5)										
비경황	1,522 (2,392)	540 (816)	35.5 (34.1)														
합계	5,932 (15,530)	861 (1,605)	14.5 (10.3)	합계	5,932 (15,530)	861 (1,605)	14.5 (10.3)	합계	4,410 (13,138)	321 (789)	7.3 (6.0)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3〉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5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1,587 (5,390)	57 (155)	3.6 (2.9)																			
임시직	880 (2,751)	136 (377)	15.5 (13.7)		임금 빈곤층					3,013 (9,652)	437 (1,121)	14.5 (11.6)										
일용직	491 (1,373)	208 (502)	42.4 (36.6)																			
공공근로 응급근로	55 (138)	36 (87)	65.5 (63.0)																			
고용주	80 (274)	9 (23)	11.3 (8.4)																			
자영업자	1,257 (3,293)	650 (1,457)	51.7 (44.2)		비임금 빈곤층					1,342 (3,576)	663 (1,485)	49.4 (41.5)										
무급 가족종사	5 (9)	4 (5)	80.0 (55.6)																			
실업자	194 (449)	134 (308)	69.1 (68.6)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73 (1,928)	74.4 (70.8)										
비경황	1,382 (2,275)	1,039 (1,620)	75.2 (71.2)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비경황 빈곤층 합계																						
1,382 (2,275) 5,931 (15,952)																						
1,039 (1,620) 2,273 (4,534)																						
75.2 (71.2) 38.3 (28.4)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4) 시장소득 근로빈곤증 현황 : 2006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4 (7,229)	108 (346)	5.0 (4.8)												
임시직	426 (1,300)	107 (314)	25.1 (24.2)	임금 빈곤층	3,110 (9,936)	490 (1,330)	15.8 (13.4)								
일용직	460 (1,261)	223 (543)	48.5 (43.1)												
공공근로	60 (146)	52 (127)	86.7 (87.0)						4,369 (13,270)	1,066 (2,589)	24.4 (19.5)	경제 활동 빈곤층	4,549 (13,677)	1,234 (2,914)	27.1 (21.3)
고용주	4,535 (13,644)	1,193 (2,876)	26.3 (21.1)												
지영업자	124 (433)	6 (21)	4.8 (4.8)	비임금 빈곤층	비임금 빈곤층										
무급 가족종사		4 (5)	80.0 (55.6)												
실업자	1,133 (2,895)	569 (1,235)	50.2 (42.7)	1,259 (3,334)	2 (6)	1 (3)	50.0 (50.0)	45.8 (37.8)		1,173 (1,928)	74.4 (70.8)				
비정규 직	166 (374)	127 (287)	76.5 (76.7)	4		1,562 (2,619)				1,276 (2,082)		미취업 빈곤층		미취업 빈곤층	
합계	1,396 (2,245)	1,149 (1,795)	82.3 (80.0)	비정규 직 빈곤층	1,396 (2,245)	1,149 (1,795)	82.3 (80.0)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5〉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7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1 (7,209)	78 (244)	3.6 (3.4)	임금 빈곤층	3,202 (10,115)	486 (1,264)	15.2 (12.5)	취업 빈곤층	4,402 (13,188)	1,030 (2,419)	23.4 (18.3)	경계환 등 빈곤층	4,526 (13,459)	1,117 (2,607)	24.7 (19.4)							
임시직	438 (1,313)	94 (267)	21.5 (20.3)																			
일용직	551 (1,463)	271 (644)	49.2 (44.0)																			
공공근로	52 (130)	43 (109)	82.7 (83.8)																			
고용주	148 (529)	5 (18)	3.4 (3.4)																			
자영업자	1,052 (2,544)	539 (1,137)	51.2 (44.7)	비임금 빈곤층	1,200 (3,073)	544 (1,155)	45.3 (37.6)															
무급 가족종사	0 (0)	0 (0)	0.0 (0.0)																			
실업자	124 (271)	87 (188)	70.2 (69.4)	미취업 빈곤층	1,530 (2,490)	1,256 (2,003)	82.1 (80.4)	미취업 빈곤층	1,53 (2,490)	1,256 (2,003)	82.1 (80.4)											
비경활	1,406 (2,219)	1,169 (1,815)	83.1 (81.8)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8.5 (28.2)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8.5 (28.2)	비경활 빈곤층	1,406 (2,219)	1,169 (1,815)	83.1 (81.8)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5 (28.2)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8.5 (28.2)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8.5 (28.2)	합계	5,932 (15,678)	2,286 (4,422)	38.5 (28.2)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6) 시장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1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2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3	총수	빈곤층	빈곤율	
																임금
상용직	1,875 (6,327)	56 (181)	3.0 (2.9)													
임시직	709 (2,144)	116 (330)	16.4 (15.4)	임금 빈곤층	3,074 (9,824)	405 (1,092)	13.2 (11.1)									
일용직	49 (1,262)	197 (505)	43.9 (40.0)													
공공근로	41 (91)	36 (76)	87.8 (83.5)						4,296 (12,861)	966 (2,220)	22.5 (17.3)	경제 활동 빈곤층	4,410 (13,138)	1,036 (2,379)	23.5 (18.1)	
고용주	145 (508)	9 (24)	6.2 (4.7)													
지영업자	1,076 (2,527)	551 (1,102)	51.2 (43.6)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561 (1,128)	45.9 (37.1)									
무급 가족종사	1 (2)	1 (2)	100.0 (100.0)													
실업자	114 (277)	70 (159)	61.4 (57.4)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360 (2,155)	83.1 (80.7)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360 (2,155)	83.1 (80.7)	비경활 빈곤층	1,522 (2,392)	1,290 (1,996)	84.8 (83.4)	
비경활	1,522 (2,392)	1,290 (1,996)	84.8 (83.4)													
합계	5,891 (15,439)	2,290 (4,299)	38.9 (27.8)	합계	5,891 (15,439)	2,290 (4,299)	38.9 (27.8)	합계	5,891 (15,439)	2,290 (4,299)	38.9 (27.8)	합계	5,891 (15,439)	2,290 (4,299)	38.9 (27.8)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8) 경상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6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1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2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3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4 (7,229)	36 (115)	1.7 (1.6)												
임시직	426 (1,300)	40 (102)	9.4 (7.8)	임금 빈곤층	3,110 (9,936)	231 (544)	7.4 (5.5)								
일용직	460 (1,261)	130 (275)	28.3 (21.8)												
공공근로	60 (146)	25 (52)	41.7 (35.6)					취업 빈곤층	4,369 (13,270)	582 (1,296)	13.3 (9.8)	경계할 동 빈곤층	4,535 (13,644)	662 (1,464)	14.6 (10.7)
고용주	124 (433)	3 (10)	2.4 (2.3)												
지영업자	1,133 (2,895)	348 (742)	30.7 (25.6)	비임금 빈곤층	1,259 (3,334)	351 (752)	27.9 (22.6)								
무급 가족종사	2 (6)	0 (0)	0.0 (0.0)												
실업자	166 (374)	80 (168)	48.2 (44.9)	미취업 빈곤층	1,562 (2,619)	934 (1,418)	59.8 (54.1)	미취업 빈곤층	1,562 (2,619)	934 (1,418)	59.8 (54.1)		1,396 (2,245)	854 (1,250)	61.2 (55.7)
비경활	1,396 (2,245)	854 (1,250)	61.2 (55.7)												
합계	5,871 (15,743)	1,491 (2,662)	25.4 (16.9)	합계	5,871 (15,743)	1,491 (2,662)	25.4 (16.9)	합계	5,871 (15,743)	1,491 (2,662)	25.4 (16.9)	합계	5,871 (15,743)	1,491 (2,662)	25.4 (16.9)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19〉 경상소득 근로민간증 현황 : 2007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2,161 (7,209)	54 (159)	2.5 (2.2)																				
임시직	438 (1,313)	70 (181)	16.0 (13.8)	임금 빈곤층																			
일용직	551 (1,463)	242 (546)	43.9 (37.3)																				
공공근로	52 (130)	28 (67)	53.8 (51.5)																				
고용주	148 (529)	5 (18)	3.4 (3.4)																				
자영업자	1,052 (2,544)	480 (1,014)	45.6 (39.9)	비임금 빈곤층																			
무급 가족종사	0 (0)	0 (0)	0.0 (0.0)																				
실업자	124 (271)	73 (155)	58.9 (57.2)	미취업 빈곤층																			
비경활	1,406 (2,219)	1,047 (1,551)	74.5 (69.9)																				
합계	5,932 (15,678)	1,999 (3,691)	33.7 (23.5)	합계																			
				합계																			
				미취업 빈곤층																			
				취업 빈곤층																			
				경제활 동 빈곤층																			
				비경활 빈곤층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부표 20) 경상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상용직	1,875 (6,327)	45 (147)	2.4 (2.3)																	
임시직	709 (2,144)	91 (252)	12.8 (11.8)	임금 빈곤층	3,074 (9,824)	328 (847)	10.7 (8.6)													
일용직	449 (1,262)	166 (396)	37.0 (31.4)																	
공공근로	41 (91)	26 (52)	63.4 (57.1)																	
고용주	145 (508)	10 (28)	6.9 (5.5)																	
지영업자	1,076 (2,527)	470 (921)	43.7 (36.4)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481 (951)	39.4 (31.3)													
무급 가족조사	1 (2)	1 (2)	100.0 (100.0)																	
실업자	114 (277)	61 (139)	53.5 (50.2)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166 (1,774)	71.3 (66.5)													
비경활	1,522 (2,392)	1,105 (1,635)	72.6 (68.4)																	
합계	5,932 (15,530)	1,975 (3,572)	33.3 (23.0)	합계	5,932 (15,530)	1,975 (3,572)	33.3 (23.0)	합계	5,932 (15,530)	1,975 (3,572)	33.3 (23.0)	합계	5,932 (15,530)	1,975 (3,572)	33.3 (23.0)	합계	5,932 (15,530)	1,975 (3,572)	33.3 (23.0)	합계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21〉 가치분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5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1,587 (5,390)	57 (155)	3.6 (2.9)	임금 빈곤층	3,013 (9,514)	401 (1,034)	13.3 (10.9)	취업 빈곤층	4,355 (13,090)	1,064 (2,519)	24.4 (19.2)	경제활 동 빈곤층	4,549 (13,539)	1,198 (2,827)	26.3 (20.9)							
임시직	880 (2,751)	136 (377)	15.5 (13.7)																			
일용직	491 (1,373)	208 (502)	42.4 (36.6)																			
공공근로 응급근로	55 (138)	36 (87)	65.5 (63.0)																			
고용주	80 (274)	9 (23)	11.3 (8.4)																			
자영업자	1,257 (3,293)	650 (1,457)	51.7 (44.2)	비임금 빈곤층	1,342 (3,576)	663 (1,485)	49.4 (41.5)															
무급 가족종사	5 (9)	4 (5)	80.0 (55.6)																			
실업자	194 (449)	134 (308)	69.1 (68.6)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73 (1,928)	74.4 (70.8)	미취업 빈곤층	1,576 (2,724)	1,173 (1,928)	74.4 (70.8)											
비경활	1,382 (2,275)	1,039 (1,620)	75.2 (71.2)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합계	5,931 (15,952)	2,273 (4,534)	38.3 (28.4)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22〉 기저분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6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상용직	2,164 (7,229)	91 (288)	4.2 (4.0)																
임시직	426 (1,300)	86 (230)	20.2 (17.7)	임금 빈곤층	3,110 (9,936)	414 (1,071)	13.3 (10.8)												
일용직	460 (1,261)	198 (463)	43.0 (36.7)																
공공근로	60 (146)	39 (90)	65.0 (61.6)					취업 빈곤층	4,369 (13,270)	922 (2,185)	21.1 (16.5)					4,535 (13,644)	1,025 (2,404)	22.6 (17.6)	
고용주	124 (433)	6 (21)	4.8 (4.8)																
지영업자	1,133 (2,895)	501 (1,090)	44.2 (37.7)	비임금 빈곤층	1,259 (3,334)	508 (1,114)	40.3 (33.4)												
무급 가족종사	2 (6)	1 (3)	50.0 (50.0)																
실업자	166 (374)	103 (219)	62.0 (58.6)	미취업 빈곤층	1,562 (2,619)	1,124 (1,748)	72.0 (66.7)	미취업 빈곤층					1,562 (2,619)	1,124 (1,748)	72.0 (66.7)				
비경활	1,396 (2,245)	1,021 (1,529)	73.1 (68.1)																
합계	5,931 (15,889)	2,046 (3,933)	34.5 (24.8)	합계	5,931 (15,889)	2,046 (3,933)	34.5 (24.8)	합계	5,931 (15,889)	2,046 (3,933)	34.5 (24.8)	합계	5,931 (15,889)	2,046 (3,933)	34.5 (24.8)	5,931 (15,889)	2,046 (3,933)	34.5 (24.8)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부표 24〉 가치분석소득 근로빈곤층 현황 : 2008년 상대빈곤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총위	총수	빈곤층	빈곤율
상용직	1,875 (6,327)	45 (147)	2.4 (2.3)												
임시직	709 (2,144)	90 (246)	12.7 (11.5)	임금 빈곤층	3,074 (9,824)	324 (833)	10.5 (8.5)								
일용직	449 (1,262)	164 (392)	36.5 (31.1)												
공공근로	41 (91)	25 (48)	61.0 (52.7)					취업 빈곤층	4,296 (12,861)	802 (1,776)	18.7 (13.8)	경계할 등 빈곤층	4,410 (13,138)	863 (1,915)	19.6 (14.6)
고용주	145 (508)	10 (28)	6.9 (5.5)												
지영업자	1,076 (2,527)	467 (913)	43.4 (36.1)	비임금 빈곤층	1,222 (3,037)	478 (943)	39.1 (31.1)								
무급 가족종사	1 (2)	1 (2)	100.0 (100.0)												
실업자	114 (277)	61 (139)	53.5 (50.2)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162 (1,764)	71.0 (66.1)	미취업 빈곤층	1,636 (2,669)	1,162 (1,764)	71.0 (66.1)	비경활 빈곤층	1,522 (2,392)	1,101 (1,625)	72.3 (67.9)
비경활	1,522 (2,392)	1,101 (1,625)	72.3 (67.9)					합계	5,932 (15,530)	1,964 (3,540)	33.1 (22.8)	합계	5,932 (15,530)	1,964 (3,540)	33.1 (22.8)
합계	5,932 (15,530)	1,964 (3,540)	33.1 (22.8)												

주: 숫자는 가구에 대한 결과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살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산물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재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제정과 계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7,000원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애·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6,000원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개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10,000원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성-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12,000원

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10,000원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11,000원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6,000원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9,000원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5,000원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5,000원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7,000원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8,000원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16,000원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의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태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태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경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산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정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정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